NABO 지역인구전망:2026~2045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총 괄 |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 조정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홍 지 은 경제분석관

작 성 |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홍 지 은 경제분석관
김 상 용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한 승 룡 경제분석관
백 기 홍 경제분석관

지 원 | 성 혜 정 행정실무원
강 태 용 자료분석연구원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출생·사망·국내이동·국제이동 등 주요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를 전망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지역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2026.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1. 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전국 총인구 규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이미 서로 다른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이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유출과 자연감소가 중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시점과 속도 뿐 아니라 고령화의 수준과 진행 양상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변화는 앞으로 중요한 전환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국내 인구이동 등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쳐 왔다면, 향후 20년간 다수 지역의 인구변화를 이끄는 힘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인구 유입을 늘리거나 유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와 재정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수요의 변화, 인구밀도 하락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상승, 내·외국인 구성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발간한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여,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출생·사망·국내이동·국제이동 등 주요 인구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7개 시도의 장래 인구 규모와 구조를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지역인구전망이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정책수요와 재정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정책 논의 전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신 우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요 약

Ⅰ. 개요

1. 지역인구전망의 의의

❑ **인구전망은 장래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

- ㅇ 인구는 노동력·생산·소비·저축·조세·복지 등 거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장기 인구전망은 중장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함
- ㅇ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점과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인구전망의 중요성이 증대
  -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노동공급, 교육·의료돌봄 등 공공서비스 수요, 지방재정 및 사회기반시설의 활용과 연계하여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NABO 지역인구전망의 주요 전제 및 특징

❑ **2025년을 기준으로 2045년까지 17개 시도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전망**

- ㅇ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전국 인구전망의 기본 경로로 활용
- ㅇ 기준년도를 최신화하고 최근 출생·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요인별 추세와 현행성을 고려

❑ **NABO 지역인구전망은 지역별 내·외국인 인구를 구분하여 전망**

- ㅇ 총인구뿐 아니라 내국인·외국인을 별도 추정하여 1세 단위 인구(stock), 인구이동(flow)을 산출

❑ **연말인구 전망을 통해 재정·경제 통계의 회계기간과 인구통계를 일치**

- ㅇ 재정·비용 추계의 활용성을 위해 연간 회계기준을 적용한 연말인구(end-year population) 전망을 시도별로 제공
  - 학교 배치, 보육·돌봄, 사회보험 가입자 수 등의 추계 시 이용 가능

II. 지역인구 동향

1. 지역별 인구 및 인구 증감

❑ **전국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정체된 가운데, 지역별 인구변화는 국내이동과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차별화**

- ㅇ 전국 총인구는 2015년 5,107만명에서 2025년 5,18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대체로 정체
  - 2020~2025년 내국인 인구는 42.5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41.3만명 증가하여 총인구는 1.2만명 감소
- ㅇ 2015~2025년 17개 시도 중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강원·제주 등 7개 지역은 총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 등 10개 지역은 감소
  - 경기의 인구 증가 규모는 전국 증가 규모를 상회하였으며, 서울은 가장 큰 감소 규모 기록
  - 최근 강원·제주가 인구감소로 전환되고 전남은 외국인 인구증가에 힘입어 총인구가 소폭 증가

❑ **지역별 인구증감에서 국내이동과 외국인 인구변화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인구와 총인구의 변화가 차별화**

- ㅇ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 순유입이 인구증가를 뒷받침한 반면, 상당수 비수도권에서는 자연감소와 국내 순유출이 중첩
- ㅇ 외국인 인구증가는 일부 지역의 내국인 감소를 상쇄하거나 총인구 감소를 완화
  -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총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지역이 나타남

2. 인구변동요인별 동향

가. 출생

❑ 최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있으나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축소

- ○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한 후 2025년 0.8명으로 상승
  - 출생아 수는 2015년 43.8만명에서 2023년 23.0만명으로 감소한 뒤 2025년 25.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의 약 58% 수준
- ○ 서울 등 대도시는 출산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도 지역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높은 특성
  - 2025년 경기·서울·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국의 54.4%를 차지한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출생아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나. 사망

❑ 연령별 사망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 수는 증가

- ○ 전국 사망자 수는 2015년 27.6만명에서 2025년 36.3만명으로 31.6% 증가
  - 85세 이상 사망자 수는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중 85세 이상 비중은 24.5%에서 37.6%로 상승
- ○ 같은 기간 조사망률은 상승한 반면, 연령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하락
  - 사망자 수 증가가 고령인구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연령별 사망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 지역별 사망수준은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차이가 크며, 연령표준화 이후에는 지역 간 격차가 축소

- ○ 전남·경북·전북 등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음
  - 지역별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을 비교할 때 연령구조와 연령별 사망위험을 구분할 필요

다. 국내이동

❑ 전국 시도 간 인구이동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별·연령별 이동 특성은 차별화

- ○ 전국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15년 255.1만명에서 2025년 218.6만명으로 14.3% 감소
  - 시도 간 이동률은 같은 기간 4.96%에서 4.27%로 하락
- ○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축소되고 인천·대전은 순유입으로 전환된 반면, 강원·제주는 최근 순유출로 전환
- ○ 20대 청년층은 일부 수도권·충청권으로 순유입되는 반면, 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순유출되는 경향
  - 50~60대는 광역시에서 순유출되고 도 지역으로 순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별 이동 방향이 상이

라. 외국인

❑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증가세 확대

- ○ 전국 외국인 인구는 2015년 136.4만명에서 2025년 210.9만명으로 증가
  - 외국인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15년 62.9%에서 2025년 56.4%로 하락
- ○ 코로나19 이후 비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
  - 2025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충남 6.6%, 충북 5.0%, 경기 4.9%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산업구조와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인 인구의 구성이 상이

- ○ 전남·경남 등에서는 취업자격 외국인 비중이 높고, 대전·부산 등에서는 유학생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국적동포는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
  - 지역별 외국인 인구변화를 파악할 때 외국인의 규모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연령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

Ⅲ.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1. 지역별 인구 및 인구증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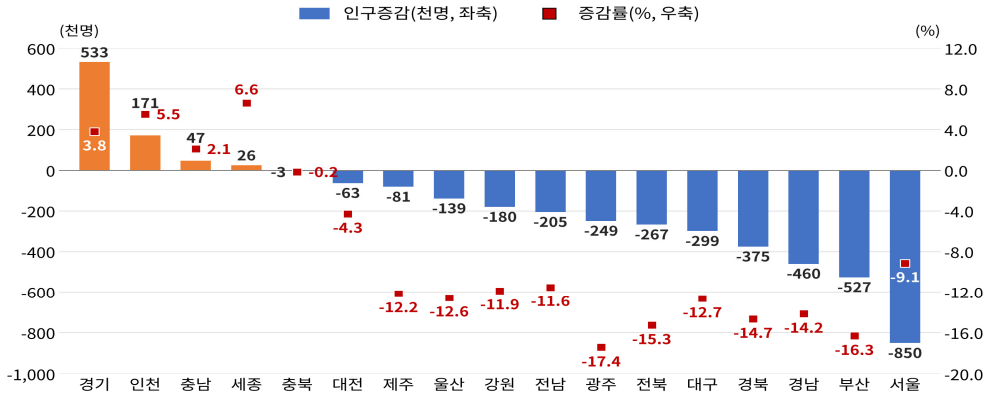
❑ **전국 총인구는 2045년 4,884만명으로 2025년 대비 292만명(5.6%) 감소할 전망**

- ○ 전국 총인구는 2025년 말 5,176.2만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2029년부터 감소하여 2045년 말 4,884.0만명에 이를 전망
- ○ 17개 시도 중 인천·세종·경기·충남은 2045년 인구가 2025년보다 많은 반면, 광주·부산·전북·경북·경남 등은 큰 폭으로 감소
  - 2025~2045년 인구증가율은 세종 6.6%, 인천 5.5%, 경기 3.8%, 충남 2.1%
  - 인구감소율은 광주 17.4%, 부산 16.3%, 전북 15.3%, 경북 14.7%, 경남 14.2%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대부분 전망기간 중 정점에 도달하는 등 지역별 인구감소의 시점과 속도에 차이**

- ○ 대전은 2030년, 충북은 2034년, 충남은 2036년, 세종은 2037년, 경기는 2039년, 인천은 2040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 일부 지역은 2045년 인구가 2025년보다 많더라도 전망기간 후반에는 인구감소가 진행

[지역별 2025년 대비 2045년 총인구 증감]



주: 2025년 말 NABO 기준인구 대비 2045년 말 전망인구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도권 인구 감소에도 비수도권의 더 빠른 감소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상승**

- 2025~2045년 수도권의 전국 인구 비중은 2025년 50.9%에서 2045년 53.7%로 2.8%p 상승
  - 수도권 인구는 0.6%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0.9% 감소
-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빠른 인구감소에 의해서도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

❑ **지역 인구변동의 주된 요인은 국내이동에서 자연감소로 변화할 전망**

-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가 누적되면서 지역별 인구증감에서 자연감소의 영향이 확대
  - 전국의 연간 자연감소 규모는 2026년 약 8만명에서 2045년 약 38만명으로 확대될 전망
- 자연감소와 국내 순이동·외국인 인구변화가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지역별 인구변동요인은 차별화
  - 서울·부산·대구 등은 자연감소와 국내 순유출이 중첩되면서 인구감소 지속
  - 경기·인천·충남·충북 등은 국내 순유입과 외국인 구 증가가 자연감소를 일부 상쇄하지만, 자연감소 확대로 전망기간 중 인구감소로 전환될 전망
  - 강원·전남·경북 등은 자연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사회적 증가가 인구감소폭을 완화할 전망

2. 인구변동요인 전망

가. 출생

❑ **2027년 전국 출생아 수는 약 29.6만명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45년 약 20.6만명에 이를 전망**

- 2045년 합계출산율은 전남 1.24명, 세종 1.17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은 0.76명으로 가장 낮을 전망
  - 출산율이 일정 수준 회복되더라도 과거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가임여성 인구 축소가 출생 규모를 제약

나. 사망

❑ 인구고령화로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 전국 사망자 수는 2026년 36.5만명에서 2045년 58.8만명으로 61.2% 증가하며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7.0명에서 12.0명으로 상승
  - 2026~2045년의 지역별 사망자 수 증가율은 울산, 경기, 인천, 대전이 72.1~94.3%로 높고 전남, 전북, 경북, 강원이 18.6~44.0%로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
- ○ 지역별 조사망률은 2026년 전남이 가장 높지만, 2045년에는 경북이 인구 1,000명당 16.0명으로 가장 높을 전망
  - 부산·울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전남 등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도 지역보다 조사망률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비중 확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임

다. 국내이동

❑ 시도 간 인구이동 규모는 감소하나 지역별 순이동의 기본 구조는 유지

- ○ 전국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25년 218.6만명에서 2045년 136.4만명으로 감소하며 시도 간 이동률은 같은 기간 4.27%에서 2.78%로 하락
  -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이동 규모 축소에 영향
- ○ 경기·인천·충남·충북의 순유입은 대체로 유지되는 반면, 서울과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순유출이 지속될 전망
  - 전체 이동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별 순이동 규모도 대체로 감소
- ○ 지역별 인구이동의 방향이 유지되더라도 인구증감에 미치는 국내이동의 상대적 영향은 자연감소보다 작아질 전망

라. 외국인

❑ 전국 외국인 인구는 2045년 약 344만명으로 증가하고 총인구 대비 비중은 7.0%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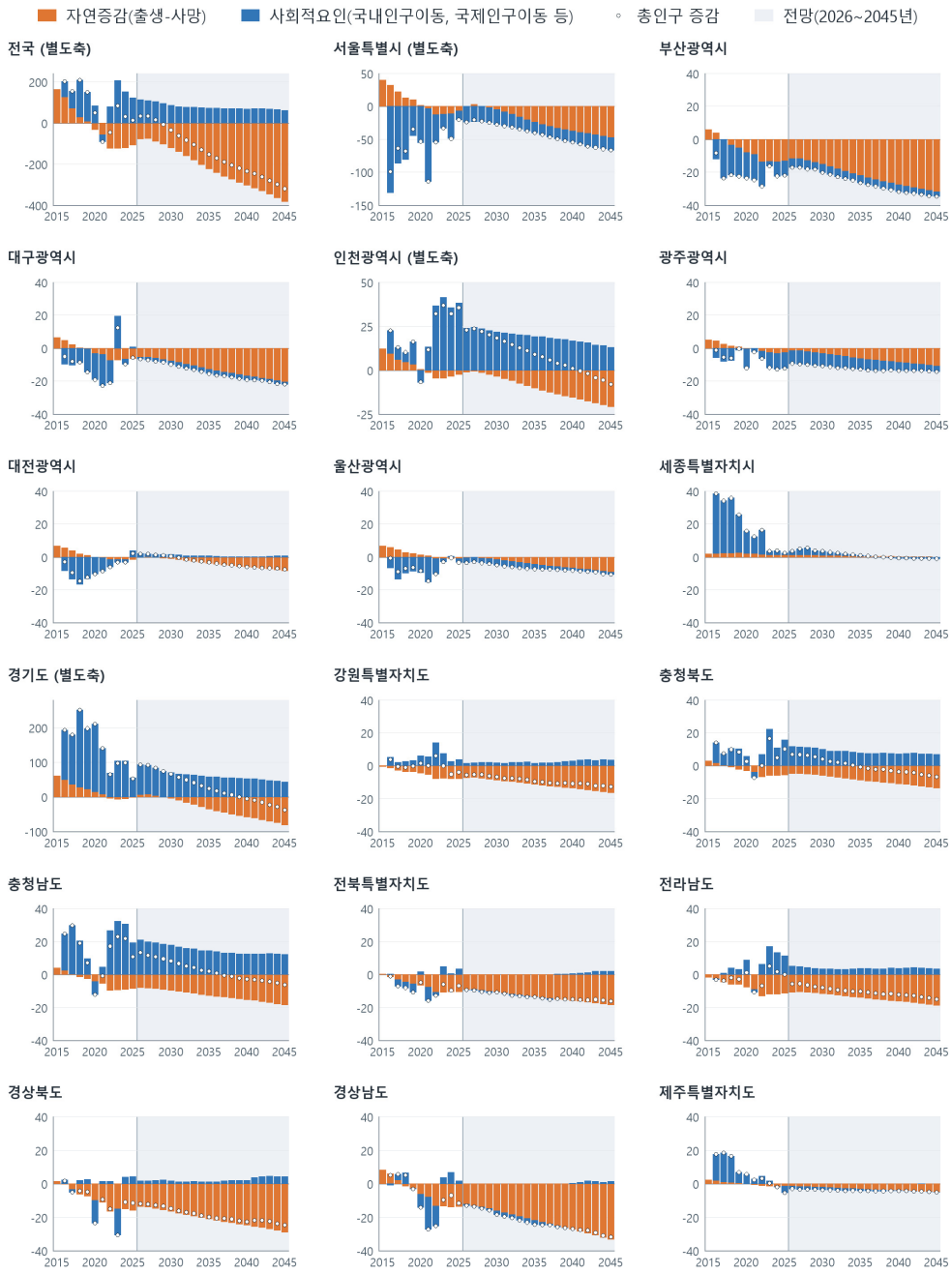
- ○ 전국 외국인 인구는 2026년 약 218만명에서 2045년 약 344만명으로 증가
-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높아 2045년에는 비수도권 외국인 인구가 수도권을 상회할 전망
  - 2045년 외국인 인구는 비수도권 약 175만명, 수도권 약 169만명

❑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등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가 확대

- ○ 2045년 지역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전남, 충남, 경북, 충북 등에서 높게 나타날 전망
- ○ 충남·충북 등에서는 외국인 인구증가가 내국인 감소를 일부 상쇄하면서 총인구 감소를 완화
  -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지역별 인구 규모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NABO 지역인구전망: 지역별 인구 증감 요인]

(단위: 천명)



주: 1) 2015~2025년 실적의 자연증감은 인구동향조사의 내국인 출생아 수-사망자 수
2) 2026~2045년 자연증감은 내·외국인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이며, 사회적 요인은 총인구 증감에서 자연증감을 제한 값으로 시도간 순이동과 외국인 국제순이동 등을 반영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3. 지역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하락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상승할 전망

- ○ 전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69.2%에서 2045년 55.3%로 13.9%p하락
  -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에서 37.8%로 17.1%p 상승
- ○ 2045년 강원·경북·전북·전남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0% 미만으로 하락
  - 경북·강원·전북·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44%를 상회할 전망

❑ 고령화의 현재 수준과 향후 진행 속도는 지역별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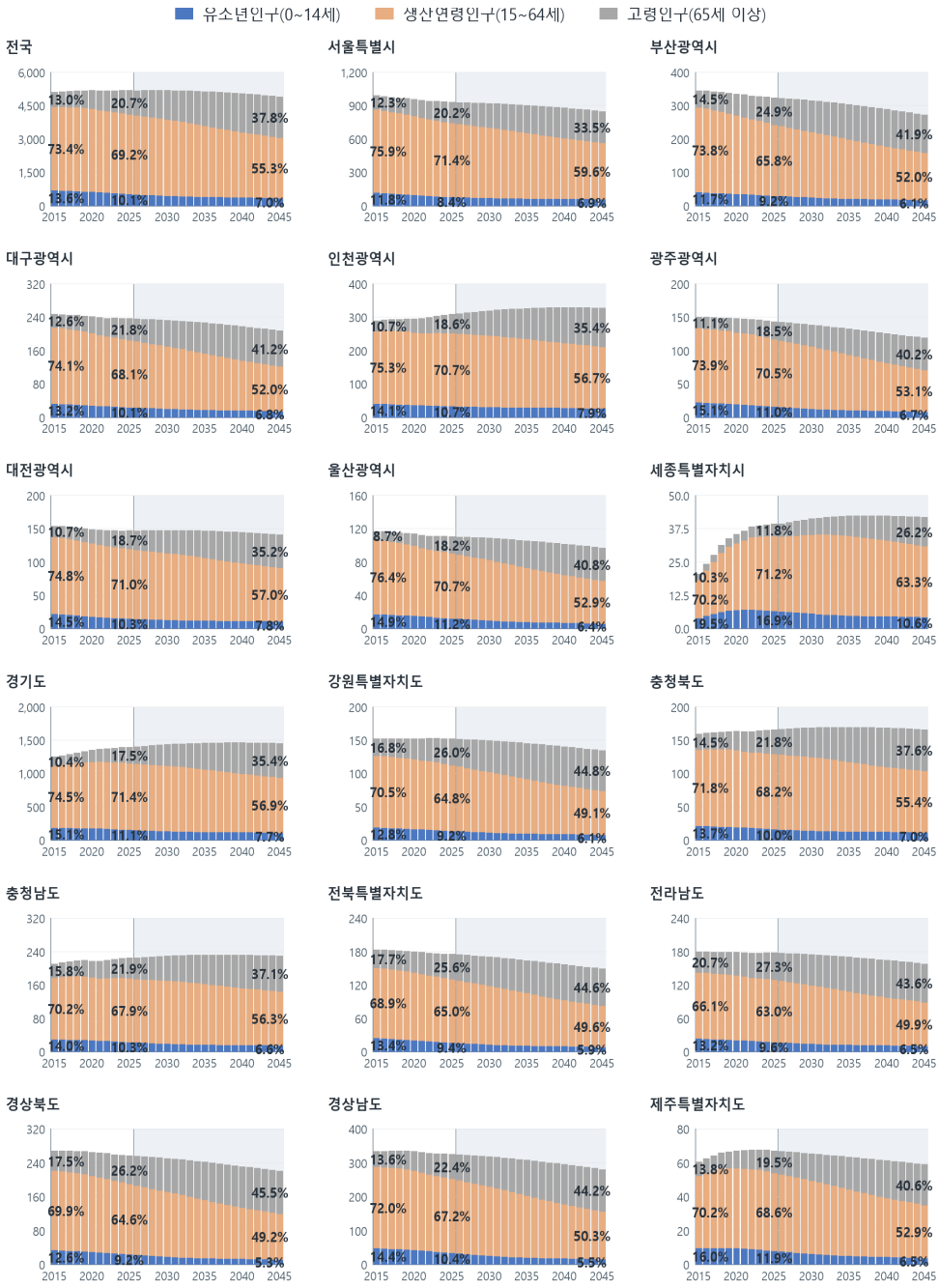
- ○ 경북·강원·전북 등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반면, 울산·광주·경남 등은 향후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
  - 울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18.2%에서 2045년 40.8%로, 광주는 18.5%에서 40.2%로 상승
- ○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과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생산연령인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할 전망

- ○ 전국 내국인 인구는 2025년 대비 2045년 430.7만명 감소하여 약 4,540만명에 이를 전망
  - 내국인만 보면 경북·전남·전북·경남·강원 등에서는 2040년대에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상회하는 시점이 나타날 전망
- ○ 외국인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아 지역별 총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비중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45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3.8%로 전망

[NABO 지역인구전망: 지역별 총인구 및 연령구조]

(단위: 만명)



주: 2015~2025년은 인구총조사, 2026~2045년은 연앙인구 기준 NABO 지역인구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Ⅳ.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인구전망의 주요 결과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점과 속도로 진행되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전망**

- 인천·세종·경기·충남 등은 2045년 인구가 2025년보다 많지만 전망기간 중 인구감소로 전환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5년 50.9%에서 2045년 53.7%로 상승

❑ **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은 국내 순유출에서 자연감소로 변화**

- 국내이동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누적되어, 인구유입 확대나 유출 억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 **외국인 인구증가는 일부 지역의 내국인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연령인구의 규모와 구조에도 영향**

-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비수도권에서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주거·교육·보건 등 생활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검토 필요

2. 정책적 시사점

❑ **지역별 인구변화의 시점과 속도, 연령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과 재정투입의 방향을 차별화할 필요**

- 인구증가기에 형성된 공공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체계는 장래 인구규모와 수요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필수서비스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의 공동활용·기능 재편·재배치 등을 검토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향후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 **총인구 감소가 공공서비스 수요나 재정지출의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장기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고정비용 발생
  - 인구밀도 하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 증가로 1인당 공급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 ○ 공공시설 투자와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 장래 인구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률, 기존 시설의 공급능력, 접근성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인구감소기에 필요한 정책 대응은 공공서비스의 일률적인 축소보다 지역별 장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체계의 재설계**

- ○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확충·유지·기능전환·재배치·공동활용 등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검토
  - 지역별 장래 이용률과 서비스 접근성,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생애주기 비용 등을 고려한 투자·운영계획 필요

❑ **지역인구전망을 분야별 공공서비스 및 재정지출 자료와 연계하여 중장기 재정수요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이번 전망은 출생·사망·인구이동에 대한 기본 전망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정책 변화의 효과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변화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인구이동은 산업·고용, 교통망, 주택공급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이 큼
- ○ 따라서 전망 결과는 개별 지역의 확정적인 미래 인구 예측이 아닌 일정한 전제에 따른 장기 기준 경로로 이해할 필요
  - 기관별 인구전망은 작성목적·기초자료·전망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전망의 전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필요

〈용어 정리〉

| 인구 |

- **총인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포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은 제외.
- **연말인구:**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인구
- **연앙인구:** 해당 연도 중간시점(7월1일)의 인구로,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의 산술평균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서 기준 시점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

| 인구 구조 |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유소년인구는 0~14세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 출생 · 사망 |

-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조출생률 · 조사망률:**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
- **인구 자연증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

| 인구이동 |

- **이동자 수:** 대한민국 국민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전입신고서에 근거해 집계한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전입, 특정 지역에서 나가면 전출로 구분.
- **순이동:**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
- **순유입**: 한 지역의 시도 간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은 경우
- **순유출**: 한 지역의 시도 간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많은 경우
- **이동률**: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 (시도간 이동 기준)

차 례

[제Ⅰ부 서론]

제1장 지역인구전망의 의의 및 필요성 ····· 1

제2장 전망의 주요 전제 및 특징 ····· 3

제1절 주요 전제 및 특징 ····· 3

제2절 주요 전망 방법 ····· 5

[제Ⅱ부 지역인구 동향]

제1장 인구 동향 ····· 11

제1절 지역 인구 ····· 11

제2절 지역별 인구증감 요인 ····· 13

제2장 인구변동요인 ····· 15

제1절 출생 ····· 15

제2절 사망 ····· 22

제3절 국내이동 ····· 27

제4절 외국인 ····· 35

[제Ⅲ부 NABO 지역인구전망(2026~2045)]

제1장 지역인구 ····· 43

제1절 지역별 인구 ····· 43

제2절 지역별 인구증감 요인 ····· 47

제2장 인구변동요인 ····· 50
제1절 출생 ····· 50
제2절 사망 ····· 56
제3절 국내이동 ····· 61
제4절 외국인 인구 ····· 65

제3장 지역 인구 및 인구구조 ····· 67
제1절 인구구조 ····· 67
제2절 내국인 인구 ····· 70
제3절 외국인 인구 ····· 73

[제Ⅳ부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1장 지역인구전망의 주요 결과 ····· 79

제2장 정책적 시사점 ····· 81

[부록: NABO 전망 방법론]
제1절 출생 ····· 89
제2절 사망 ····· 91
제3절 국내이동 ····· 95
제4절 외국인 ····· 100

[부록: NABO 지역인구전망 통계표(2026~2045)]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 105

표 차례

[표 Ⅱ-1] 외국인 인구 규모 및 비중 ····· 36
[표 Ⅱ-2] 2025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 ····· 39
[표 Ⅲ-1] 지역별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 ····· 46
[부록 표-1]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 105
[부록 표-2]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서울특별시) ····· 106
[부록 표-3]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부산광역시) ····· 106
[부록 표-4]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대구광역시) ····· 107
[부록 표-5]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인천광역시) ····· 107
[부록 표-6]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광주광역시) ····· 108
[부록 표-7]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대전광역시) ····· 108
[부록 표-8]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울산광역시) ····· 109
[부록 표-9]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세종특별자치시) ····· 109
[부록 표-10]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기도) ····· 110
[부록 표-11]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강원특별자치도) ···· 110
[부록 표-12]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충청북도) ····· 111
[부록 표-13]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충청남도) ····· 111
[부록 표-14]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전북특별자치도) ···· 112
[부록 표-15]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전라남도) ····· 112
[부록 표-16]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상북도) ····· 113
[부록 표-17]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상남도) ····· 113
[부록 표-18]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제주특별자치도) ···· 114

그림 차례

[그림 Ⅰ-1] NABO지역인구전망 모형 구조도 ····· 5
[그림 Ⅱ-1] 지역별 총인구·내국인 인구 추이(2015~2025년) ····· 12
[그림 Ⅱ-2] 지역별 인구증감 3요인 분해(2000~2025) ····· 14
[그림 Ⅱ-3]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 ····· 15
[그림 Ⅱ-4] 전국 출생아 수 추이 ····· 15
[그림 Ⅱ-5]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 17
[그림 Ⅱ-6] 2015~2025년간 합계출산율 감소 ····· 18
[그림 Ⅱ-7] 2023~2025년간 합계출산율 반등 ····· 18
[그림 Ⅱ-8] 전국 연령별 출산율 변화 ····· 19
[그림 Ⅱ-9]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 추이 ····· 21
[그림 Ⅱ-10] 전국 사망자 수 및 연령대별 사망자 수 추이 ····· 22
[그림 Ⅱ-11] 2025년 지역별 연령대별 사망자 수 ····· 23
[그림 Ⅱ-12] 전국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 24
[그림 Ⅱ-13] 지역별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 25
[그림 Ⅱ-14] 연령별 사망률 ····· 26
[그림 Ⅱ-15] 시도간 이동 규모 및 이동률 추이 ····· 28
[그림 Ⅱ-16] 지역별 순이동 추이 ····· 31
[그림 Ⅱ-17] 연령별 순이동 추이 ····· 34
[그림 Ⅱ-18] 외국인 인구 추이 ····· 35
[그림 Ⅱ-19] 체류자격별 현황 ····· 37
[그림 Ⅱ-20] 지역별 외국인 체류자격별 비중(2025년) ····· 38
[그림 Ⅱ-21]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규모 및 산업별 구성 ····· 39
[그림 Ⅲ-1] 지역별 총인구 전망 ····· 45
[그림 Ⅲ-2] 지역별 인구 증감 요인 ····· 49

[그림 Ⅲ-3] 지역별 합계출산율 전망 ····· 52
[그림 Ⅲ-4] 지역별 출생아 수 전망 ····· 55
[그림 Ⅲ-5] 조사망률 전망(2025년, 2035년, 2045년) ····· 57
[그림 Ⅲ-6] 사망자 수 전망 ····· 58
[그림 Ⅲ-7] 전국 및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 전망(50세 이상) ····· 60
[그림 Ⅲ-8] 지역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전망 ····· 61
[그림 Ⅲ-9] 지역별 순이동 전망 ····· 63
[그림 Ⅲ-10] 지역별 순이동률 ····· 64
[그림 Ⅲ-11] 지역별 외국인 인구 규모 전망 ····· 66
[그림 Ⅲ-12] 지역별 총인구 및 연령구조 ····· 68
[그림 Ⅲ-13] 지역별 총인구 정점 ····· 69
[그림 Ⅲ-14] 지역별 내국인 인구 및 연령구조 ····· 71
[그림 Ⅲ-15] 지역별 내국인 인구정점 ····· 72
[그림 Ⅲ-16] 지역별 외국인 인구 및 연령구조 ····· 74
[부록 그림-1] 사망 전망 모형 구조도 ····· 92
[부록 그림-2]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 증감률(2015년 대비 2025년) ····· 94
[부록 그림-3] 국내이동 전망 모형 구조도 ····· 95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I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 론

제1장 지역인구전망의 의의 및 필요성

인구변화는 지역의 경제·사회 구조와 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양상과 속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이동과 국제이동이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인구전망만으로는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유출과 출생아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연령인구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인구변화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만 아니라 연령구조의 변화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역 간 인구이동은 개별 지역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인구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지역 노동공급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와 돌봄 등 복지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교육시설과 관련 재정수요를 변화시키고,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주거·교통·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과 세출 수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인구전망은 중장기 재정운용과 지역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지역인구전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제도와 교육·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가 된다. 향후 지역별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재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인구변화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역균형발전, 공공서비스 공급 등 주요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1~2040)」를 발표한 이후 단기 인구전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25년에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 인구변화를 전망한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발표하였다. 이번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는 전국 단위 인구전망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시도별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의 중장기 변화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인구변화의 공통적인 흐름과 함께 지역별 인구변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인구전망은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 입법·재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지역별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수요 분석과 정책영향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지역인구전망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간 재정수요의 변화와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 전망의 주요 전제 및 특징

제1절 주요 전제 및 특징

「NABO 지역인구전망」의 주요 전제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전망은 「NABO 인구전망: 2025~2045」(이하 NABO(2025))를 기본 경로로 활용하되, 인구변동요인별 최근 실적과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단기조정을 반영한다. NABO(2025)의 중장기 전망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망 이후 새롭게 확인된 인구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출생은 2025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실적, 최근 혼인 및 출생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기 전망경로를 조정하고, 사망은 2025년 사망 실적과 최근 사망률 변화 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단기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중장기 전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망기간과 범위는 2026년에서 2045년까지이며, 17개 시도의 인구규모와 구조이다.[1] 기초인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출생·사망·인구이동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인구뿐만 아니라 성별·각세별 인구를 산출하여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진행 양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별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반영하여 시도별 인구의 자연증감을 전망한다. 출생은 전국의 연령별 출산율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출산 수준과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시도별 출생아 수를 산출한다. 사망은 전국의 성별·연령별 사망률 전망과 지역별 사망률의 수준 및 변화 추세를 연계하여 시도별 사망률을 전망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의 공통적인 흐름과 지역별 출생·사망 특성에 따른 인구변화의 차이를 함께 반영한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나, 본 전망은 기준연도인 2025년의 행정구역 체계를 적용하여 광주와 전남을 각각 별도의 전망단위로 유지하였다.

넷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지역별 인구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인구변화와 지역경제 여건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국내 인구이동은 전국 인구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별 인구의 증감과 연령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청년층의 이동은 지역의 노동공급과 향후 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지역별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임금·고용·소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고, 인구변화가 다시 지역경제 여건과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관계를 반영하여 지역별 인구변화의 차이를 전망한다.

다섯째,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전망한다. 외국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내국인 인구 감소를 상쇄하여 총인구 감소를 지연시키거나 감소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연령구조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와 고령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외국인 인구를 별도로 전망하여 내·외국인의 인구변화를 구분하고,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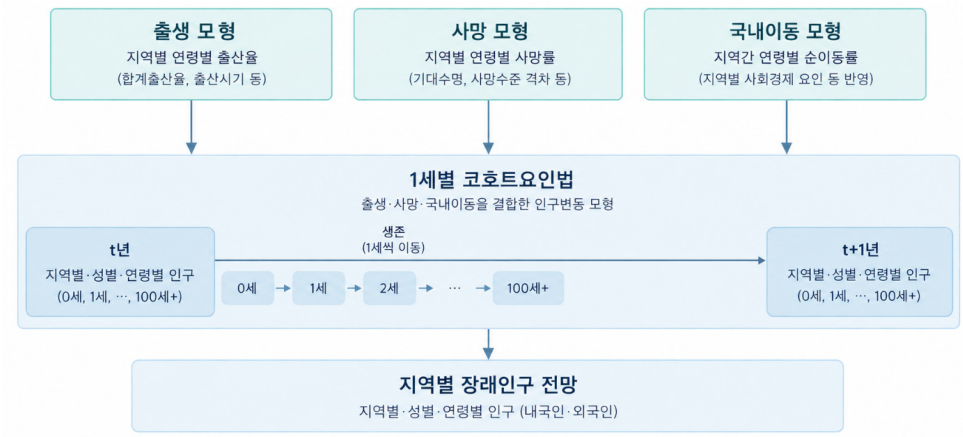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와 연말인구(end-year population)를 함께 산출하여 인구전망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인다. 2025년 연말인구를 기준으로 매년 연말인구를 전망하고, 전년 말과 당년 말 인구의 평균으로 연앙인구를 산출한다. 연앙인구는 연중 평균적인 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변동 지표와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지표의 산출에 활용된다. 반면 연말인구는 해당 연도 말의 인구 규모를 나타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과 일치하므로 결산 등 연도 말 기준 통계와 연계한 분석에 유용하다. 특히 지방재정과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및 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두 기준의 전망 결과를 함께 제공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절 주요 전망 방법[2)]

「NABO 지역인구전망」은 17개 시도의 성별·연령별 인구에 출생·사망·국내이동에 따른 인구변동을 매년 반영하는 1세별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2045년까지 지역별 인구를 전망한다.

출생은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을 가임여성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망은 성별·연령별 사망률과 지역별 사망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국내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의 기존 패턴과 임금·고용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결합하여 지역별 순이동인구를 전망한다. 이러한 인구변동 요인을 기초인구에 적용하여 매년 생존인구가 한 살씩 증가하고, 출생아가 0세 인구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다음 연도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산출한다. 이때 전국 인구전망은 NABO(2025)를 기본 경로로 하되 최근 출생·사망 실적을 고려한 단기조정을 반영하며, 17개 시도 전망의 합계가 전국 전망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외국인 인구는 별도로 전망하여 내국인 인구와 합산함으로써 지역별 총인구를 산출한다.

[그림 Ⅰ-1] NABO지역인구전망 모형 구조도



주: 외국인 인구는 별도 모형으로 전망하며, 내국인 인구와 합산하여 지역별 총인구를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각 요인별 전망방법은 부록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1. 출생

지역별 출산율 전망은 2027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진료비 지원사업 자료를 활용하고, 2028년~2045년에는 전국과 지역의 출산율 추세를 바탕으로 한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장기 전망에서는 지역별 출산율이 현실적인 범위에서 추정될 수 있도록 곰핏(Gompertz) 변환을 활용하였다. 이는 출산율의 누적 추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환하여, 단순한 추세 연장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전망치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과 지역 간 출산율 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1999~2024년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연령별 출산율을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출산 동향이 전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연도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 사망

지역별 사망률은 NABO(2025)의 성·연령별 사망률을 기준 경로로 삼고, 지역별 사망수준과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지역격차와 변화추세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2022년을 제외한 2015~2019년과 2023~2025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연령별 평활화와 추세조정을 통해 일시적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시도별 사망률의 인구가중 평균이 전국 전망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기준년도 조정에 따라 최근 실적을 단기 조정으로 반영하였다.

3. 국내이동

국내이동 전망은 지역 간 이동 결정식으로 지역쌍별 이동자수를 산출하고, 이를 전국 시도간 이동 총량에 맞추어 확정한 뒤 지역별 전입과 전출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동 결정식은 두 지역 간 이동량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지역 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중력모형을 따른다. 성·연령집단별 이동자수는 출발지·도착지의 전년도 인구와, 임금·고용률·1인당 소비의 지역 간 격차로 설명한다. 인구 규모와 경제격차에 대한 반응은 연령집단별로 달리 추정하여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층과 그 밖의 연령층의 차이를 반영한다. 거리·생활권 등 지역쌍 고유의 이동 비용과 지역별·연령별 유

출입 성향은 고정효과로 통제한다. 산출된 이동자수는 성·연령별 전국 시도간 이동 총량에 맞도록 비례조정하여 확정한다.

여기에 인구이동과 지역 노동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노동시장 피드백을 반영한다. 인구증가율이 지역별 임금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데, 인구증가율은 임금·고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동과 함께 결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쓰면 내생성 문제가 생긴다. 이에 10년 전 지역 연령구조가 전국 평균 수준의 코호트 변화를 겪었을 경우의 예상 인구, 즉 지역 간 이동의 영향을 배제한 인구증가율을 도구변수로 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한다. 전망기간에는 출생·사망·국제이동과 확정 이동자수로 갱신된 지역별 인구증가율을 이 식에 넣어 지역별 임금과 고용률을 산출한다. 이를 지역 간 격차로 변환하여 다음 연도 이동 결정식에 투입함으로써 인구 변화가 경제격차를 거쳐 다시 인구이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4. 외국인

외국인 인구는 전국의 성·연령별 외국인 인구를 먼저 전망한 뒤 이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기본적으로 NABO(2025)의 전망치를 준용하되 2025~2026년 실적치 및 출산·사망률 수정 등을 반영한 미세조정을 가하였다.

지역별 외국인 인구는 30세를 전후한 연령대별로 전망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는 매년 순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주축이 30세 이하 청년층임을 고려해서다. 30세 이하의 경우, 2023~2025년 기간 중 전국의 30세 이하 외국인 순증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3]을 2026년 이후 전국의 30세 이하 외국인 순증에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이는 매년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의 국내 17개 지역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이들에 대한 각 지역의 상대적 수용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 31세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동일 지역 동일 코호트의 전년도 인구가 일정 비율로 잔류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하였다.

3) 동 비중은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3~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II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지역인구 동향

제1장 인구 동향

제1절 지역 인구

- **전국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정체된 가운데, **지역별 총인구**는 내국인 인구증감과 외국인 증가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
  - 2015~2025년 경기·인천·세종 등 7개 시도는 총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

2015~2025년 전국 총인구는 5,106.9만명에서 5,181.7만명으로 74.8만명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대체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0~2025년 내국인 인구는 42.5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41.3만명 증가하여 총인구는 1.2만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3%에서 2025년 4.1%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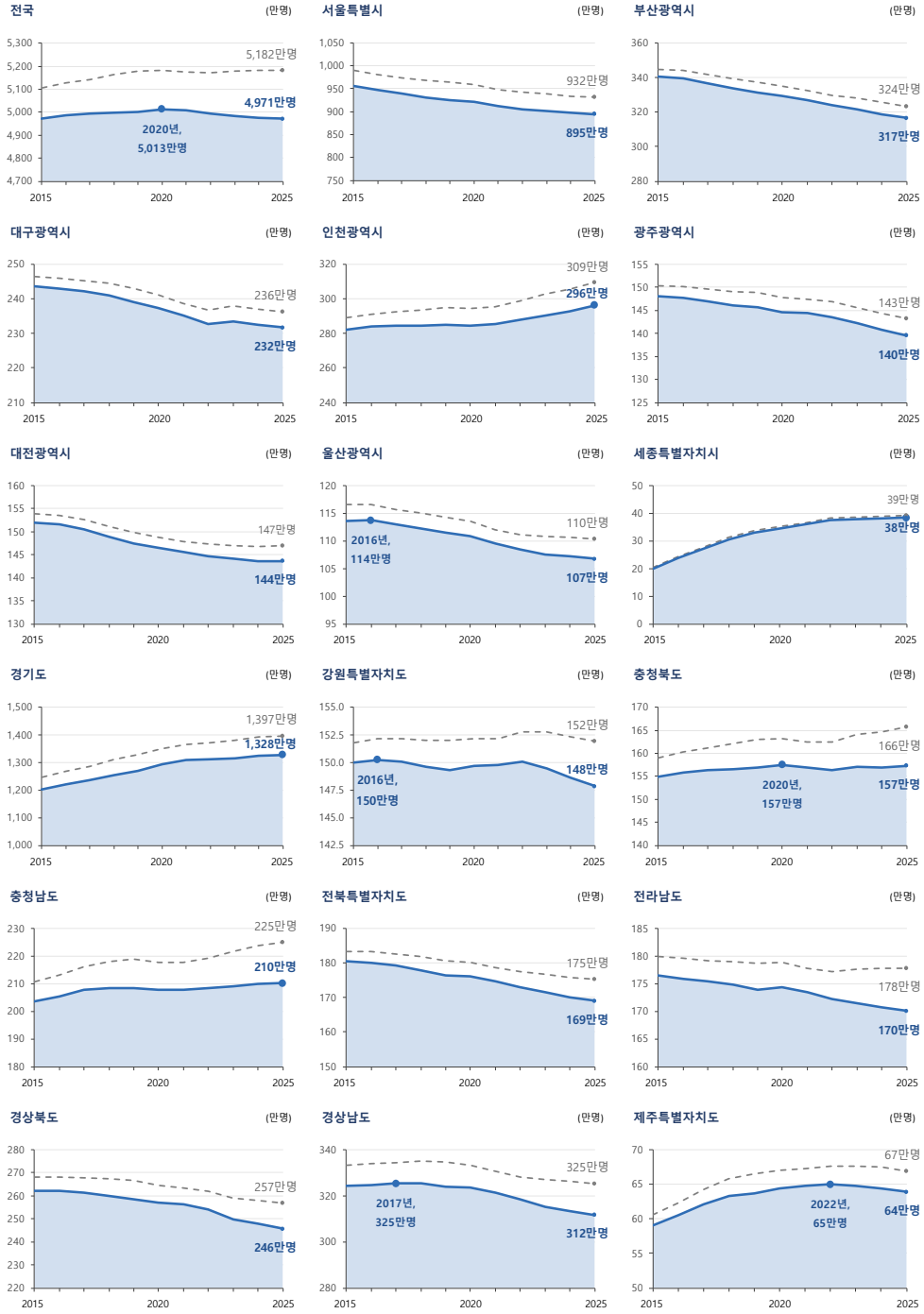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2015~2025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총인구가 증가한 반면, 10개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총인구 증가 지역은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강원·제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경기의 인구 증가 규모(148.9만명)는 전국 총인구 증가 규모(74.8만명)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세종은 같은 기간 인구가 약 2배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인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요 대도시와 영·호남권 지역에서는 총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58.9만명이 감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부산도 21.3만명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장기적인 인구증감과 다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2015년 대비 2025년 총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각각 2022년과 2023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대로 전남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총인구가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역별 총인구의 변화는 내국인 인구의 증감과 외국인 인구 증가가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그림 Ⅱ-1] 지역별 총인구·내국인 인구 추이(2015~2025년)



주: 실선은 내국인, 점선은 총인구(외국인 포함)를 의미하며, 내국인 인구의 정점을 연도와 함께 표시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제2절 지역별 인구증감 요인

● **지역별 인구증감**은 국내이동과 외국인 인구변화에 따라 차별화
  -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은 순유입이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는 반면,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자연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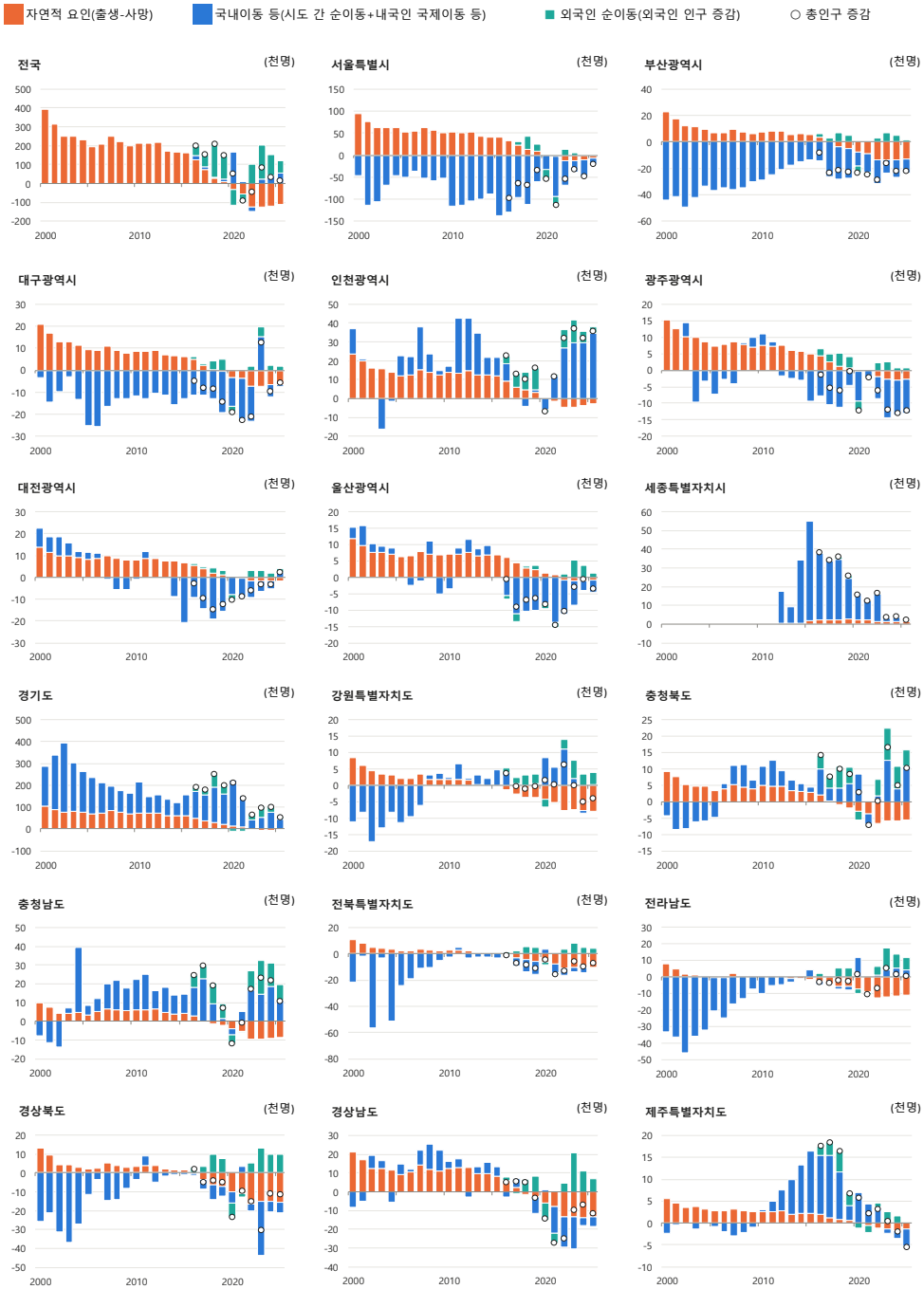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가 진행되면서 자연증감은 202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다. 자연감소 규모는 2022년 12.4만명까지 확대된 이후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도 10.9만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내국인의 시도 간 이동이 지역별 인구증감의 차이를 크게 좌우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연감소가 다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순이동과 자연감소가 맞물려 지역별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거나 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인구 변화의 방향과 규모가 더해지면서 지역별 총인구 증감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내 순유입이 자연감소를 상쇄하거나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는 지역과 자연감소 및 순유출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기와 세종은 2015~2025년 국내 순유입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반면, 충북과 충남은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순유입과 외국인 인구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총인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부산과 경남 등은 자연감소와 국내 순유출이 함께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다. 서울은 장기적으로 국내 순유출이 인구 감소를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연감소도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 요인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인구 증가는 지역별 인구변화의 차이를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충북·충남 등에서는 외국인 인구 증가가 자연감소를 상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전남은 내국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총인구 감소가 완화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자연감소와 국내 순유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총인구 감소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지역별 총인구 변화는 자연감소의 진행 정도와 국내 순이동의 방향, 외국인 인구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그림 Ⅱ-2] 지역별 인구증감 3요인 분해(2000~2025)



주: 자연증감과 시도간 이동은 내국인의 연간 변동이며, 총인구 및 외국인 인구증감은 인구총조사 기준시점(11월 1일)간의 변동임. 자료별 기준기간과 집계대상이 다른 통계를 이용하여 주요 인구 변동요인의 추이를 제시한 것으로, 인구 균형식에 따른 엄밀한 요인분해를 의미하지 않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제2장 인구변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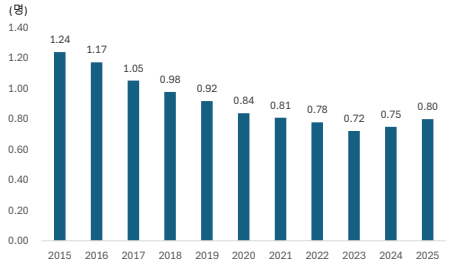
제1절 출생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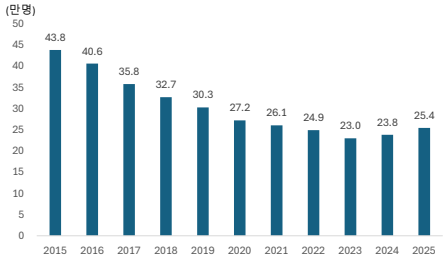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4]은 2024년부터 반등하였으나 지역별로 출산연령과 증가 폭에 차이
- **출생아 수**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5년 전국 출생아 수의 54.4%를 차지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0.52명 하락하였으며,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을 기록하였다. 2015~2023년 매년 하락한 것과 달리 최근 2년간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출산율 하락 추세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2025년 합계출산율은 2015년보다 0.44명 낮아, 최근 반등에도 장기적인 하락 폭은 상당하다.

[그림 Ⅱ-3]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Ⅱ-4] 전국 출생아 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4)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15~49세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전국 출생아 수도 합계출산율과 유사하게 2015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국 출생아 수는 2015년 43.84만명에서 2023년 23.00만명으로 20.84만명 감소했으나, 2024년 23.83만명, 2025년 25.4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출생아 수는 2023년보다 약 10.6% 늘었지만, 2015년의 약 58%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최근의 증가세만으로 과거의 감소분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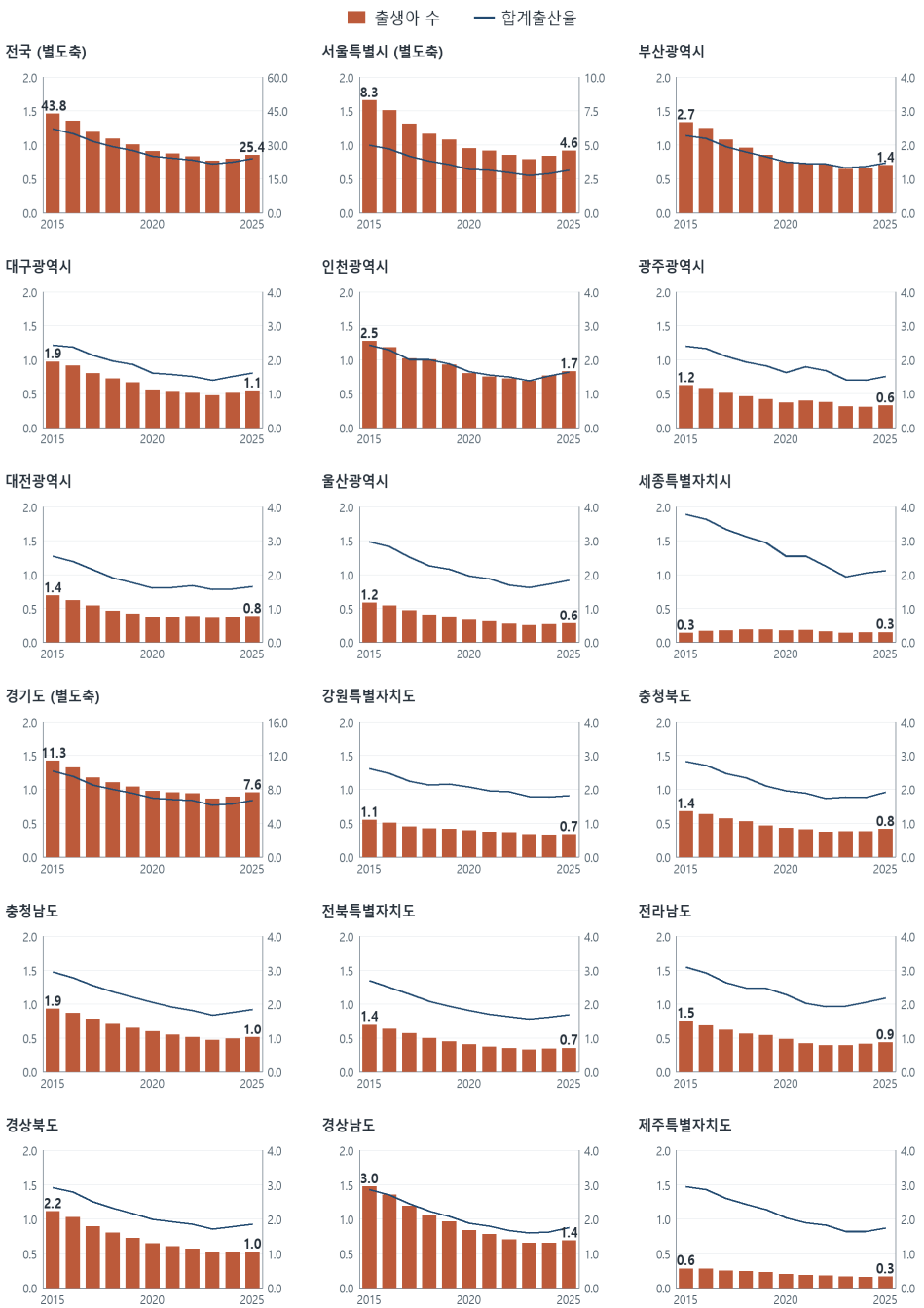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부산도 0.74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과 세종은 각각 1.09명, 1.0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원(0.91명), 충북(0.96명), 충남(0.92명)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3년 이후 대부분의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으며, 특히 전남은 2023년 0.97명에서 2025년 1.09명으로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82명, 0.84명으로 전국 평균(0.80명)을 웃돌았다. 다만 서울과 부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출산율 격차가 나타났다.

2015~2025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80명으로 하락했으며, 서울은 1.00명에서 0.63명으로, 부산은 1.14명에서 0.74명으로, 광주는 1.21명에서 0.76명으로 낮아졌다. 세종과 전남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반등해 2025년 각각 1.06명, 1.09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대부분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모든 시·도가 2015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15~2025년 출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출생아 수는 43.84만 명에서 25.43만 명으로 약 42.0% 감소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각각 45.2%, 35.0%, 32.8% 감소했다. 광주와 전북의 감소율도 각각 47.8%, 50.0%로 높았다. 반면 세종은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0.27만 명에서 0.30만 명으로 약 9.1% 증가했다. 또한 2023~2025년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과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대부분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과 전남은 각각 21.4%, 11.4%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강원은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대체로 정체되는 등 시·도별 회복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했음에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15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림 Ⅱ-5]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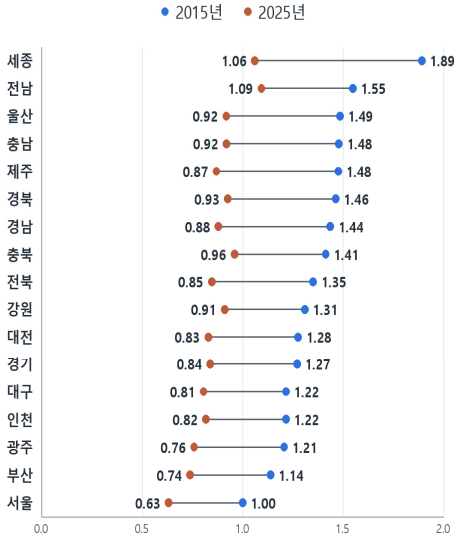
(단위: 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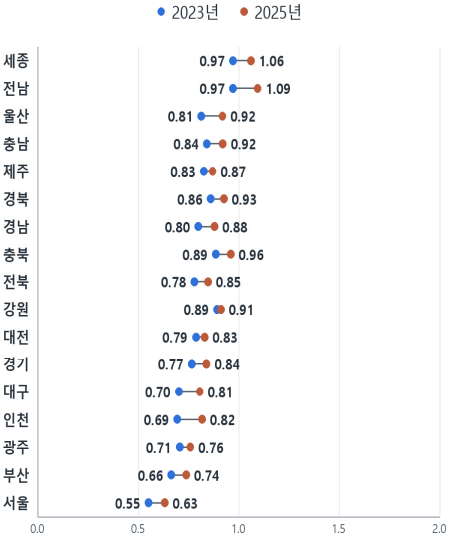
주: 전국, 서울, 경기의 출생아 수는 별도축을 적용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반드시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025년 경기·서울·인천의 출생아 수 합계는 약 13.84만명으로 전국의 54.4%를 차지한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출생아 수는 약 0.87만명에 그쳤다.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인구 규모가 커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뿐 아니라 전체 인구와 가임기 여성의 규모 및 연령 구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가임기 여성 인구가 감소하면 출생아 수의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출산 현황과 향후 변화를 파악할 때는 합계출산율을 통해 출산 수준을, 출생아 수를 통해 실제 출생 규모와 장기적인 감소 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Ⅱ-6] 2015~2025년간 합계출산율 감소



[그림 Ⅱ-7] 2023~2025년간 합계출산율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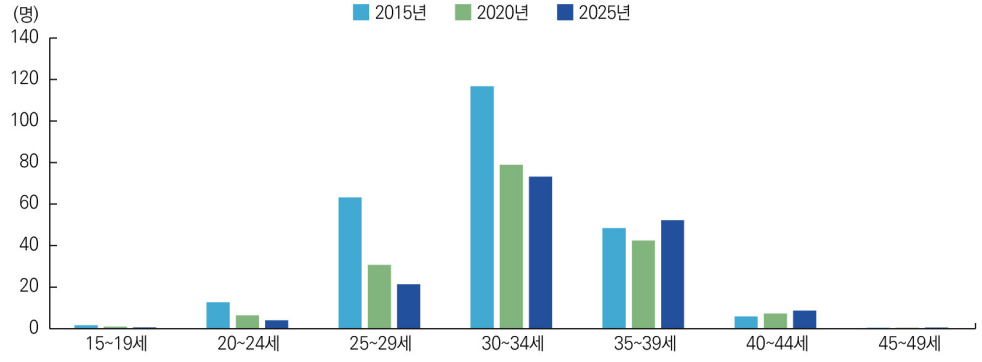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 연령별 출산율

- **연령별 출산율**[5]은 2015~2025년 대부분 시·도에서 30대 초반 중심의 출산 구조가 유지된 가운데, 세종·울산·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30대 초반을 비롯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냄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20대 이하에서 하락하고 30대 후반과 40대에서 상승하는 등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전국의 25~29세 출산율은 2015년 63.1명에서 2025년 21.2명으로 하락하였으며, 30~34세 출산율도 같은 기간 116.7명에서 73.1명으로 낮아졌다. 반면 35~39세 출산율은 48.3명에서 52.1명으로 상승하였고, 40~44세 출산율도 5.6명에서 8.5명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30~34세 출산율이 35~39세의 약 2.4배였으나, 2025년에는 약 1.4배로 축소되었다. 특히 2025년에는 35~39세 출산율이 25~29세 출산율의 약 2.5배에 달해 출산이 30대 후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이후에도 이어져 2020~2025년 동안 25~29세 출산율은 30.6명에서 21.2명으로 하락한 반면, 35~39세 출산율은 42.3명에서 52.1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Ⅱ-8] 전국 연령별 출산율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5)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연령대 여성의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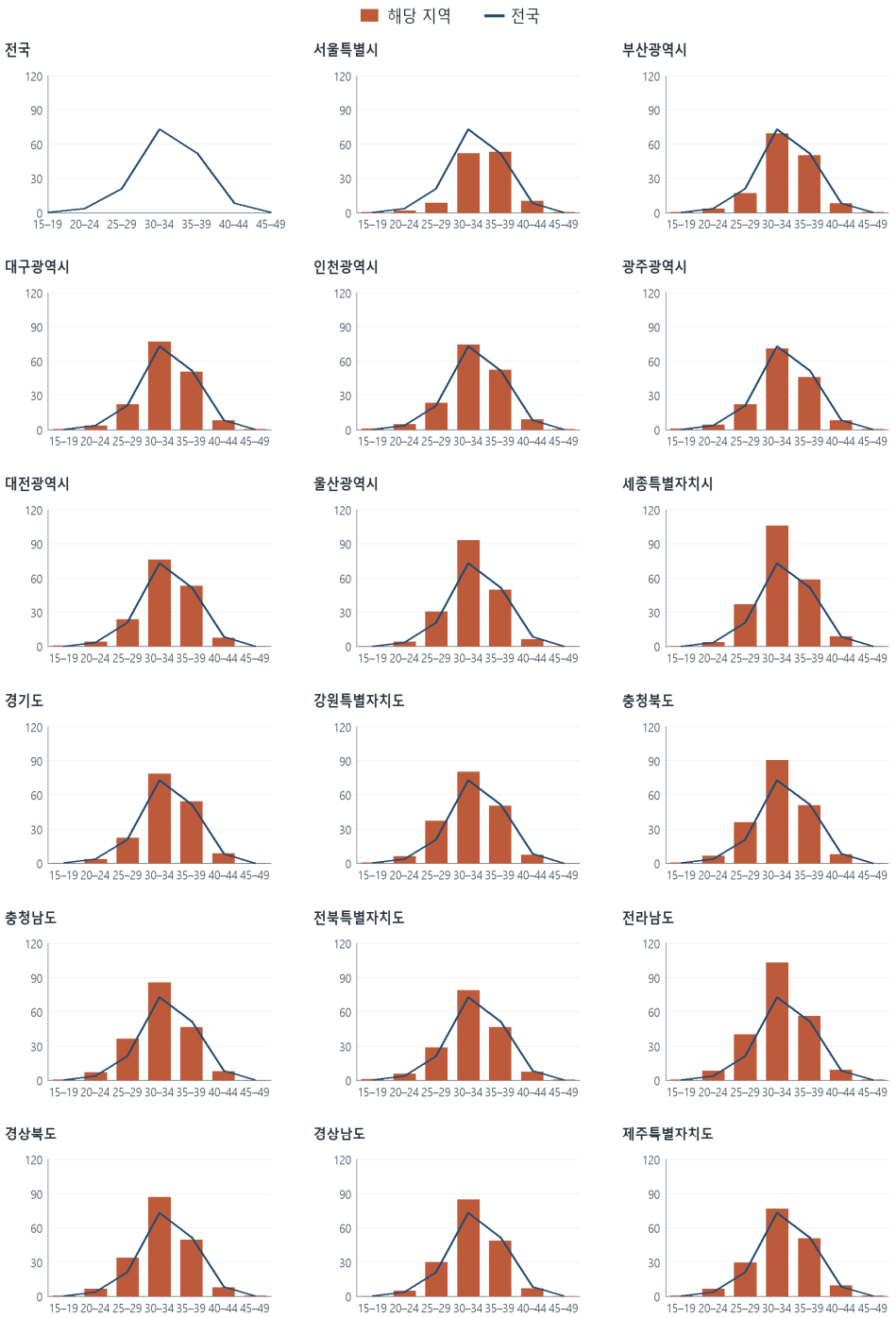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국과 비슷한 반면, 30대 출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서울은 2025년 25~29세 출산율이 8.5명으로 전국(2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35~39세 출산율은 53.2명으로 30~34세(51.9명)보다 높았다. 부산도 25~29세 출산율이 16.9명으로 전국보다 낮았으며, 대구·인천·광주·대전은 21.9~23.8명으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울산은 25~29세 출산율이 30.3명, 30~34세가 93.1명으로 전국(각각 21.2명, 73.1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세종도 각각 36.9명, 105.9명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5~39세 출산율은 서울·대전이 53.2명, 인천이 52.1명으로 전국과 비슷하거나 높았으며, 세종은 58.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특별시 및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출산이 3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은 30대 후반까지 출산이 이어지는 반면 울산과 세종은 20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높은 등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도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이 많으며, 일부 지역은 30대 초반 출산율도 높은 특징을 보인다. 2025년 25~29세 출산율은 전남 40.3명, 강원 37.0명, 충남 36.3명, 충북 36.0명, 경북 33.5명으로 전국(21.2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전남은 전국의 약 1.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0~34세 출산율도 전남 103.0명, 충북 90.2명, 경북 86.7명, 충남 85.7명, 경남 84.9명으로 전국(73.1명)을 웃돌았다. 경기도 역시 30~34세 출산율이 78.4명으로 전국보다 높았다. 반면 전북은 25~29세 출산율이 28.6명으로 높은 편이나, 30~34세는 78.8명으로 전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35~39세 출산율은 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전남은 56.5명으로 전국(52.1명)을 웃돌았으며, 경기도도 54.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충북(50.6명), 강원(50.3명), 경북(49.6명), 경남(48.6명), 충남(46.4명), 전북(46.7명)은 전국보다 낮았다. 제주는 25~29세와 30~34세 출산율이 각각 29.3명, 76.6명으로 전국보다 높았으며, 40~44세와 45~49세 출산율도 각각 9.3명, 0.5명으로 전국(8.5명, 0.3명)을 웃돌았다. 이는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까지 출산이 이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도별로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많지만, 30대 후반 이후 출산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 출산 연령 구조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Ⅱ-9]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 추이

(단위: 해당 연령 여성 천명당 명)



주: 가로축은 모의 연령대이며, 전국 연령별 출산율은 선으로 표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2절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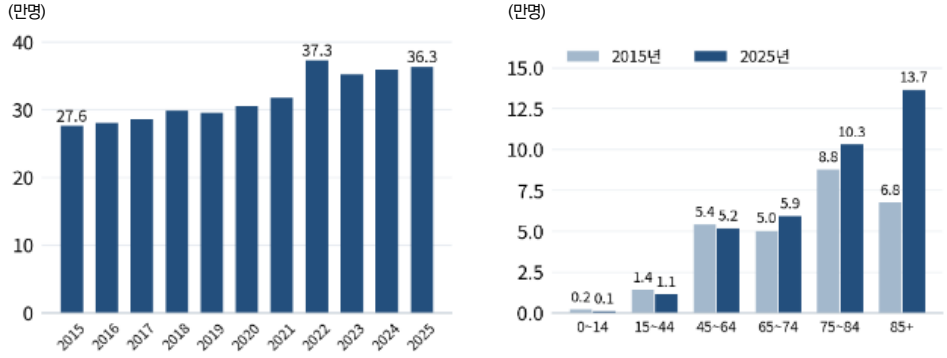
1. 사망자 수

- **사망자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중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2015~2025년 전국 사망자수 31.6% 증가, 85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13.1%p 상승

2025년 전국 사망자 수는 36.3만명으로 2015년(27.6만명)보다 31.6%, 2024년(35.9만명)보다는 1.2% 증가하였다. 사망자 수는 2022년 37.3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3년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4세 이하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증가하였다. 특히 85세 이상 사망자 수는 6.8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사망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75~84세 사망자 수도 8.8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 중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4.5%에서 2025년 37.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 사망자 수 증가분은 전체 사망자 수 증가분의 79.2%를 차지하였다.

[그림 Ⅱ-10] 전국 사망자 수 및 연령대별 사망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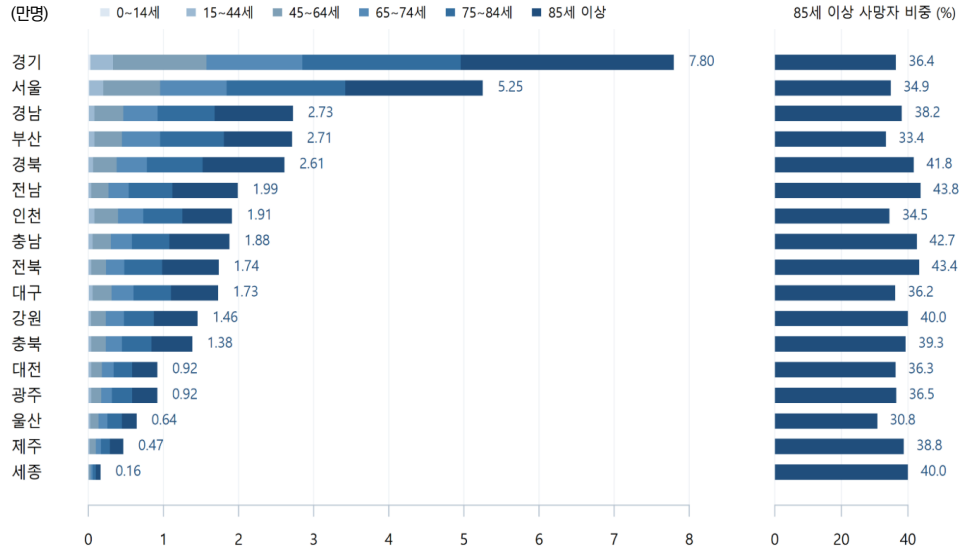


주: 전국 사망자 수는 연령미상을 포함하며, 연령대별 집계와 구성비는 연령미상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2025년 시도별 사망자 수는 경기(7만 7,976명), 서울(5만 2,535명), 경남(2만 7,252명), 부산(2만 7,137명), 경북(2만 6,126명) 순으로 많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국 사망자의 41.2%를 차지하였다. 한편, 지역별 전체 사망자 중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43.8%), 전북(43.4%), 충남(42.7%), 경북(41.8%) 등에서 높은 반면, 울산(30.8%), 부산(33.4%), 인천(34.5%), 서울(34.9%)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Ⅱ-11] 2025년 지역별 연령대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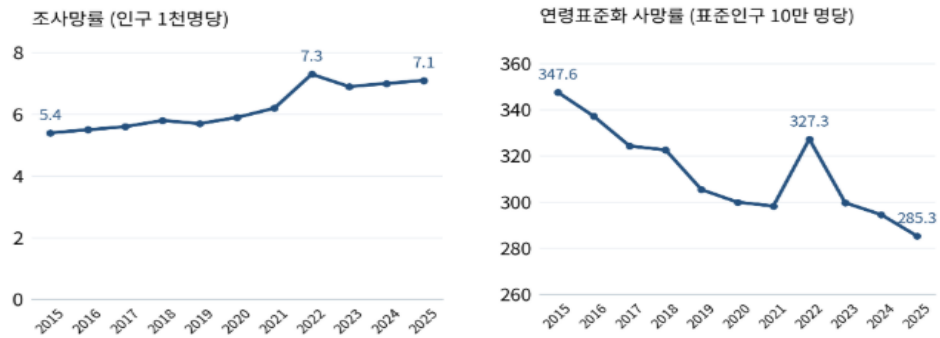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 사망률

- **조사망률**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상승하고 있으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하락하고 지역 간 격차도 축소
  - 2025년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은 전국 7.1명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11.2명), 경북(10.4명), 전북(10.1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국 조사망률은 2025년 인구 1천 명당 7.1명으로 2015년 5.4명에서 상승하였다. 반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같은 기간 표준인구 10만명당 285.3명으로 347.6명에서 17.9% 하락하였다[6]. 이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조사망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연령구조의 영향을 통제한 사망률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12] 전국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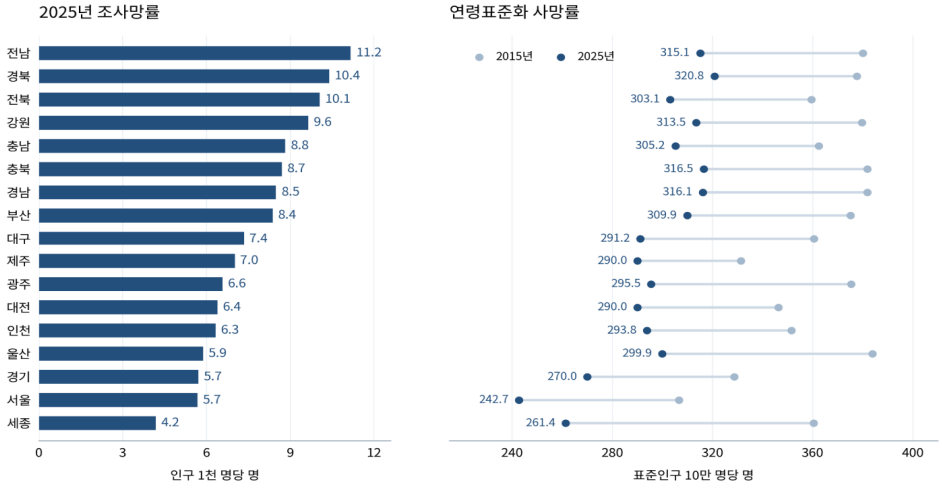
주: 조사망률은 인구 1천명 당 사망자 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표준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로 두 지표의 단위와 축 범위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2025년 지역별 조사망률은 전남이 인구 1천명당 11.2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10.4명, 전북 10.1명, 강원 9.6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은 4.2명으로 가장 낮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5.7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 간 조사망률의 차이에는 연령구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6)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수로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면 연령별 사망률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으며,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각 연령의 사망률에 동일한 표준인구의 연령구성비를 적용하므로, 연령구조 차이를 통제한 사망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연령구조의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역 간 격차가 조사망률보다 작게 나타났다. 2025년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조사망률이 2.7배인 반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3배로 줄어든다. 다만 울산·인천·광주·대전은 상대적으로 연령구조가 젊어 조사망률은 낮지만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28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조사망률의 차이가 연령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연령구조를 고려한 이후에도 지역 간 사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흡연 등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자원,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7].

[그림 Ⅱ-13] 지역별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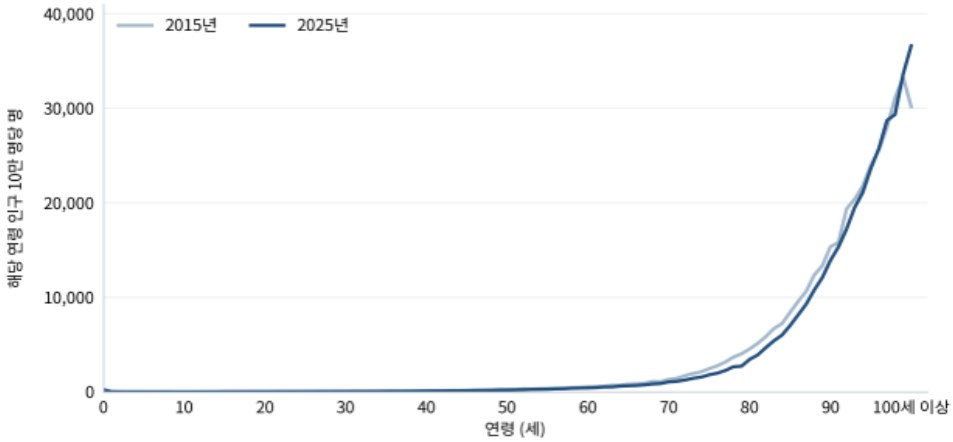
2015~2025년의 연령별 사망률[8]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령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65~79세 구간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65~69세,

7) 장인수, "한국의 사망률과 지역 특성 간 연관성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과 함의", 통계연구 제30권 제1호, 2025; Koh et al, "Associa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 Supply with Population Mortality in South Korea: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024; 45(2):105-115

8) 연령별 사망률은 해당 연령의 사망자 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그림은 전국 남녀 합계의 0~99세를 1세별로 표시하고, 100세 이상을 하나의 개방연령구간으로 제시하였다.

70~74세, 75~79세 사망률은 각각 20.8%, 26.6%, 28.8% 하락하였다. 다만 10~14세와 15~19세에서는 각각 11.3%, 16.0%, 100세 이상에서는 21.3% 상승하였다.[9)]

[그림 Ⅱ-14] 연령별 사망률



주: 연령별 사망률은 해당 연령 인구 대비 연간 사망자 수로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은 서울·경기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일부 도 지역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40~44세, 65~69세, 85~89세 사망률이 전국보다 14~18% 낮았으며, 경기의 연령별 사망률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국보다 낮았다. 반면 40~44세 사망률은 강원·경북·전남·충남 등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도 지역의 85~89세 사망률은 전국의 약 99~109% 수준으로, 상대적 격차가 작았다. 이처럼 지역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징은 2015~2025년 기간 중 대체로 유지되었다.

9)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율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연령의 사망률 수준과 인구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망률이 낮은 연령대에서는 작은 절대 변화도 큰 증가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국내이동

1. 이동규모와 이동률

- **시도간 이동자 수**[10]는 2015~2025년간 약 14.3% 감소하였으며 2022년 큰 폭의 감소 후 저점을 유지
- **시도간 이동률**[11]은 2022년 이후로 4.2%대 유지

시도간 이동자 수는 2015년 255.1만명에서 2025년 218.6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6.6만명, 14.3%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약 27.4만명 감소한 217.4만명으로 11.2% 가량 급감하여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214.3만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5년까지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이 작아 2021년 이전 규모와는 격차가 크다. 이동자 수는 매년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재분배되는 인구의 절대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후 회복이 더딘 것은 이동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 변동의 총량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도간 이동률은 2015년 5.0%에서 2025년 4.3%로 0.7%p 하락하였다. 이동률 또한 2021년 4.7%에서 2022년 4.2%로 전년대비 0.5%p 떨어져 이동자 수와 같은 시점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4.2%로 최저치를 기록한뒤 2024년 4.2%, 2025년 4.3%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2019년보다도 0.3%p 가량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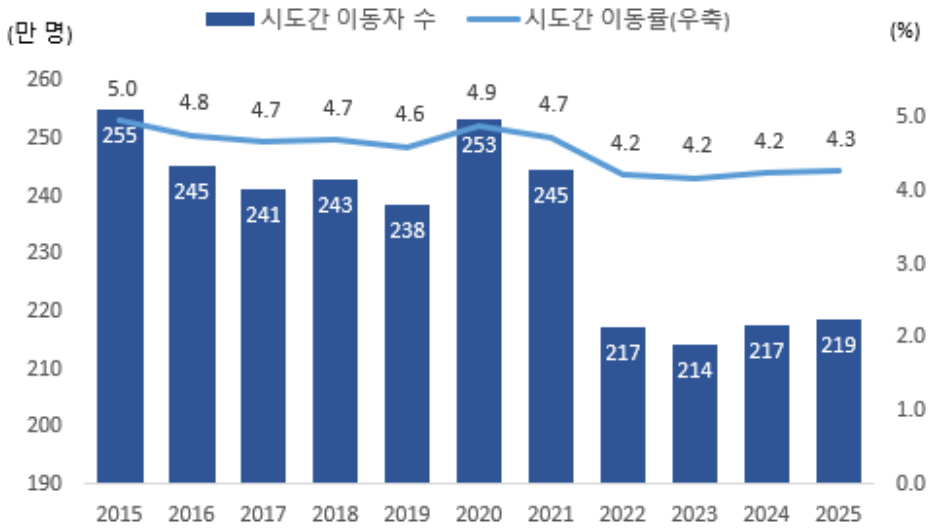
이동률은 한 해동안의 시도 간 이동자 수를 지역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이동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동자 수와 이동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인구의 이동 성향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다. 이동률은 이동자 수를 인구 규모로 나누어 산출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의 변화가 이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제거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동률이 이동자 수와 함께 하락했다는 것은 같은 인구 규모를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10) 시도간 이동은 시도간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시도간 이동자수는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를 합하여 계산한다. 전국 기준으로 시도 간 전입자 수의 합과 전출자 수의 합은 일치한다.
11) 시도간 이동률은 연앙인구 대비 시도간 이동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준으로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구의 연령 구성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이동률은 연령 구조를 계산에 고려하지 않은 값이므로 이동이 가장 활발한 2~30대 인구의 비중이 줄고 이동 성향이 평균적으로 낮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전체 이동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두 해석은 서로 다른 경로로 같은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Ⅱ-15] 시도간 이동 규모 및 이동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 지역별 순유입·순유출[12)]

가. 순유입·순유출 추이

- **순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은 인천·경기·충북·충남이며, 대전·전남은 2025년 순유입으로 전환
- **순유출**이 축소되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울산·전북
- **순유출**이 확대 및 유지되는 지역은 광주·경북·경남이며, 강원·제주는 2023년, 세종은 2025년 순유출 전환

서울을 포함한 8개 광역시 지역의 순이동은 2022년을 기점으로 순유출 규모가 대체로 줄어든 가운데 지역별로 방향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은 순유출이 유지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인천과 대전은 순유입으로 돌아선 반면 세종은 순유출로 전환되고 광주는 순유출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6년 순유출이 가장 컸고, 2019년까지 줄었다가 2021년 일시적으로 확대된 뒤 2022년 이후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대구는 2025년 순유출이 분석 기간 중 가장 작았고, 울산은 2021년까지 순유출이 확대되었다가 이후 다시 줄었다.

인천은 2010년대 후반 소폭의 순유출을 보이다 2021년 순유입으로 돌아선 이후 이를 유지하여, 8개 광역시 지역 중 2021년 이후 순유입이 지속된 유일한 지역이다. 대전은 순유출 규모가 점차 줄어 2025년 분석 기간 중 처음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2015년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세종은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줄어 2025년 처음 순유출로 돌아섰고, 광주는 2019년 이후 순유출이 다시 커져 2025년 분석 기간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12) 순유입은 한 지역의 시도 간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은 경우를, 순유출은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며, 그 규모는 두 값의 차이로 나타낸다. 시도 간 이동은 전국 단위에서 전입과 전출이 서로 상쇄되므로 한 지역의 순유입은 다른 지역의 순유출에 대응하고, 17개 시도의 순유입 합계와 순유출 합계는 같다. 따라서 순유입·순유출은 이동의 총량이 아니라 지역 간 인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옮겨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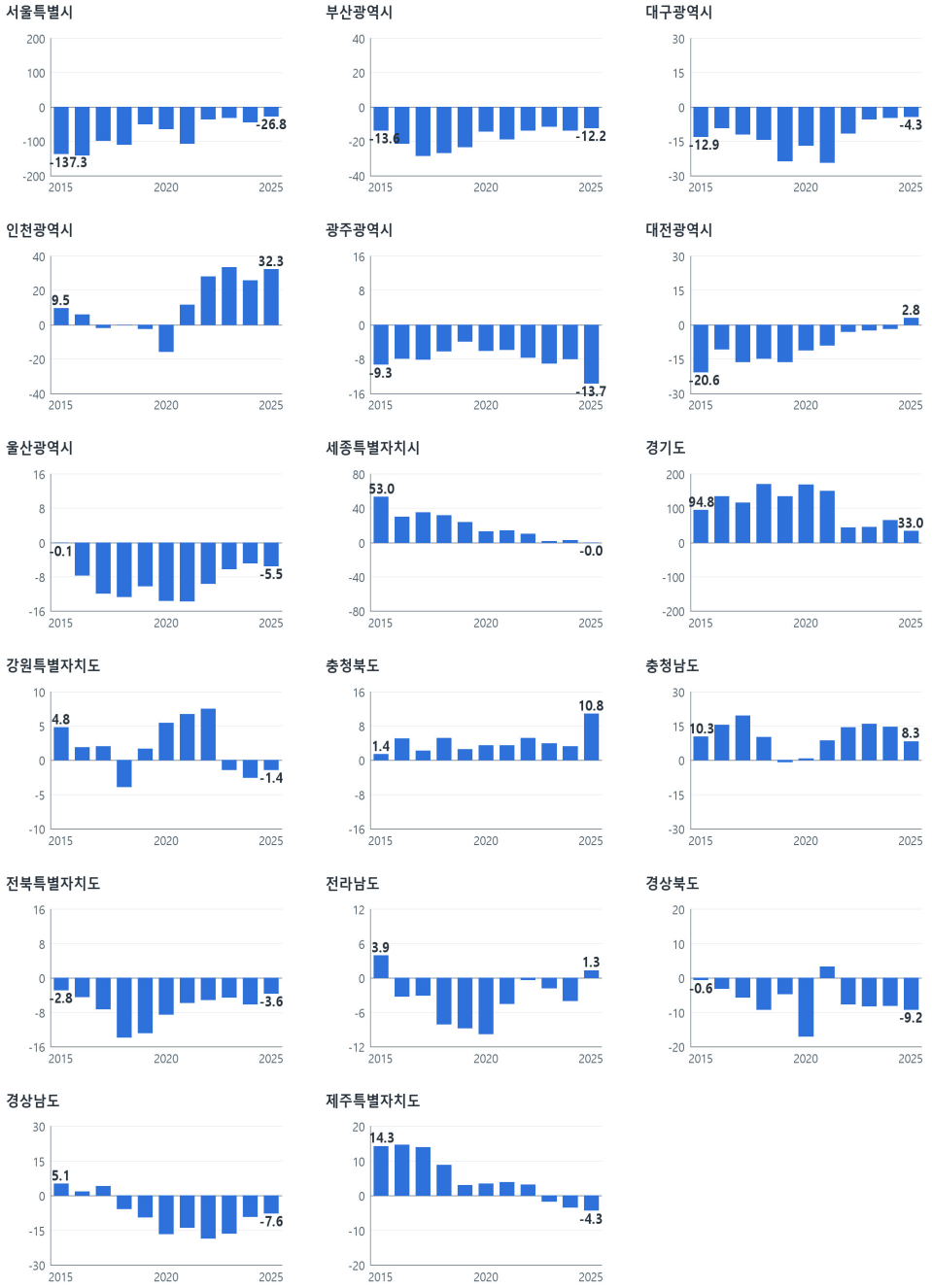
순이동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이므로, 시도 간 총이동 규모가 줄어들면 지역별 순이동의 절대 규모도 함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순유출 축소는 이러한 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의 순유출은 10년간 80.5% 감소하여 같은 기간 시도 간 이동자 수의 감소율 14.3%를 크게 웃돌았으므로, 총이동 규모의 축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천과 대전의 순유입 전환, 세종의 순유입 소멸, 광주의 순유출 확대는 순이동의 방향과 규모가 지역마다 다르게 변하였음을 보여준다.

도 지역의 순이동은 경기의 순유입이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외 지역에서는 방향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충남과 충북은 순유입이 대체로 유지되었고, 강원과 제주는 2023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경남과 경북은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며, 전북과 전남은 순유출 규모가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는 분석 기간 내내 순유입이었으나 2018년을 정점으로 2022년 급감한 뒤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5년에는 최근 10년 중 가장 작은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충남은 2019~2020년 일시 위축된 후 순유입을 회복하였고, 충북은 전 기간 순유입을 유지하며 2025년 도 지역 중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유입을 보였다. 강원은 2023년 순유출로 돌아선 뒤 순유출이 이어졌고, 제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순유입이 점차 줄다 2023년 순유출로 전환된 뒤 그 규모가 커졌다. 경남은 2018년부터 순유출이 이어졌고, 경북은 2021년을 제외하고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전북은 전 기간 순유출이었으나 2018년 이후 그 규모가 줄었고, 전남은 9년 연속 순유출 끝에 2025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Ⅱ-16] 지역별 순이동 추이

(단위: 천명)



주: 양수는 순유입, 음수는 순유출자 수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연령별 순유입·순유출

- **20대는**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만 순유입, 나머지 지역은 순유출 지속
- **30·40대**는 서울 순유출, 대구·대전·인천은 순유입 전환
- **50·60대**는 광역시(인천 제외)에서 순유출, 도 지역(제주 제외)에서 순유입
- **70대 이상**은 경기 순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연령별 순이동은 연령대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2025년 20대는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세종에서만 순유입이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순유출이었다. 50대와 60대는 광역시에서는 인천을 제외하고 순유출인 반면 도에서는 제주를 제외하고 순유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5년, 2020년, 2025년 모두 20대에서 각각 1.8만명, 4.5만명, 3.6만명으로 순유입이었고 30대 이상은 순유출이 유지되었다. 30대 순유출은 2015년 4.8만명에서 2025년 1.9만명으로 61.3%, 40대는 2.5만명에서 8,491명으로 65.8% 줄었으며, 20대 미만은 2.5만명 순유출에서 4,618명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2015~2025년 순유출 축소분인 11.0만명 중 30대와 20대 미만의 순유출 규모가 각각 3.0만명과 2.9만명으로 기여가 가장 컸다.

인천은 2015년 전 연령대에 걸쳐 순유입이었으나 2020년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순유출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다시 전 연령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 순유입은 30대 7,468명, 20대 미만 5,585명, 40대 5,072명, 20대 5,004명 순으로 컸다.

대전은 2015년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었으나 2025년에는 20대 미만 1,505명, 20대 2,248명, 30대 185명, 40대 310명, 70대 이상 252명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50대와 60대만 각각 909명, 767명 규모로 순유출이었다. 세종은 2015년 총 5.3만명 규모의 순유입 55.4%를 20대 미만과 30대가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만 각각 294명과 951명 규모로 순유입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20대 순유출이 2015년, 2020년, 2025년 모두 이어졌다. 2025년 20대 순유출은 부산 4,510명, 대구 4,884명, 광주 5,227명, 울

산 1,15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부산과 대구는 순유출 규모가 줄고 광주와 울산의 경우는 증가했다. 광주는 30대 순유출도 1,625명에서 2,807명으로 커져 2025년 순유출 1.4만명의 58.7%를 20대와 30대가 차지하였다. 대구는 2015년과 2020년 전 연령대 순유출이었으나 2025년에는 20대 미만 2,036명, 30대 211명, 40대 657명, 70대 이상 86명으로 모두 순유입 전환되었다.

도 지역에서는 20대 순유출과 50~60대의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50대와 60대는 2025년의 제주를 제외하고는 2015년, 2020년,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순유입이었고, 20대는 2020년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모두에서 순유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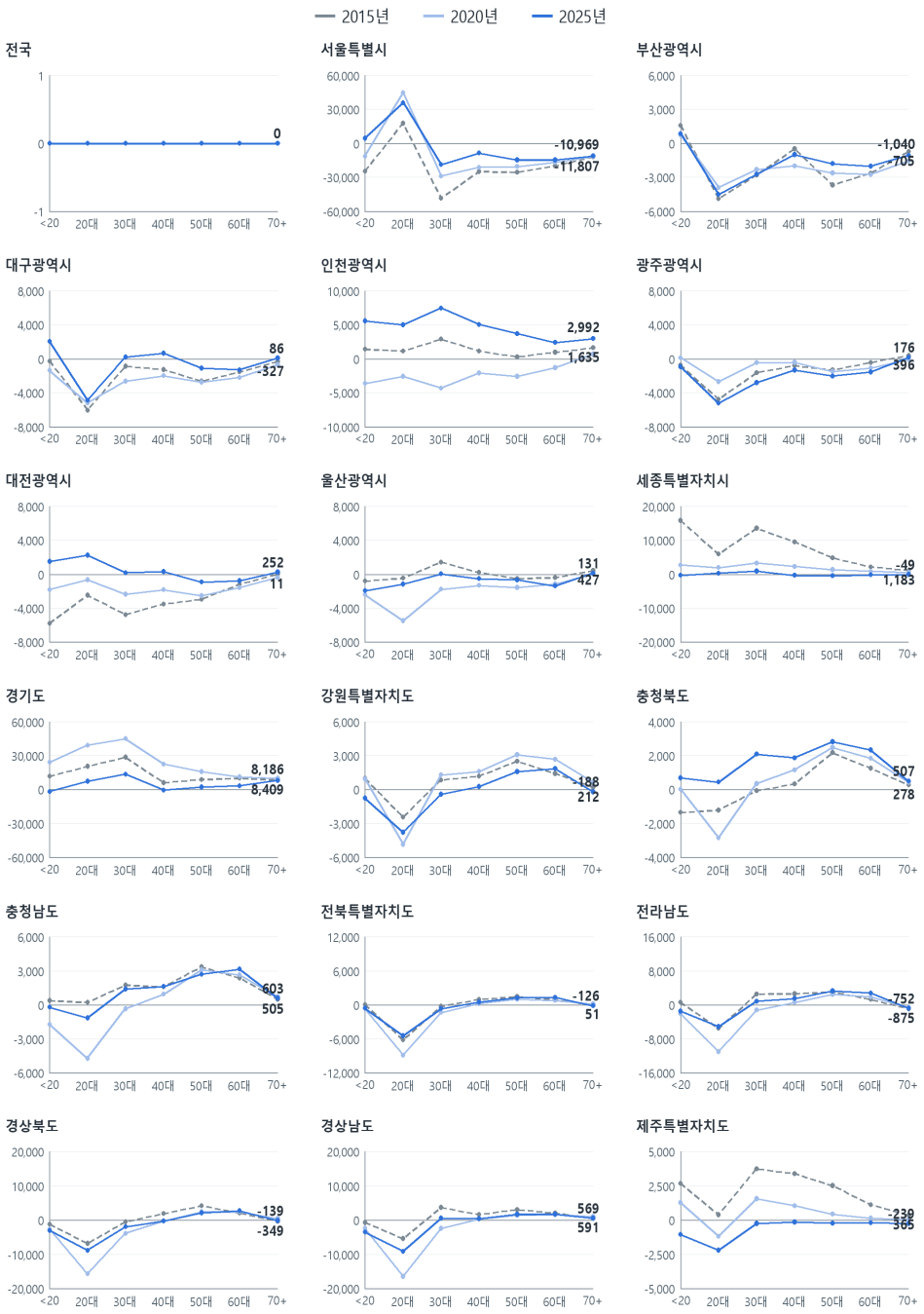
경기는 2015년과 2020년 각각 9.5만명과 16.8만명의 규모로 전 연령대 순유입이었으나 2025년에는 20대 미만과 40대에서 각각 1,655명과 372명 규모로 순유출 전환되었다. 2020년 대비 2025년 20대 순유입은 81.0%, 30대는 69.8%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17.5% 감소에 그쳐, 순유입에서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24.8%로 높아졌다.

경북과 경남의 20대 순유출은 2015년에서 2020년 규모가 확대된 후 2025년 각각 8,839명, 9,129명으로 줄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2015년보다 크다. 전북, 전남, 강원, 충남도 2025년 각각 5,439명, 5,094명, 3,765명, 1,133명의 규모에 해당하는 20대 순유출이 이어졌다. 전남은 30대가 2020년 1,174명 순유출에서 2025년 897명 순유입으로, 충남은 325명 순유출에서 1,425명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강원은 2015년과 2020년 순유입이던 30대가 2025년 412명 순유출로 바뀌었다.

충북은 2015년 20대 미만, 20대, 30대에서 순유출이었고 2020년에는 20대에서만 2,841명 규모의 순유출이었으나, 2025년에는 2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으로 도 지역 중 유일하다. 제주는 2015년 전 연령대 순유입이었으나 2020년 20대에서 1,178명 규모의 순유출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총 4,273명의 순유출이 있었으며 그 중 20대와 20대 미만이 각각 2,198명, 1,044명으로 가장 컸다.

[그림 Ⅱ-17] 연령별 순이동 추이

(단위: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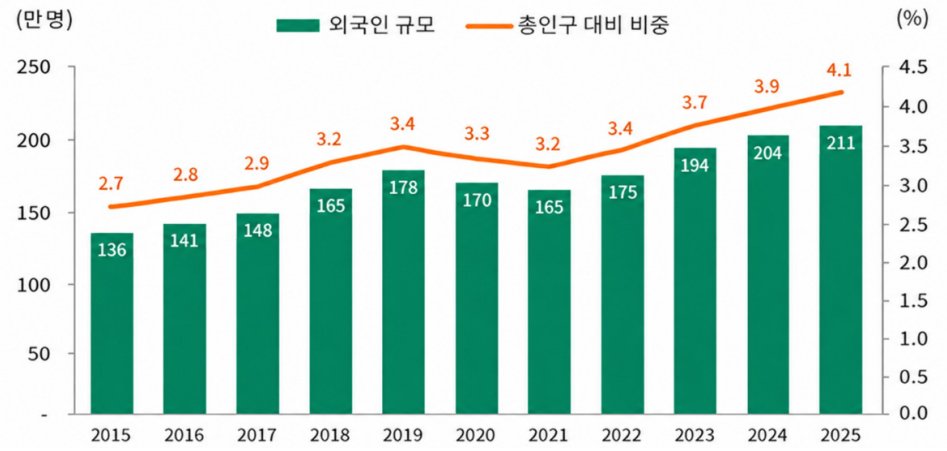
제4절 외국인

1. 외국인 인구

- **외국인 인구**는 2025년 210.9만명으로 총인구대비 4.1% 차지
-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2025년 56.4%

외국인 인구는[13] 2025년 210.9만명으로 총인구대비 4.1%를 차지한다. 2015년(136.4만명) 대비 54.7%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 177.9만명에서 2021년 165.0만명으로 감소한 뒤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Ⅱ-18] 외국인 인구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 69.1만명, 서울 36.9만명, 충남 14.7만명, 경남 13.6만명, 인천 13.1만명 등 순으로 나타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9.1만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비중은 2015년 62.9%에서 2025년 56.4%로 하락하여 외국인 인구의 지역적 분포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13)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기준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한 2022~2025년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난다. 서울(1.5%), 경기(4.9%), 인천(7.0%)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강원(13.3%), 충북(10.2%), 충남(10.6%), 전북(10.9%), 전남(15.5%), 경북(11.2%), 경남(10.4%)에서는 모두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총인구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으로 보면 2025년 기준 충남(6.6%), 충북(5.0%), 경기(4.9%), 제주(4.5%), 전남(4.4%)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절대 규모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도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Ⅱ-1] 외국인 인구 규모 및 비중

(단위: 만명, %)

	2015	2020	2025		
				총인구대비비중	지역분포
전국	136.4	169.6	210.9	4.1	100.0
서울	33.7	36.6	36.9	4.0	17.5
부산	4.4	5.5	6.9	2.1	3.3
대구	2.9	3.7	4.7	2.0	2.2
인천	6.8	9.9	13.1	4.2	6.2
광주	2.2	3.1	3.7	2.6	1.7
대전	1.9	2.3	3.3	2.2	1.6
울산	3.0	2.7	3.6	3.3	1.7
세종	0.4	0.7	0.8	2.1	0.4
경기	45.3	58.3	69.1	4.9	32.7
강원	1.8	2.5	4.0	2.7	1.9
충북	4.1	5.7	8.3	5.0	3.9
충남	7.1	9.9	14.7	6.6	7.0
전북	3.0	4.2	6.2	3.5	2.9
전남	3.5	4.5	7.8	4.4	3.7
경북	5.8	7.5	11.1	4.3	5.3
경남	9.0	9.7	13.6	4.2	6.4
제주	1.5	2.7	3.0	4.5	1.4

주: 총인구대비비중은 지역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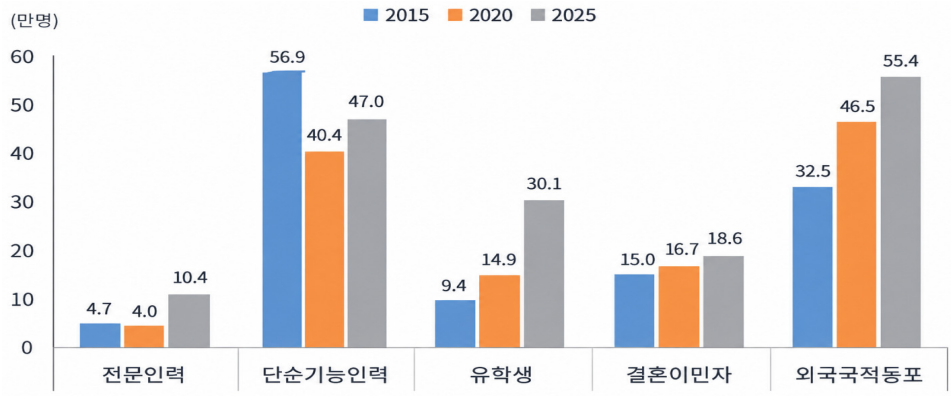
2. 체류자격별 외국인

● **체류자격별**로는 2025년 기준 취업자격 57.4만명(26.6%), 외국국적동포 55.4만명(25.7%), 유학생 30.1만명(13.9%), 결혼이민자 18.6만명(8.6%) 순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14]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취업자격 57.4만명(26.6%)으로 가장 많고, 외국국적동포 55.4만명(25.7%), 유학생 30.1만명(13.9%), 결혼이민자 18.6만명(8.6%), 기타 54.3만명(25.2%) 등으로 나타난다. 취업자격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자격 외국인은 단순기능인력이 47.0만명으로 전문인력은 10.4만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대비 유학생은 9.4만명에서 30.1만명으로, 외국국적동포는 32.5만명에서 55.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자격 외국인은 단순기능인력의 감소로 당시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다만 취업자격 내에서도 전문인력은 증가하여 체류자격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19] 체류자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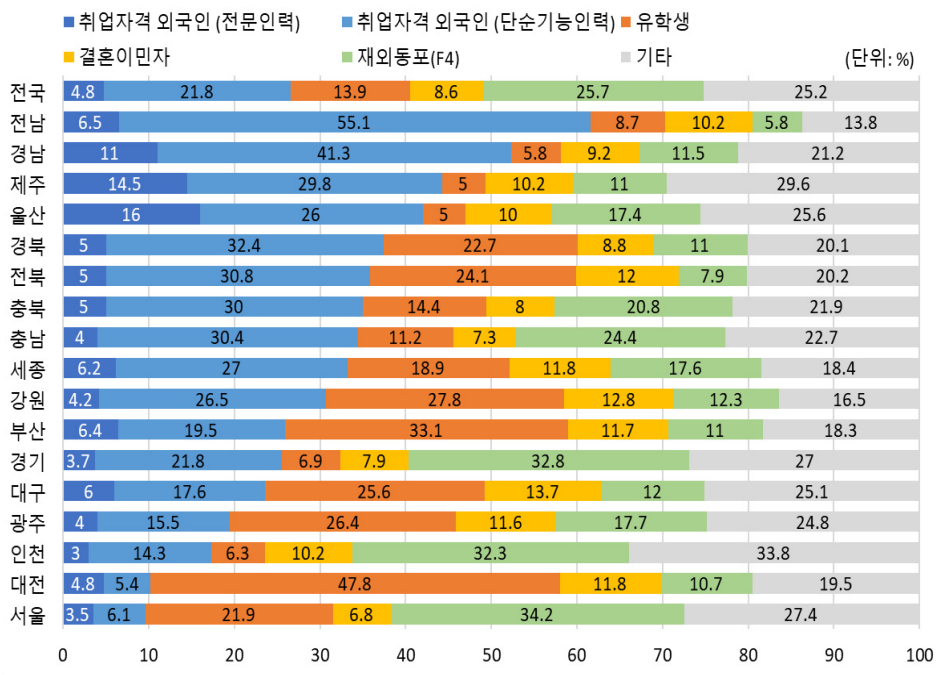
주: 1. 등록 및 거소기준
2. 전문인력(E-1~E-7), 단순기능인력(E-8~E-10, H-2), 유학생(D-2(D-2-1~D-2-8), D-4(D-4-1, D-4-7)), 결혼이민자(F-2-1, F-5-2, F-6), 외국국적동포(F-4)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14) 2025년 기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총 215.9만명(각각 160.5만명, 55.4만명)으로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인구(210.9만명)와 차이가 있다. 이는 기준시점과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본 전망에서는 인구총조사 기준의 외국인인구를 사용하였다.

2025년 지역별 외국인 체류자격 구성을 보면, 외국인 인구의 규모뿐 아니라 체류 목적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역별 전체 외국인 중 취업자격 외국인의 비중은 전남(61.6%)과 경남(52.3%)에서 절반을 넘는 반면, 유학생 비중은 대전(47.8%)과 부산(33.1%)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재외동포 비중은 서울(34.2%), 경기(32.8%), 인천(32.3%) 등 수도권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Ⅱ-20] 지역별 외국인 체류자격별 비중(2025년)



주: 1. 등록 및 거소기준
2. 전문인력(E-1~E-7), 단순기능인력(E-8~E-10, H-2), 유학생(D-2(D-2-1~D-2-8), D-4(D-4-1, D-4-7)), 결혼이민자(F-2-1, F-5-2, F-6), 외국국적동포(F-4)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고용노동부의 2025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15]을 보면,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28.3만명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22.7만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3.3만명, 어업 1.4만명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 외국인력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고용허가제 외국인 체류자격(E-9(일반외국인), H-2(특례자))에만 해당되는 통계 수치로 고용허가상태가 취득, 전근(2010년 이전), 연장, 자사간 이동, 고용승계, 재고용, 복귀인 고용허가서발급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접수번호로 유일하게 추출한 건수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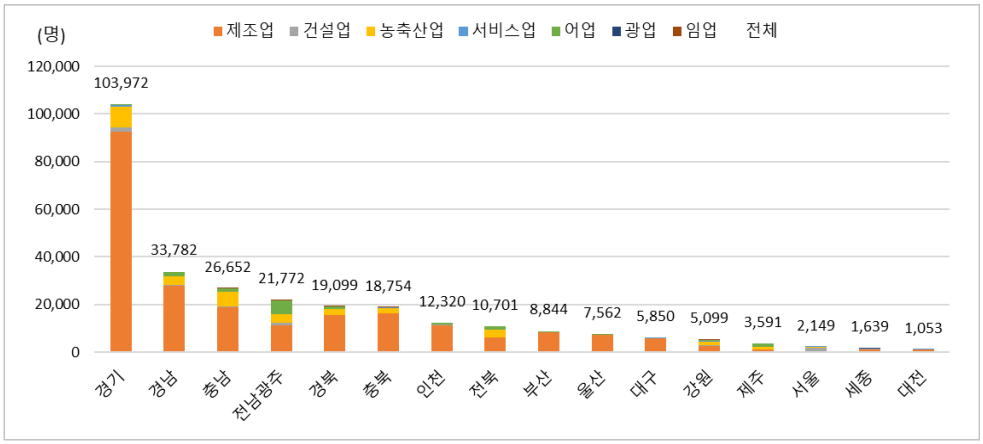
[표 Ⅱ-2] 2025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

(단위: 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광업	임업
전국	226,619	6,941	33,437	1,336	14,436	19	51
서울	546	1,431	31	141	0	0	0
전남·광주	11,316	1,133	3,377	124	5,815	0	7
부산	8,164	219	105	20	336	0	0
대구	5,658	29	140	23	0	0	0
인천	11,102	357	87	66	708	0	0
대전	981	39	25	8	0	0	0
울산	7,245	15	62	6	234	0	0
세종	1,122	327	178	10	0	2	0
경기	92,386	1,983	8,829	472	302	0	0
강원	2,690	291	1,538	72	475	6	27
충북	16,317	100	2,154	144	20	9	10
충남	18,703	533	5,997	52	1,364	0	3
전북	6,121	133	3,307	15	1,125	0	0
경북	15,382	42	2,773	27	869	2	4
경남	27,906	306	3,648	92	1,830	0	0
제주	980	3	1,186	64	1,358	0	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그림 Ⅱ-21]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규모 및 산업별 구성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Ⅲ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제1장 지역인구

제1절 지역별 인구

- **전국 총인구**는 2025년 5,176만명에서 2045년 4,884만명으로 5.6% 감소
  - 2045년 인구가 2025년보다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세종·경기·충남 4개 시도이며, 충북은 비슷한 수준 유지
- **수도권** 인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상승

전국 총인구는 2025년 5,176.2만명에서 2045년 4,884.0만명으로 292.1만명(5.6%) 감소할 전망이다[16]. 최근의 출생 반등과 외국인 유입 등으로 총인구 규모는 2030년에도 5,180.1만명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인구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45년 인구증가율은 -0.65%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인구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구는 2025년 대비 2045년 85만명(9.1%)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5.5% 증가하여 세종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2039년 정점에 이른 뒤 감소로 전환되지만, 2045년에도 2025년보다 3.8% 많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의 인구 증가와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빠른 인구 감소로 2045년 수도권의 인구 비중(53.7%)은 2025년(50.9%)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7]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16) 제Ⅱ부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의 총인구를 사용하였으나, 제Ⅲ부 지역인구전망에서는 2025년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말인구를 전망의 기준인구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인구 규모는 제Ⅱ부의 동향 통계와 차이가 있다.

17) 이는 주로 비수도권 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2025~2045년 수도권 인구는 0.6%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같은 기간 누적 자연감소가 2025년 인구의 12.3%로 수도권(5.2%)의 2배를 넘으며, 국내이동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규모 약 51.5만명도 비중 격차를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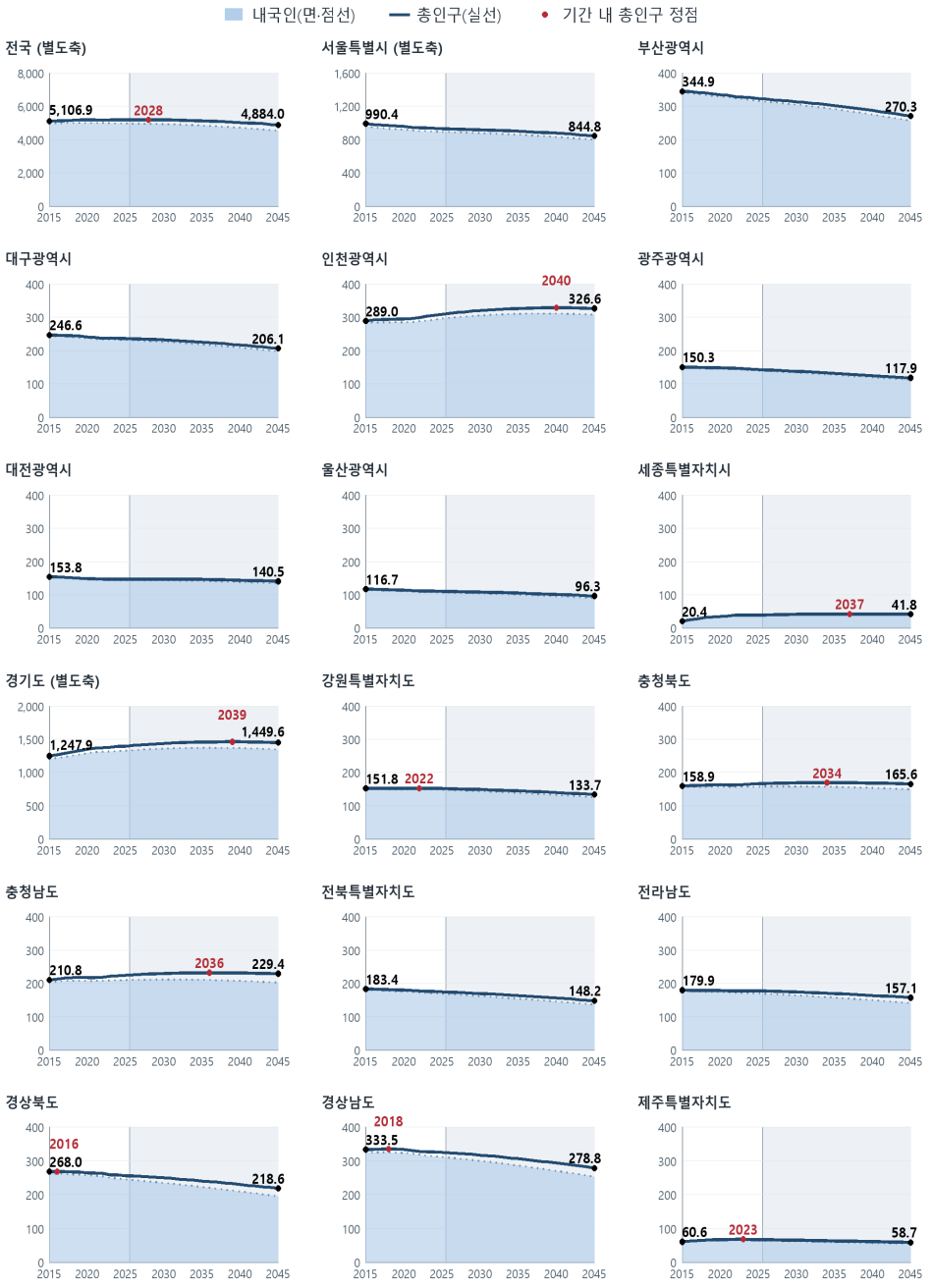
비수도권에서는 세종과 충남의 인구가 2045년에도 2025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종 인구는 2025년 대비 6.6%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은 2036년 정점에 이른 뒤 감소로 전환되지만, 2045년에도 2025년보다 2.1% 많을 전망이다. 충북은 2030년대 중반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여, 2045년에는 2025년보다 0.2%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시 지역의 인구는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는 2025년 대비 2045년에 17.4% 감소하여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52.7만명(16.3%) 감소하여 서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클 전망이다. 대구와 울산은 각각 12.7%, 12.6% 감소하며, 대전은 2030년 정점에 이른 뒤 감소로 전환되어, 2045년에는 2025년보다 4.3%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도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경남은 2025년 대비 2045년 46.0만명 감소하여 도 지역 중 감소 규모가 가장 크고, 경북도 37.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율은 전북이 15.3%로 가장 높고, 경북(14.7%), 경남(14.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11.9%, 11.6% 감소하고, 제주는 2023년 인구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45년에는 2025년 대비 12.2%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Ⅲ-1] 지역별 총인구 전망

(단위: 만명)



주: 1) 실선은 총인구, 점선은 내국인 인구를 의미하며 2015년 이후 총인구 정점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를 표기
2) 2015~2024년은 인구총조사의 인구(11월1일 기준), 2025년~2045년은 연말인구(12월 31일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표 Ⅲ-1] 지역별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

(단위: 만명, %)

	2025	2030	2035	2040	2045	2025대비 2045 변화율
서울	929.8	917.9 (-0.30)	900.6 (-0.44)	876.0 (-0.62)	844.8 (-0.78)	-9.1
부산	323.0	313.9 (-0.64)	302.0 (-0.87)	287.1 (-1.10)	270.3 (-1.27)	-16.3
대구	236.0	232.0 (-0.42)	225.4 (-0.69)	216.5 (-0.88)	206.1 (-1.06)	-12.7
인천	309.5	320.1 (0.58)	326.5 (0.27)	328.6 (0.03)	326.6 (-0.25)	5.5
광주	142.8	137.7 (-0.78)	131.6 (-0.97)	124.9 (-1.08)	117.9 (-1.20)	-17.4
대전	146.8	147.4 (0.03)	146.4 (-0.23)	143.9 (-0.42)	140.5 (-0.53)	-4.3
울산	110.2	108.3 (-0.45)	105.0 (-0.70)	101.1 (-0.81)	96.3 (-1.09)	-12.6
세종	39.2	41.3 (0.84)	42.3 (0.24)	42.2 (-0.16)	41.8 (-0.27)	6.6
경기	1,396.3	1,437.2 (0.46)	1,457.6 (0.17)	1,460.8 (-0.03)	1,449.6 (-0.25)	3.8
강원	151.8	148.9 (-0.45)	144.8 (-0.66)	139.6 (-0.77)	133.7 (-0.95)	-11.9
충북	165.9	168.8 (0.24)	169.4 (-0.05)	168.2 (-0.22)	165.6 (-0.41)	-0.2
충남	224.7	230.1 (0.37)	232.1 (0.09)	231.6 (-0.11)	229.4 (-0.27)	2.1
전북	174.9	169.8 (-0.63)	163.4 (-0.82)	155.9 (-0.95)	148.2 (-1.08)	-15.3
전남	177.7	174.4 (-0.45)	169.7 (-0.59)	163.9 (-0.74)	157.1 (-0.95)	-11.6
경북	256.1	249.7 (-0.58)	240.7 (-0.82)	230.0 (-0.97)	218.6 (-1.11)	-14.7
경남	324.8	317.3 (-0.57)	306.3 (-0.79)	293.5 (-0.91)	278.8 (-1.12)	-14.2
제주	66.8	65.2 (-0.57)	63.1 (-0.67)	61.0 (-0.70)	58.7 (-0.85)	-12.2

주: 연말인구. ( )는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지역별 인구증감 요인

-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분을 웃도는 곳은 2026년 7개 시도에서 2045년 16개 시도로 늘어날 전망
  - 경기·인천·충남·충북 등은 사회적 증가가 자연감소를 상쇄하거나 초과하여 2030년대 후반까지 인구증가가 예상됨
  -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은 자연감소에 사회적 감소가 중첩되면서 인구감소 심화
  -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대전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작아 자연감소가 대부분 그대로 인구감소로 이어짐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연감소가 확대되면서, 지역 인구 증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서 자연감소의 영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18].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 순이동과 외국인 인구 증가가 이를 확대하거나 상쇄하는 정도에 따라 지역별 인구변동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소 규모가 사회적 요인의 규모를 넘는 시도는 2026년 7개에서 2045년 세종을 제외한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은 국내 순유입과 외국인 인구가 자연감소를 일부 상쇄하면서 인구감소를 완화하거나 인구증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경기의 연간 사회적 증가는 2026년 8.6만명에서 2045년 4.3만명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자연증감은 203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2045년에는 8.0만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4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지만, 전망기간 누적으로는 사회적 증가(122.0만명)가 자연감소(68.7만명)의 1.8배에 달하여 인구가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연간 1.3~2.4만명의 사회적 증가가 이어지지만, 2041년 이후는 자연감소가 사회적 증가를 넘어설 전망이다.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18) 지역의 인구증감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감과, 시도간 이동과 국제이동에 따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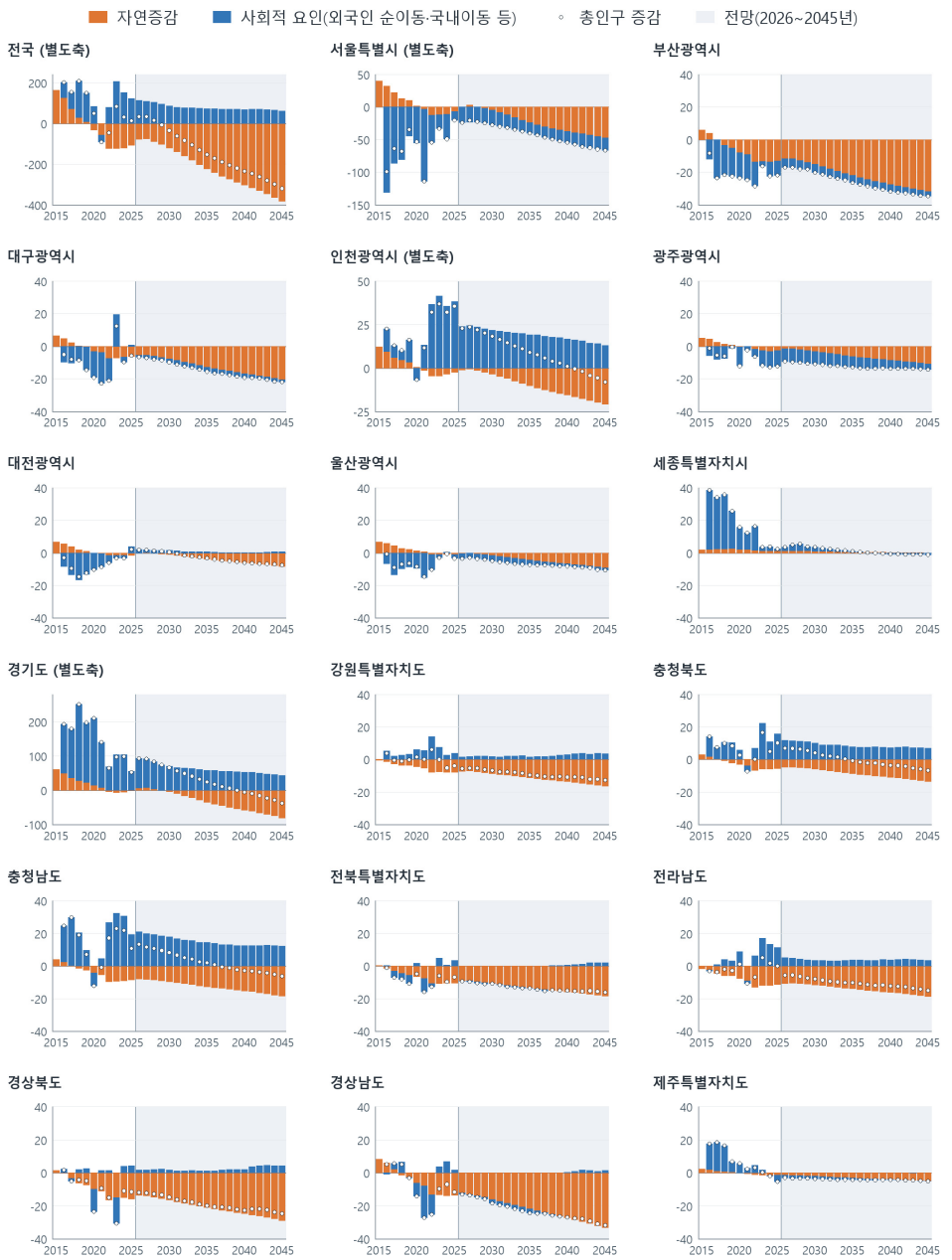
충남과 충북은 전망기간 중 순유입이 지속되지만, 2030년대 중반 자연감소 규모가 순유입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인구는 충남 12.1만명, 충북 8.1만명 증가하여 누적 자연감소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자연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사회적 증가가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 등은 자연감소와 순유출이 중첩되면서 인구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은 2026년 이후 연간 2.2만~3.5만명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감소가 빠르게 확대되어, 2035년부터 자연감소 규모가 순유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대구는 이미 자연감소가 순유출보다 큰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전망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2022년부터 자연감소 규모가 순유출 규모를 넘어섰으며, 2026~2045년 누적 자연감소는 4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도 2023년부터 자연감소가 순유출을 넘어섰으며, 전망기간 중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순유출의 약 2.9배에 이를 전망이다. 경남 역시 자연감소와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자연감소 규모(44.8만명)가 외국인 인구 증가(12.7만명)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그 밖의 도 지역에서도 자연감소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원·전남·경북은 사회적 요인이 연간 0.1만~0.5만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누적 자연감소의 11~27%를 상쇄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경남·전북에서 사회적 요인이 0 안팎이나 소폭의 증가에 머무는 것은 시도간 순유출을 외국인 순이동이 대부분 상쇄하거나 웃돌기 때문이다. 대전은 사회적 증가가 점차 줄어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누적 자연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아, 인구 감소율은 4.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2] 지역별 인구 증감 요인

(단위: 천명)



주1. 실적(2015~2025년)의 총인구증감은 「인구총조사」의 총인구 전년대비 차이이며, 자연증감은 「인구동향조사」의 내국인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

주2. 전망(2026~2045년)의 총인구 증감은 내·외국인을 포함한 당해 연도 말 인구에서 전년 말 인구의 차이이며, 자연증감은 내·외국인 출생과 사망의 차를, 사회적 요인은 시도간 순이동과 외국인 이동 등을 반영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제2장 인구변동요인

제1절 출생

1.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2045년 전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은 0.76명으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0명에서 2030년 0.93명으로 상승한 후 2035년 0.89명으로 하락하고, 이후 완만하게 회복해 2045년 0.9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지만, 회복 수준과 전망기간 중 변화 양상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45년에는 서울이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출산율 회복에도 지역별 출산율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제주 등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서울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3명에서 2030년 0.78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0.76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도 2025년 0.74명에서 2030년 0.86명으로 상승하지만, 이후 2045년 0.85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광주 역시 2030년 각각 0.93명, 0.90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0.91명, 0.88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2045년에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7명에서 2030년 0.93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0.9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 제주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근접하지만 소폭 낮은 수준으로, 다른 도 지역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반면 2045년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남은 1.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1.09명에서 2030년 1.26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1.2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도 2045년 1.1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역은 전망기간 동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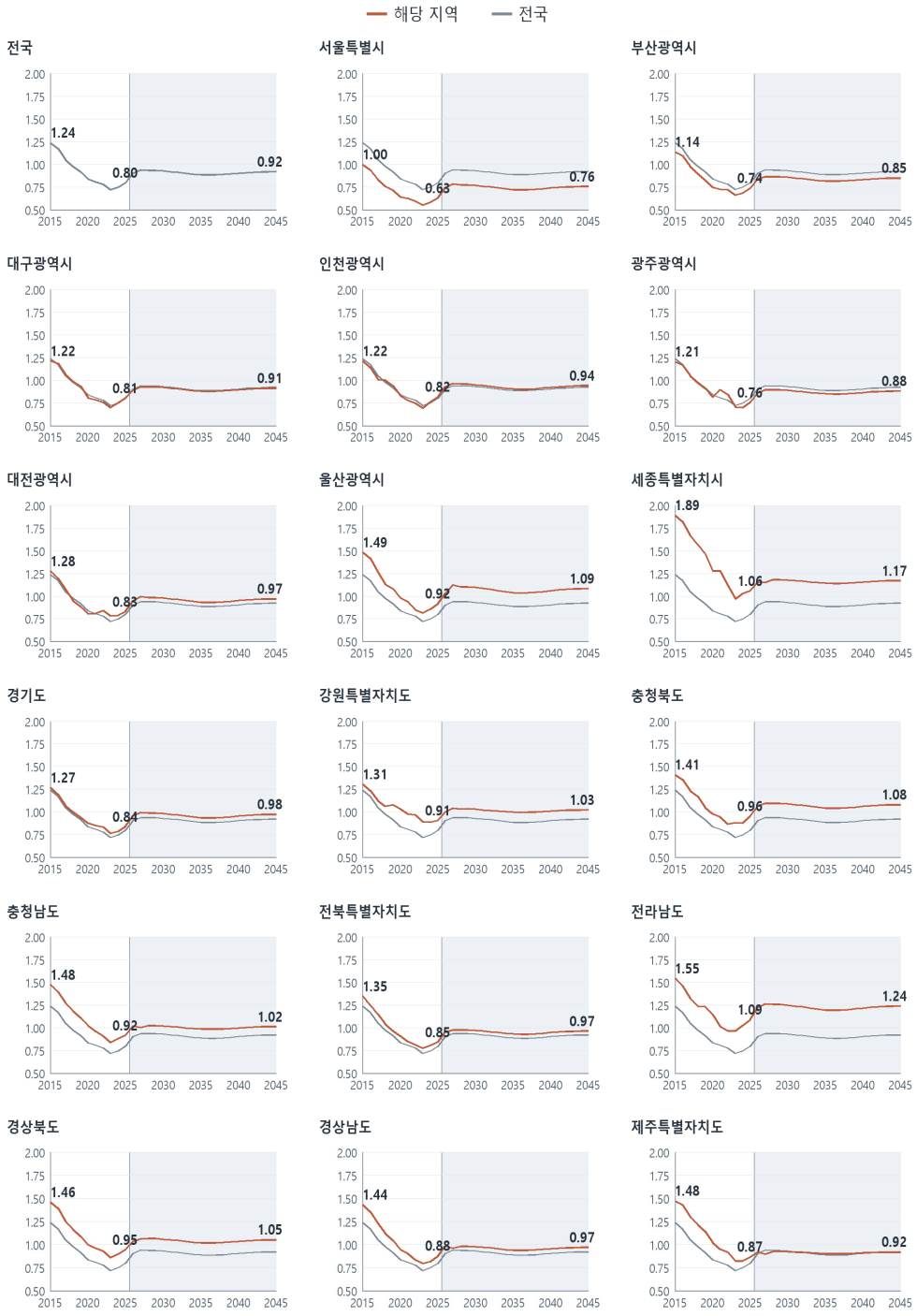
울산과 경북은 2045년 각각 1.09명, 1.05명으로 1명을 웃도는 출산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과 강원도 각각 1.08명, 1.0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은 1.02명으로 1명을 소폭 웃돌고, 전북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인천, 경기도도 각각 0.97명, 0.94명, 0.98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역시 2045년 0.9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출산율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2명에서 2030년 0.96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0.9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도 2025년 0.84명에서 2030년 0.99명으로 상승한 후 2045년 0.98명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서울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2045년 전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 출산율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전망기간 중 대부분 시·도의 합계출산율은 2030년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고, 이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 기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전남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전남·울산·충북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반면, 서울·부산·대구·광주·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적인 출산율 회복에도 지역별 출산율 수준과 회복 경로에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Ⅲ-3] 지역별 합계출산율 전망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2. 출생아 수

- **출생아 수**는 2027년 약 29.6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45년 약 2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지역별 출생아 수는 202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출생아 수는 2025년 25.4만 명에서 2027년 29.6만 명으로 증가한 뒤, 2045년에는 20.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과 비교하면 2045년 출생아 수는 18.9%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는 출산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출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누적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출생아 수의 감소 폭과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2025년 대비 2045년 출생아 수 감소율은 경남(41.9%), 광주(39.9%), 제주(39.6%), 경북(38.9%), 울산(38.3%)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반면 세종(2.4%), 서울(7.8%), 대전(9.1%), 경기(10.3%) 등은 감소 폭이 비교적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11.9%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별 출생아 수 변화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역의 인구구조와 출산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45년 출생아 수는 경기에서 약 6.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약 4.2만 명으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약 1.5만 명, 부산은 약 1.0만 명, 충남은 약 0.9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남은 약 0.8만 명, 대구와 충북은 각각 약 0.7만 명, 경북과 전남은 각각 약 0.6만 명으로 전망된다. 반면 광주·울산·세종·제주 등은 2045년 출생아 수가 약 0.4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에 예상된다. 지역별 출생아 수의 차이는 단순히 감소율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부산·대구·광주·울산 등은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2045년 출생아 수가 각각 약 1.0만 명과 0.7만 명으로 감소하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약 0.4만 명과 0.3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2025년 대비 감소율도 부산 30.2%, 대구 30.8%, 광주 39.9%, 울산 38.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반면 세종은 2045년에도 약 0.3만 명의 출생아 수를 유지하며, 감소율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이라도 출생아 수의 변화가 균일하지 않으며, 향후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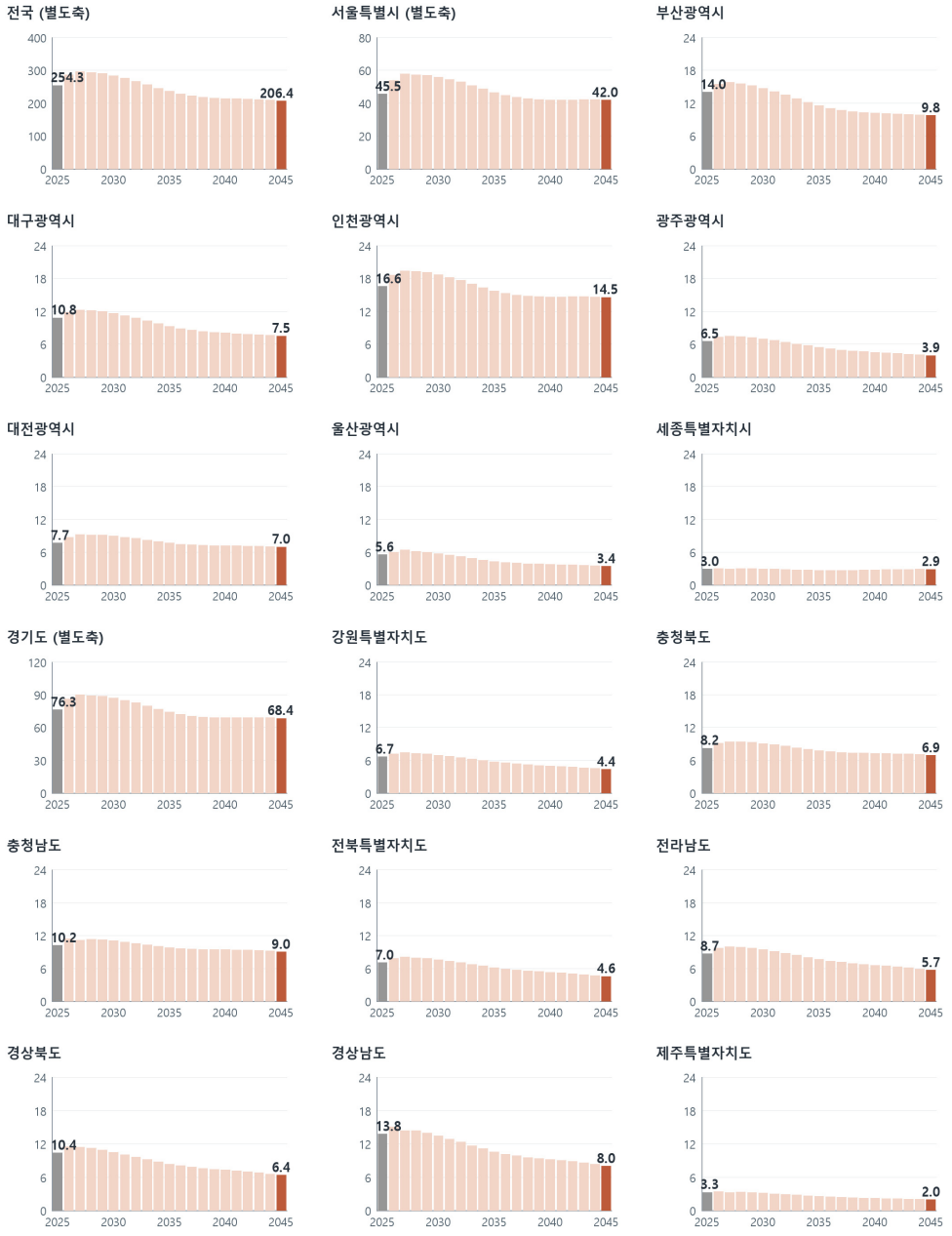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경기와 충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은 출생아 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 출생아 수는 2025년 약 7.6만 명에서 2045년 약 6.8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같은 기간 약 0.9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남은 2025년 약 1.4만 명에서 2045년 약 0.8만 명으로 감소하여 지역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 지역에서도 인구 규모가 큰 지역과 출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빠른 지역 간에 출생아 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출생아 수 전망을 해석할 때는 합계출산율과 출산 연령 인구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생아 수는 출산율뿐 아니라 실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의 여성 인구 규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도 출산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출산 연령 인구가 많거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출생아 수의 차이는 출산율 변화뿐 아니라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 인구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대비 출생아 수가 40% 안팎 감소하는 반면, 서울·인천·세종 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와 서울은 2045년에도 출생아 수가 많은 지역으로 남겠지만, 출생아 수 자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향후 지역의 인구 및 사회서비스 수요를 전망할 때 출산율뿐 아니라 출산연령 인구의 규모와 이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Ⅲ-4] 지역별 출생아 수 전망

(단위: 천명)



주: 2025년은 인구동향조사 실적이며, 2026~2045년 내·외국인의 출생아 수 전망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사망

1. 조사망률 및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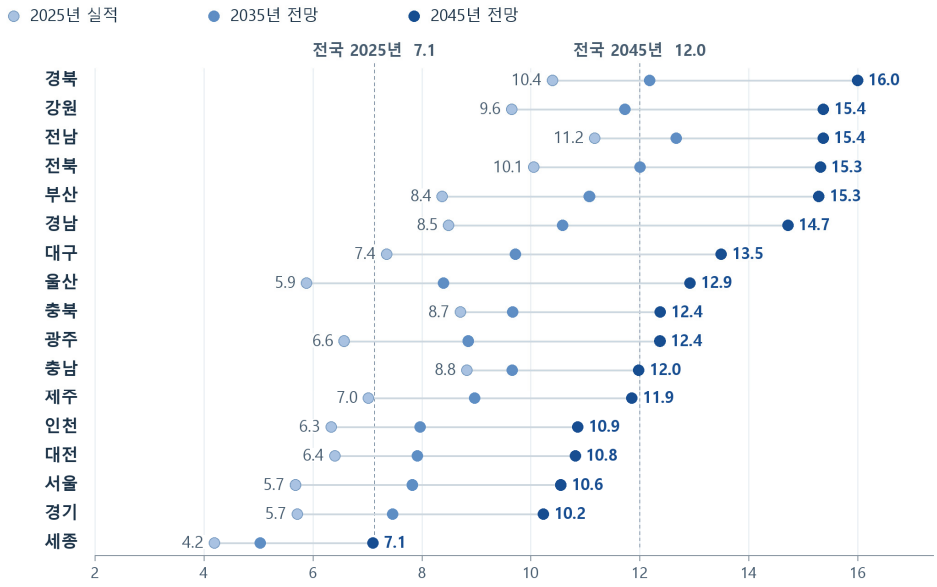
- **지역별 조사망률**은 2045년 세종 7.1명~경북 16.0명으로 모든 시도에서 2025년보다 높아질 전망
- **전국 사망자 수**는 2045년 58.8만명으로 61.2% 증가

2025년 전국 조사망률은 7.1명이며, 2035년 9.0명, 2045년 12.0명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시도별 조사망률은 2025년 전남(11.2명), 경북(10.4명), 전북(10.1명), 강원(9.6명) 등 고령화가 진전된 도 지역이 높고, 세종(4.2명), 서울(5.7명), 경기(5.7명), 울산(5.9명) 등 시 지역이 낮다. 2045년에는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부산의 조사망률이 15.0명을 넘어서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종,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을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조사망률 상승 폭이 현재 고령화가 진전된 도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더 크다는 것이다. 전남은 이미 고령층 비중이 높아 2025~2045년 조사망률 상승이 4.2명에 그치는 반면, 울산(7.0명), 부산(6.9명), 대구(6.1명), 경남(6.2명)은 상승 폭이 크다.

조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절대 수준으로는 확대되나 상대 수준으로는 축소된다. 최고·최저 시도의 차이는 2025년 7.0명에서 2045년 8.9명으로 커지지만, 배율은 2.7배에서 2.3배로 낮아지고, 세종을 제외한 배율도 2.0배에서 1.6배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연령별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광역시와 수도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연령구조가 지역 간에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즉, 전망기간 중 조사망률 격차의 주된 원인은 사망위험의 차이가 아니라 연령구조 수렴의 속도 차이이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그림 Ⅲ-5] 조사망률 전망(2025년, 2035년, 204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전국 사망자 수는 2025년 36.3만 명에서 2035년 46.0만 명, 2045년 58.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9] 시도별로 보면 2045년 사망자 수는 경기(14.9만 명), 서울(9.0만 명), 부산(4.2만 명), 경남(4.1만 명), 인천(3.6만 명), 경북(3.5만 명) 순으로 많다. 2025~2045년 사망자 증가율은 울산(94.8%), 경기(90.5%), 인천(85.7%), 세종(81.6%)에서 높고 전남(22.0%), 전북(31.4%), 경북(34.6%), 강원(42.0%)에서 낮다.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국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1.2%에서 2045년 46.5%로 높아진다. 2015~2025년 사망자 증가율은 세종·경기·인천 순으로 높았던 반면, 2026~2045년에는 울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서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점은 과거와 다르다. 사망자 수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경기, 인천, 세종, 서울, 대전이며 전국 사망자 증가분의 54.4%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19) 2025년 사망자 수는 인구동향조사의 실적으로 내국인 사망자 수이며, 2026~2045년의 NABO 전망은 내·외국인을 포함하는 총인구의 사망자로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6] 사망자 수 전망

(단위: 천명)



주: 2025년은 인구동향조사 실적이며, 2026~2045년 내·외국인의 사망자 수 전망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2. 연령별 사망률

-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20]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겠으나, 속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둔화되며 고령층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

시도별 연령별 사망률은 모든 지역에서 영아기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가 청년기부터 연령에 따라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연령 패턴은 전망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전망기간 중 사망률 하락은 전 연령에서 나타나지만 그 폭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전국 기준 70~74세 사망률은 2025년 천명당 12.6명에서 2045년 6.6명으로 47.3% 하락하는 반면, 85~89세 사망률은 90.7명에서 66.2명으로 27.0% 하락에 그쳐,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감소폭은 85~89세가 24.5명으로 70~74세의 5.9명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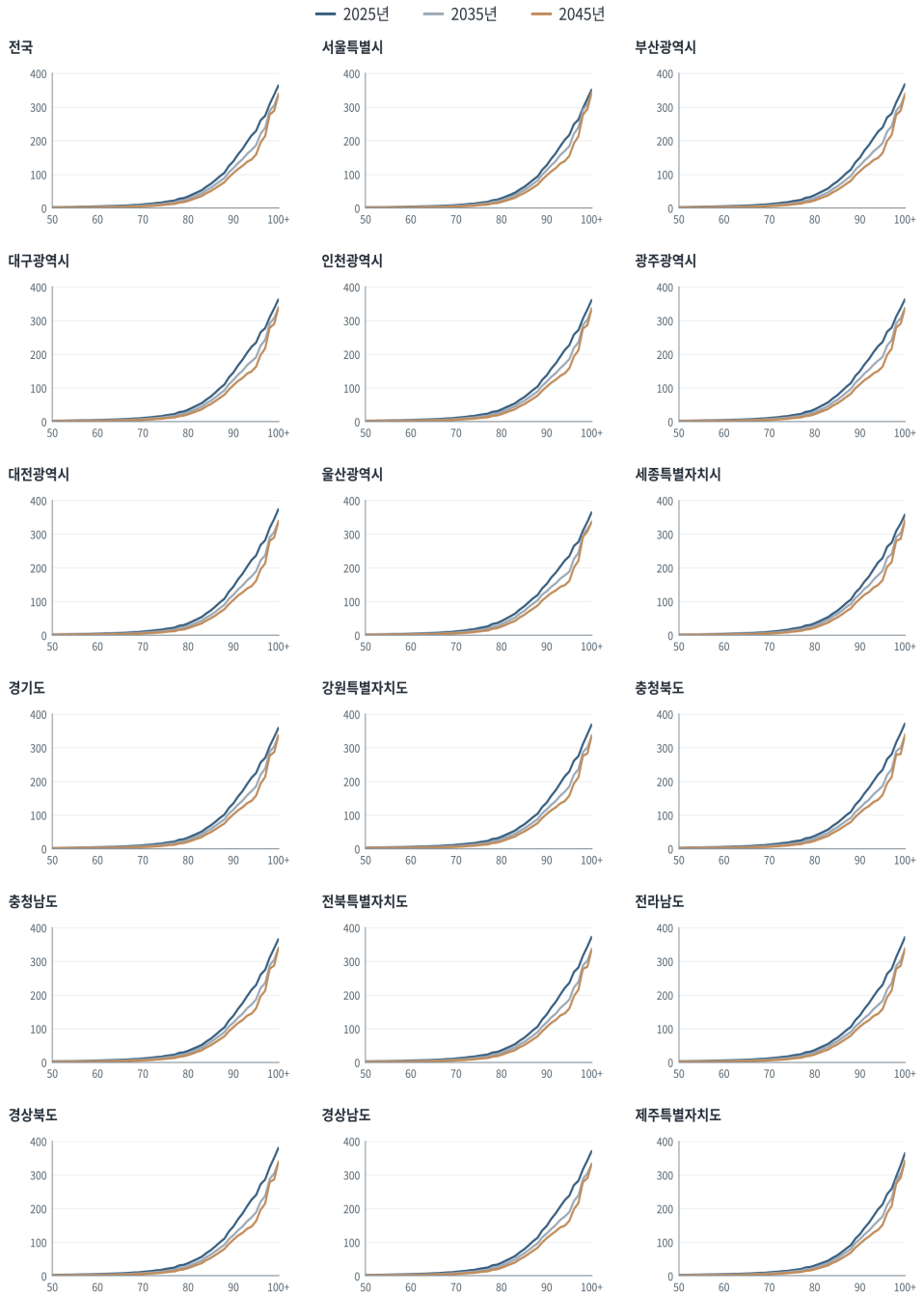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하면, 70~74세 사망률은 2025년 서울(10.5명)이 가장 낮고 경남(14.1명)이 가장 높았다. 2045년에는 서울(5.5명)이 가장 낮고 충북(7.5명)이 가장 높아, 격차는 3.6명에서 1.9명으로 좁혀진다. 85~89세 사망률은 2025년에 제주(75.5명)이 가장 낮고 울산(109.7명)이 가장 높았다. 2045년에는 서울(59.4명)이 가장 낮고 울산(76.6명)이 가장 높아 격차는 34.2명에서 17.2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후 연령대의 사망률 하락이 전망기간 중 기대수명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며, 이는 전국 전망과 동일한 특징이다. 다만 시도별로는 기준연도에 사망률 수준이 높았던 영남권·충청권 도 지역에서 60~80대 사망률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서울·경기·제주 등 사망률이 이미 낮은 지역에서는 하락 폭이 작게 나타난다.

20) 연령별 사망률(age-specific death rate)은 해당 연령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그림 Ⅲ-7] 전국 및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 전망(50세 이상)

(천명당 명)



주: 성별 합계. 50~100세의 동일 연령 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이며, 100세는 100세 이상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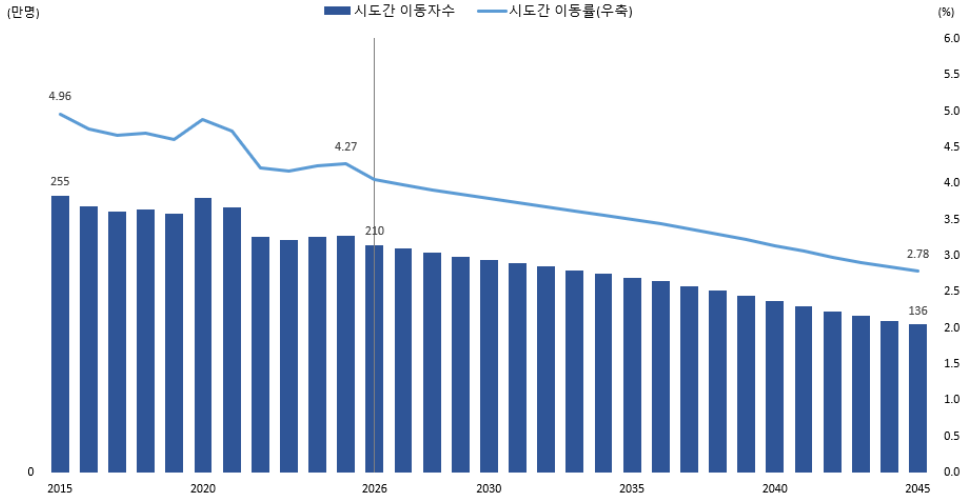
제3절 국내이동

1. 이동 규모와 이동률

- **시도 간 이동자수**는 2045년 136.4만명으로 감소
- **시도 간 이동률**은 2045년 2.78%로 하락

전국의 시도 간 이동자수는 2025년 218.6만명에서 2045년 136.4만명으로 82.2만명(37.6%)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 간 이동률도 2025년 4.3%에서 2045년 2.8%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규모뿐 아니라 이동 성향을 나타내는 이동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그림 Ⅲ-8] 지역별 이동자수 및 이동률 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2. 지역별 순유입·순유출

- **순유입**은 경기·인천·충남·충북에서 이어지나 규모는 축소
- **순유출**은 서울·비수도권 광역시와 경남에서 이어지나 규모는 대체로 축소

전망 기간 시도 간 순이동은 지역별 방향이 과거 흐름과 대체로 같게 이어지지만, 시도 간 이동 규모가 줄면서 순유입과 순유출의 절대 규모는 대부분 지역에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이동의 방향이 바뀌거나 유입과 유출이 균형에 가까워지는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순유입이 이어지면서 그 규모가 줄어드는 지역이다. 경기는 전망 기간 내내 17개 시도 중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크지만, 순유입은 2045년 2.4만명으로 2025년(3.3만명)보다 26.8% 줄어든다. 인천은 2021년 순유입으로 돌아선 이후 2041년까지 17개 시도 중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순유입 양상을 이어가지만, 순유입 규모는 2025년 3.2만명에서 2045년 1.0만명으로 3분의 1 이하가 되고 순이동률도 1.0%에서 0.3%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21] 충남과 충북은 각각 0.3~0.6%, 0.3% 안팎의 순이동률로 비교적 안정적인 순유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는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인구 규모도 커서 순이동률은 0.2~0.4% 수준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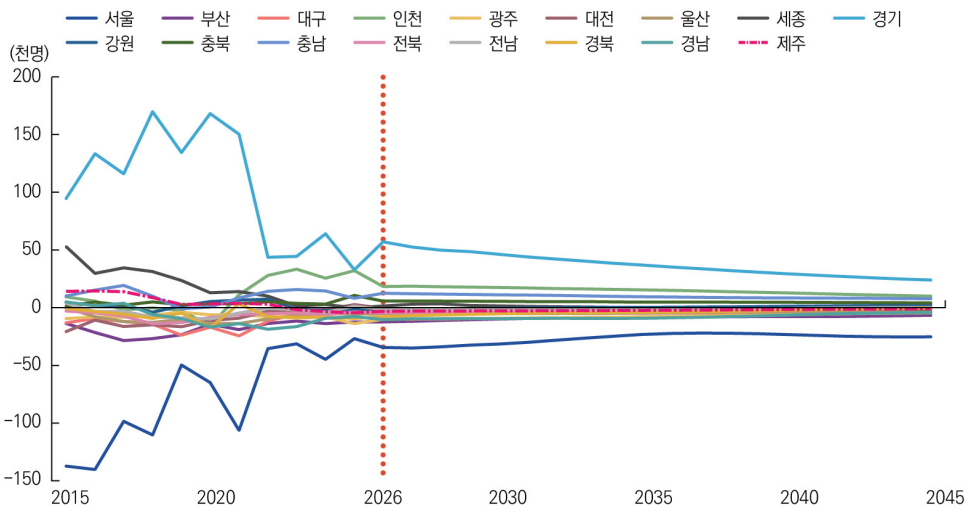
다음은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그 폭이 줄어드는 지역이다. 서울은 전망 기간에도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순이동률은 2010년대 -1% 안팎에서 2022년 이후 -0.3~-0.5% 수준으로 낮아진 데 이어 전망 기간에도 -0.3%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순유출 규모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연간 2만명대 초중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부산, 광주, 경남은 순유출이 이어지지만 2045년 순유출 규모가 2025년보다 각각 46.6%, 67.7%, 46.1% 줄어든다. 광주와 울산은 2030년 순이동률이 각각 -0.7%, -0.5%로 다른 지역보다 순유출률이 높지만, 2045년에는 -0.4%, -0.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 인천의 국내이동은 모형 전망값에 최근 이동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모형에는 2023~2025년 주택 공급에 따른 순유입 급증이 전망 기간 전체에 지속되는 것으로 반영되나, 2026년 들어 순유입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2026년 1~9월 실적을 2025년 같은 기간과 대조하여 2026년 순유입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기간의 순유입을 하향 조정하였다.

순이동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지역도 있다. 세종은 2015년 순이동률이 가장 컸던 지역이지만, 전망 기간에는 2030년 0.4%의 순유입에서 점차 줄어 2037년 순유출로 전환되고 2045년 순이동률은 -0.2%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22] 반대로 강원은 2023년 순유출로 바뀐 뒤 순유출 폭이 점차 줄어 2030년대 초반 소폭의 순유입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제주는 2010년대 중반 2%대의 순유입을 보였으나 2023년 순유출로 바뀌었으며, 전망 기간에는 순이동률이 2030년 -0.4%에서 2045년 -0.2%로 순유출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과 유출이 균형에 가까워지는 지역도 있다. 과거 순유출이 주로 나타났던 경북과 전북은 2045년에 가까울수록 순유출이 0에 수렴하고, 전남과 대전은 전망 기간 내내 순이동률이 0에 가까워 유입과 유출이 사실상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지역별 순이동[23] 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22) 세종의 국내이동은 모형 전망값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 이전 계획 중 단기 목표 인원인 2027년 이전 인원(2,995명)을 반영하였으며, 1차 이전 이후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순유입된 규모와 연차별 유입 비중을 참고하여 가족 동반을 포함한 인구(2025년 평균가구원수 2.2명 적용,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가 5년에 걸쳐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순이동은 한 지역의 시도 간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으로, 양(+)이면 해당 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음(-)이면 순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0] 지역별 순이동률

(단위: %)



주: 세종과 제주는 별도축 적용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제4절 외국인 인구

- **외국인 인구**[24]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서 기준 시점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

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5년 207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45년 344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며, 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25년 4.0%에서 2045년 7.0%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내국인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전남, 충남, 경북, 충북 등에서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전국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대비 2045년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경북(114.6%), 전남(109.0%), 강원(101.6%), 충북(99.7%)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31.3%), 인천(46.6%), 경기(51.4%)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단, 2025~2045년 중 절대적 증가폭은 경기가 34.9만 명으로 가장 크겠으며, 그 외에 경남(12.7만 명), 경북(12.5만 명), 충남(12.1만 명), 서울(11.4만 명)의 증가폭이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구 증가율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외국인 인구 분포는 장기적으로 역전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수도권의 외국인 인구가 117만 명으로 비수도권의 90만 명보다 많지만 2045년에는 비수도권이 175만 명으로 수도권의 169만 명을 넘어서겠다.

24)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서 기준 시점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Ⅲ-11] 지역별 외국인 인구 규모 전망

(단위: 만명)



주: 연말인구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장 지역 인구 및 인구구조

제1절 인구구조

-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45년 55.3%로 감소하는 가운데, 강원·경북·전북·전남은 2040년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50% 아래로 하락
-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8%로 상승하며, 경북·강원·전북·경남의 비중이 44~46%로 높을 것으로 전망

총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69.2%에서 2045년 55.3%로 13.9%p 낮아지고, 강원·경북·전북·전남은 2045년에 그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구도 2045년 52.0%로 50%에 근접할 전망이다[25].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2025년 20.7%에서 2045년 37.8%로 17.1%p 높아지며, 경북·강원·전북·경남에서 44%를 넘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속도에서는 울산과 경남, 광주가 두드러진다. 울산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18.2%에서 2045년 40.8%로, 경남은 22.4%에서 44.2%로, 광주는 18.5%에서 40.2%로 각각 21%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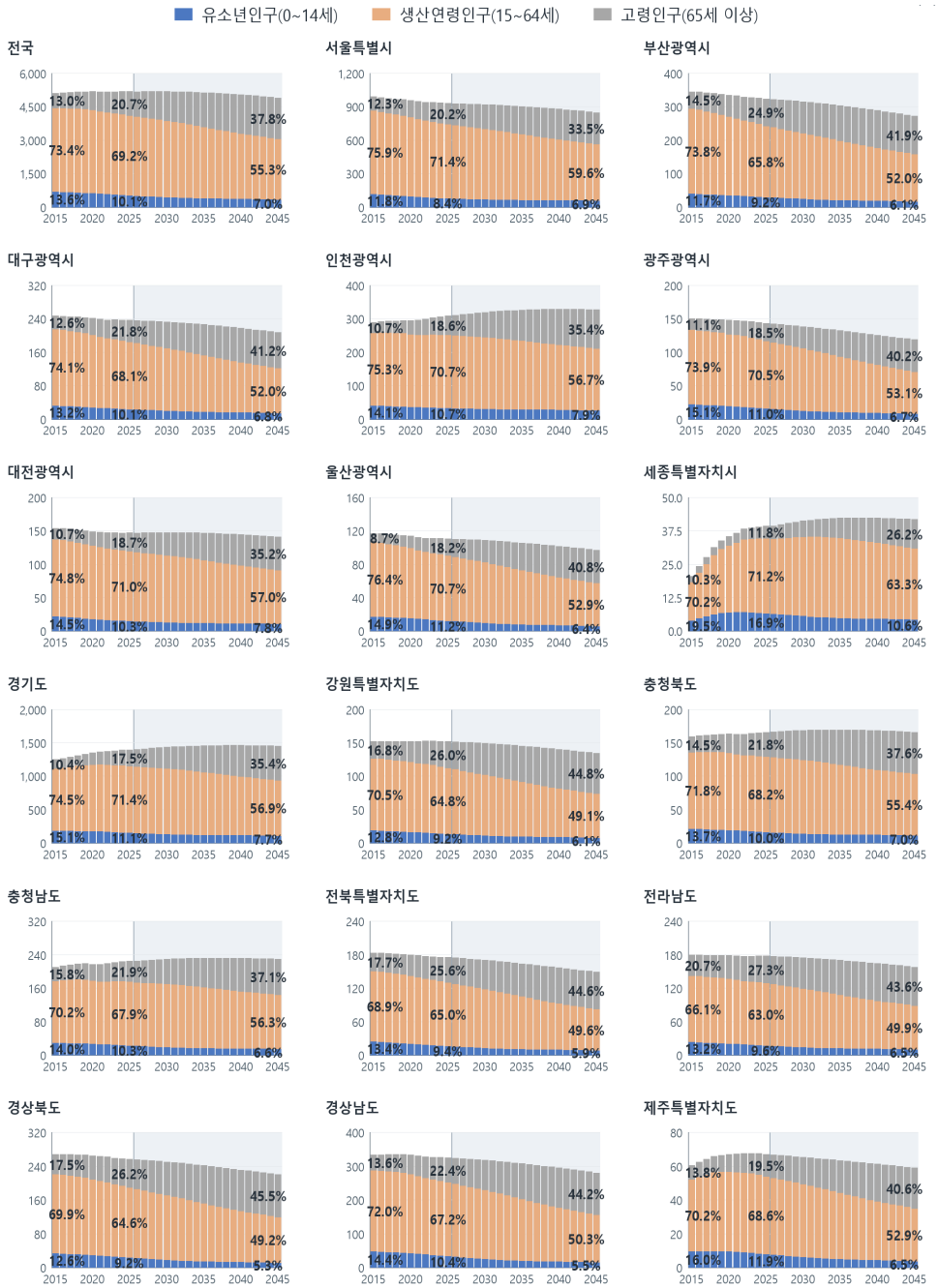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2%에서 2045년 7.5%가 되며, 부산·강원·경북·전북에서는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대비 증가율은 울산·인천·경기에서 높다. 울산은 8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에서 7.3%로, 인천은 1.8%에서 6.7%로, 경기는 1.8%에서 6.6%로 높아지며, 8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각각 388.7%, 298.2%, 286.5% 증가할 전망이다.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25) 전망기간(2026~2045년)의 지역별 인구구조 지표는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림 Ⅲ-12] 지역별 총인구 및 연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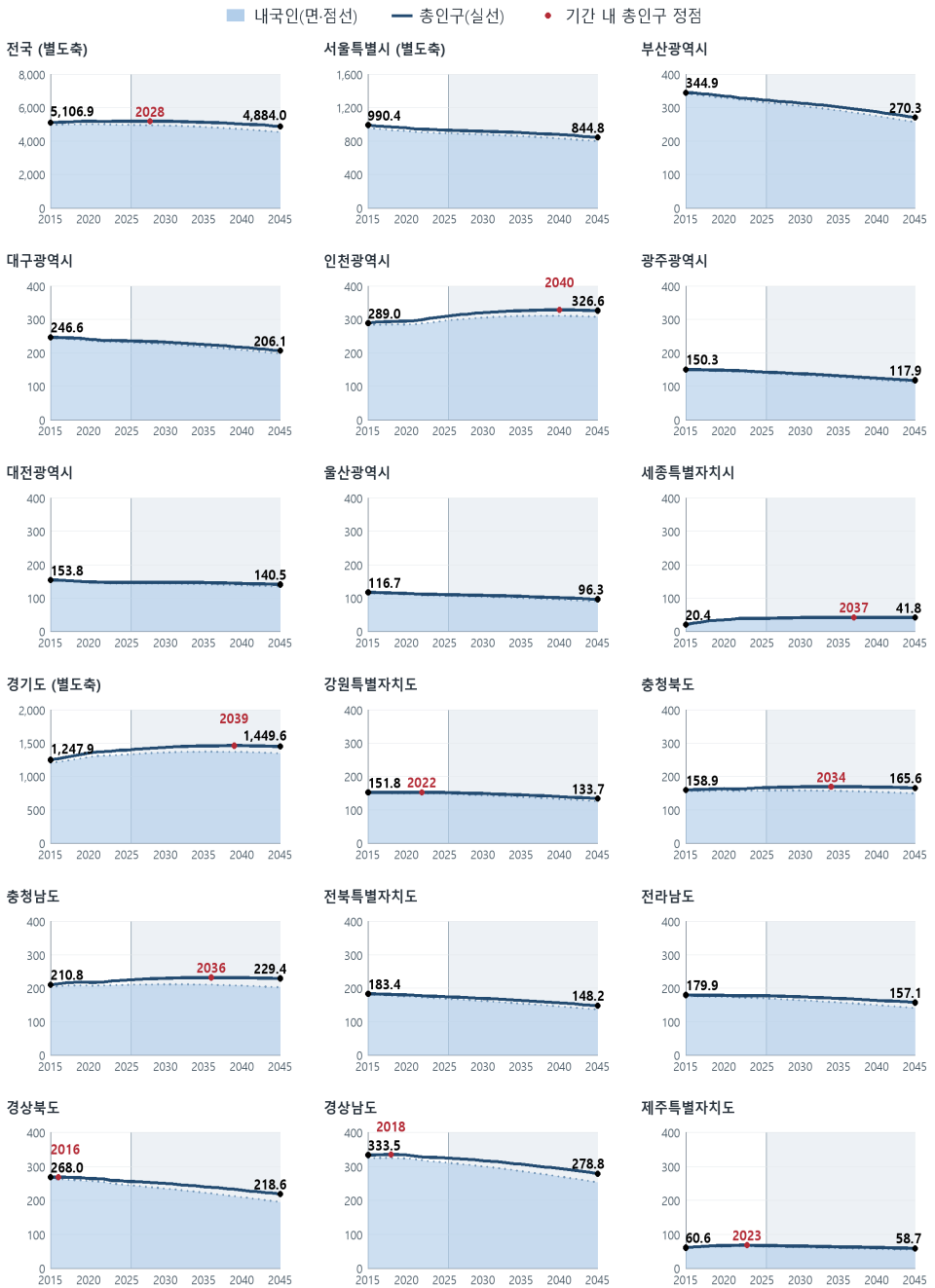
(단위: 만명)



주: 2015~2025년은 「인구총조사」, 2026~2045년은 NABO 지역인구전망(연앙인구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그림 Ⅲ-13] 지역별 총인구 정점

(단위: 만명)



주: 실선은 총인구, 점선은 내국인 인구를 의미하며 2015년 이후 정점이 전망된 경우 연도를 표기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치),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제2절 내국인 인구

- **내국인 인구**는 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하고 감소
- **유소년 인구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
-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2025년 21.3%에서 2045년 39.8%로 상승

내국인 인구[26]는 연말인구 기준으로 2045년 4,540.1만명으로 2025년보다 430.7만명 줄어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1,346.8만명으로 19.1만명, 인천은 307.6만명으로 11.4만명 늘어나며 세종도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은 797.1만명으로 97.6만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크고, 부산·경남·경북도 각각 59.9만명, 58.9만명, 50.4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국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한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도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27]

연령별 구성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유소년 인구 비중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 세종을 제외한 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 내외 범위에 분포하며, 2045년에는 그 비중이 5.3~7.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으로 본 고령화 수준은 특히 비수도권 도 지역에서 높을 전망이다.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이미 26.0~28.5%인 전남, 경북, 강원, 전북은 2045년에 47.3~50.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2042년부터 고령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고, 전남·전북은 2044년, 강원·경남은 2045년부터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속도에서는 경남과 울산이 두드러진다.[28]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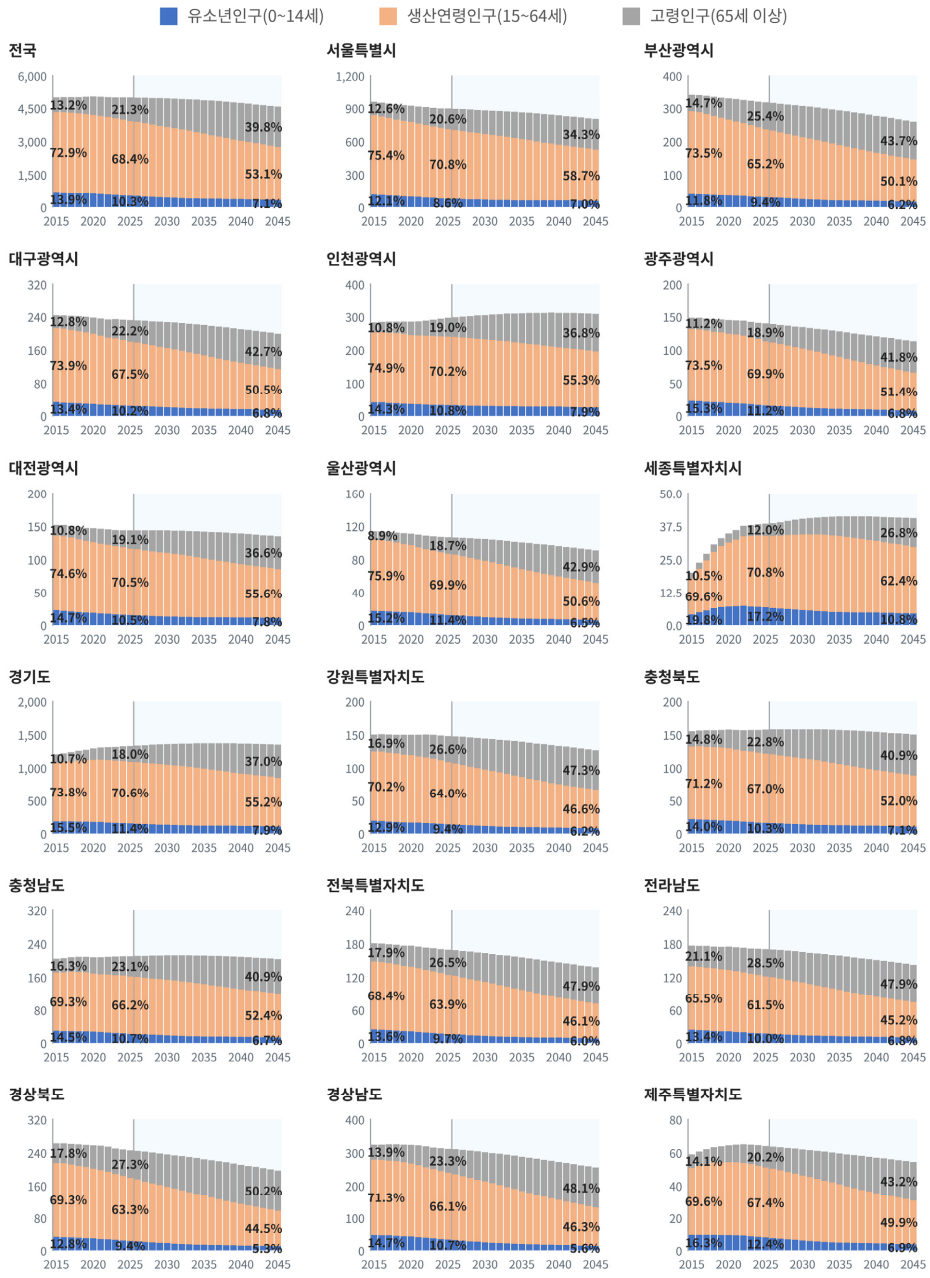
26) 내국인 인구 전망은 출생, 사망, 국내 이동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외국인 인구 중 귀화하여 내국인으로 편입되는 인구는 전망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7) 2025년 이후 내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충북·충남·경기·세종·인천이며, 정점 연도는 각각 2029년, 2031년, 2036년, 2036년, 2038년으로 정점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충남은 총인구가 2045년에 2025년보다 많지만 내국인 인구는 7.4만명 적고, 충북은 총인구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내국인 인구는 8.4만명 줄어, 외국인 인구 증가가 내국인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8) 경남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2.8%에서 2045년 48.1%로, 울산은 18.2%에서 42.9%로 각각 24%p 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14] 지역별 내국인 인구 및 연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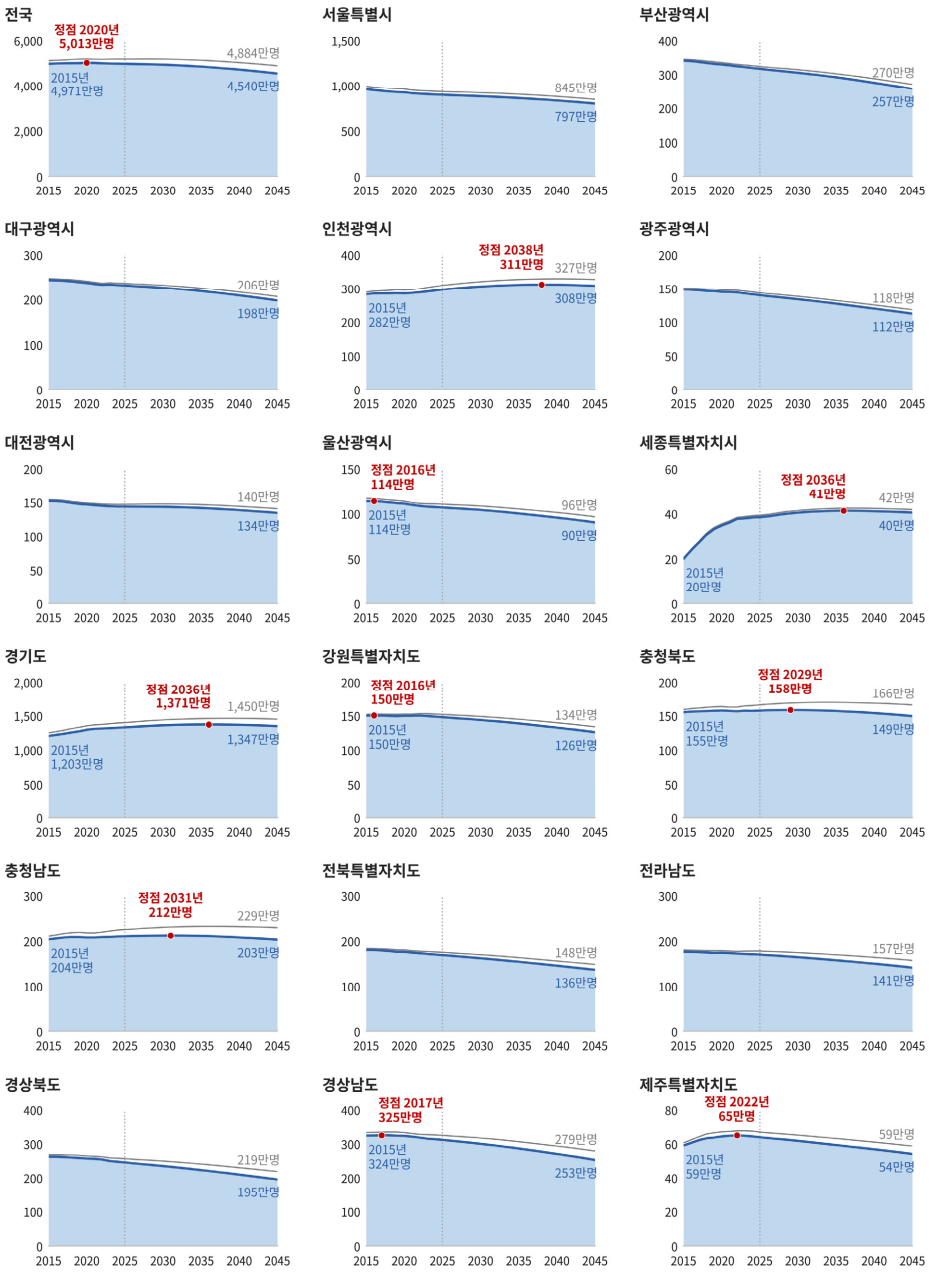
(단위: 만명, %)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그림 Ⅲ-15] 지역별 내국인 인구정점

(단위: 만명)



주: 실선은 내국인 인구, 점선은 총인구를 의미하며, 2015년 이후 정점이 전망된 경우 연도를 표기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치),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제3절 외국인 인구

- **외국인 인구**는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소폭 하락
- 전체적으로 내국인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서 기준 시점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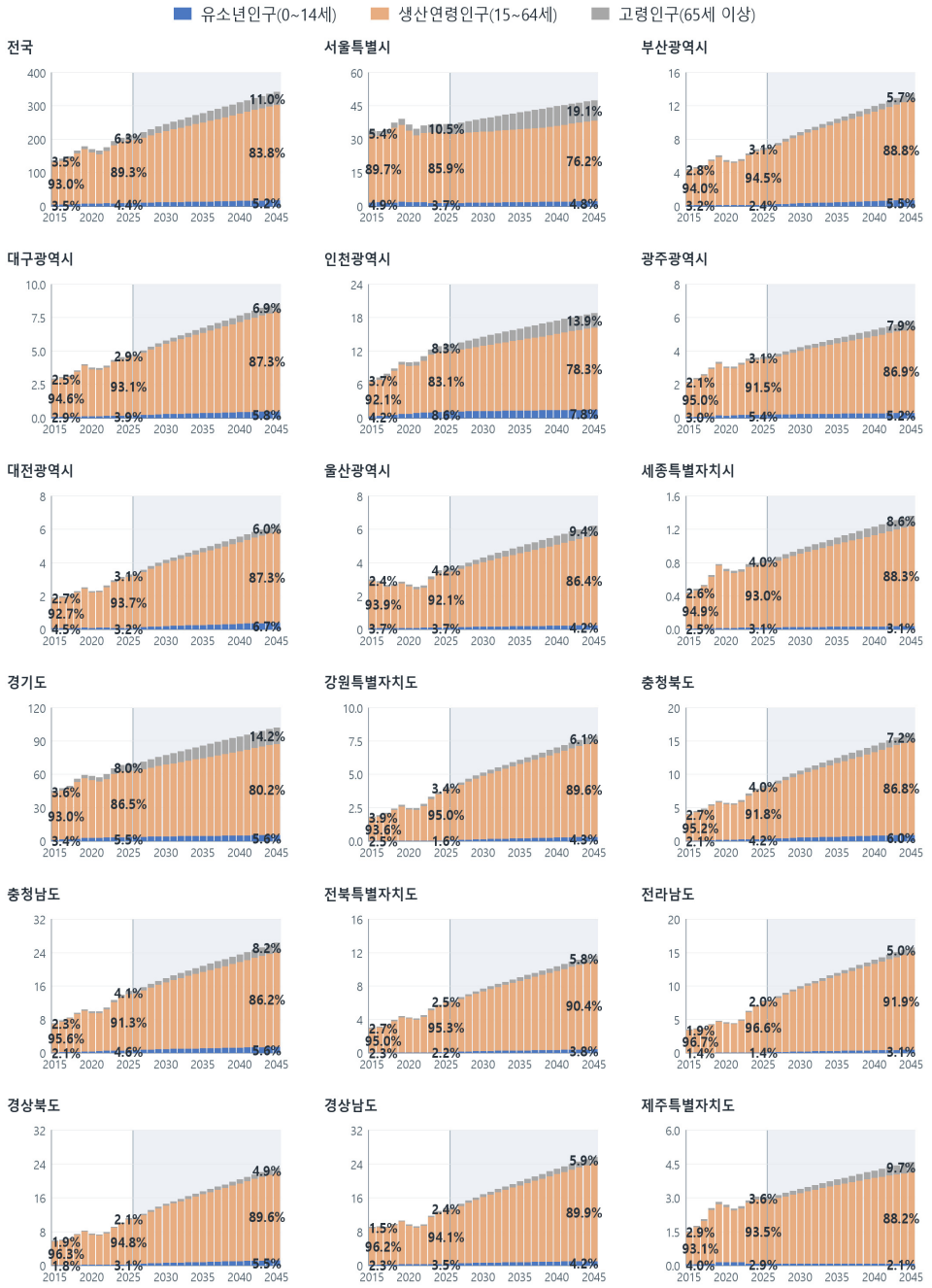
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5년 207만 명에서 2045년 344만 명으로 137만 명(66.0%) 증가할 전망이며, 증가분의 대부분이 15~64세 생산연령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45년 중 생산연령인구는 184만 명에서 288만 명으로 104만 명 증가하며, 0~14세 유소년 인구는 9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9만 명 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3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25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내국인 대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정주 외국인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89.3%에서 2045년 83.8%로 소폭 하락하겠다. 지역별로는 기존 외국인 대비 신규 외국인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서울은 2025년 85.9%에서 2045년 76.2%로, 경기는 86.5%에서 80.2%로 하락이 예상된다. 외국인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적으로 2025년 6.3%에서 2045년 11.0%로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에서 19.1%로, 경기가 8.0%에서 14.2%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25년 4.4%에서 2045년 5.2%로 소폭 증가하겠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그림 Ⅲ-16] 지역별 외국인 인구 및 연령구조

(단위: 만명)



자료: 국가데이터처(실적), 국회예산정책처(전망)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Ⅳ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1장 지역인구전망의 주요 결과

총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전국 단위의 장기적인 추세로 제시될 경우, 개별 지역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의 인구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와 속도, 방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보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일부 지역은 총인구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구 역시 지역별 산업구조와 인구이동 특성에 따라 그 규모와 비중이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국 인구변화의 장기적 흐름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전망하고, 출생·사망·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외국인 인구 등 주요 인구집단의 변화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의 시점과 속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전국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2045년말에는 4,88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의 시작 시점과 감소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대비 2045년 인구가 각각 9.1%, 16.3%, 12.7%, 17.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인천·경기와 충청권 일부 지역은 상당 기간 인구증가세를 유지한 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5년 50.9%에서 2045년 53.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 인구변동의 주된 요인은 국내이동에서 자연감소로 변화한다.

과거 지역별 인구증감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과 유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자연감소의 영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은 국내이동에 따른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감소가 확대되고, 경기와 인천은 인구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 증가로 총인구규모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역시 충남·충북 등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도 자연감소가 점차 주요한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지역 인구감소가 단순히 지역 간 인구유출을 억제하거나 인구유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양상에도 지역별 차이가 확대된다.

전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69.2%에서 2045년 55.3%로 하락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에서 37.8%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경남·강원·전북은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4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경북·전북·전남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50%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울산·광주 등은 현재의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2025년 대비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고령화의 수준뿐만 아니라 변화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과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공공서비스와 재정수요가 변화하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외국인인구 증가가 지역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 외국인 인구는 2025년 207만명에서 2045년 344만명으로 증가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7.0%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인구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보다 도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외국인인구 비중은 일부 도지역에서 10%를 상회할 전망이다. 충남·충북 등 일부 지역은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총인구 감소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때 내국인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의 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2장 정책적 시사점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은 상당 기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확충되어 왔다.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주거, 보건·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공급 역시 증가하는 인구와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지역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외국인인구의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확충 중심의 접근뿐만 아니라 장래 인구 규모와 구조에 부합하도록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편하는 방안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분야별 공공서비스 수요와 공급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설과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실제 이용 수요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소년인구 감소는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지역의 노동공급과 경제활동 여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돌봄·장기요양 등 돌봄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장사시설의 처리능력과 지역별 접근성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광역적 공동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시설의 확충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구감소가 공공서비스 수요나 재정지출의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며, 인구밀도가 낮아질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1인당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지역별 수요 변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공동활용, 기능재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인구변화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지역별 인구구조와 변화 속도가 다른 만큼, 정책 대응 역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돌봄, 교통 등 필수 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구의 공간적 분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 고령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비중의 현재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와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를 함께 고려한 시설 및 인력 계획이 요구된다.

외국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내국인 중심 인구구조를 전제로 한 정책 수요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인구의 유입은 지역의 노동공급과 인구규모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거·교통·보건·교육 등 생활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외국인인구의 규모와 연령구조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재정수요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 인구변화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규모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와 세입 기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는 복지·보건·교육 등 분야별 재정수요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화는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돌봄·의료 관련 지출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며, 유소년인구 감소로 교육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들더라도 기존 시설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단기간에 감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인구의 연령구조와 체류 특성 등에 따라 노동공급, 지역경제 및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정수요를 검토할 때는 총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연령별·국적별 인구구조와 지역별 변화 속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 중장기 재정계획과 공공시설 투자계획은 인구 뿐 아니라 지역별 서비스 이용률, 기존 공급 수준, 접근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구전망은 향후 인구변화의 방향과 규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과 재정정책의 중장기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지역별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속도, 외국인인구 증가 등은 향후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구학적 요인이다. 인구감소기에 요구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일률적인 축소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 규모와 구조에 부합하도록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지역인구전망은 장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지출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의 의의를 갖는다. 다만, 전망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전망은 과거의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세와 지역 간 차이를 토대로 장래 인구변화를 전망한 것으로, 세종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등 일부 확인 가능한 사항은 제한적으로 반영하되, 그 밖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향후 정책 변화의 효과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향후 지역의 산업·고용 여건과 인구이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전망은 정책의 시행 효과를 고려한 미래 인구가 아니라, 과거의 인구변동 추세에 따른 장래 인구변화의 기준 경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인구전망은 출생·사망·인구이동에 관한 일정한 전제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인구변화는 전망경로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외국인 유입은 산업 및 고용여건, 교통망 확충,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셋째, 이번 전망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한 시도 내에서 나타나는 인구변화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 특히 대도시와 주변 지역, 도시와 농촌 등 지역 내부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속도 및 인구이동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망 결과를 특정 지역의 확정적인 미래로 해석하기보다는 중장기 인구변화의 방향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전망은 출생·사망·인구이동에

관한 기본 전망경로만 제시하고, 주요 전제의 변화에 따른 대안 시나리오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 전제의 변화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인구변동요인의 변화가 지역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부 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전망 방법론

1. 출생

지역별 출산율 전망은 전국의 「NABO 인구전망(2025)」의 전망을 따른다.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2025년 실적과 2026년 잠정치를 반영하여 단기 조정하였으며, 조정분은 2030년까지 선형으로 축소되어 중장기적으로는 「NABO 인구전망(2025)」과 같은 경로를 따른다.

출산율 전망모형은 단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진료비 지원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2027년까지 지역별·연령별 출산율을 전망하였다. 2028년 이후에는 「NABO 인구전망」의 전국 연령별 출산율과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별·연령별 출산율을 활용하여 누적출산율을 산출하고, 곰핏(Gompertz) 변환을 적용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전국과 지역 간 관계식을 추정하여 지역별·연령별 출산율을 전망하였다.

누적출산율을 별도의 변환 없이 선형회귀모형에 적용할 경우, 전망 과정에서 연령별 출산율이 음(-)의 값을 갖거나 누적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의 상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누적출산율에 곰핏 변환을 적용하였다. 곰핏 변환은 누적분포함수(CDF)를 이중 로그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변환된 값을 이용하여 전망함으로써 누적출산율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곰핏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CumASFR_{r,t,a} = \sum_{x=15}^{a} ASFR_{r,t,x}$$

$$F_{r,t,a} = \frac{CumASFR_{r,t,a}}{Max\,TFR_{r,t}}, \quad Max\,TFR_{r,t} = 2.1$$

$$G_{r,t,a} = \ln[-\ln(1 - F_{r,t,a})]$$

곰핏 변환은 먼저 15세부터 연령 a까지의 누적 연령별 합계출산율($CumASFR_{r,t,a}$)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연도(t) 및 지역(r)의 최대 합계출산율($Max\,TFR_{r,t}$)로 나누어 정규화한다($F_{r,t,a}$). 이때 최대 합계출산율은 정규화된 누적출산율이 1에 도달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상한값으로, 본 분석에서는 2.1명을 적용하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참조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한 것이다. 이후 정규화된 누적출산율에 이중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곰핏 변환값($G_{r,t,a}$)을 산출한다.

전국 및 지역의 출산율에 곰핏(Gompertz) 변환을 적용한 후, 지역의 연령별 출산율을 전망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G_{r,t,a} = \alpha_{r,a} + \beta_{r,a} G_{n,t,a} + \epsilon_{r,t,a}$$

여기서 $G_{r,t,a}$는 지역(r), 연도(t), 연령(a)의 누적출산율에 대한 곰핏 변환값이며, $G_{n,t,a}$는 동일 연도 및 연령의 전국 누적출산율에 대한 곰핏 변환값이다. 회귀분석에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측값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weight = \exp[\lambda \times (year - 2024)], \ \lambda = 0.5$$

위 식에서 year는 관측연도를 의미하며, λ는 최근 자료에 부여하는 가중치[29]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수이다.

29)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0.3 이하의 낮은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2027년 단기 전망과 2028년 이후의 장기 전망 사이에 점프 편향이 최소로 발생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점프 편향을 방지하였다.

2. 사망

지역별 사망전망은 전국의 성별·연령별 사망률 경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지역별로 전국 대비 사망수준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반영하는 로그격차 모형(log-gap model)으로 지역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전국 사망률은 「NABO 인구전망(2025)」의 전망을 따른다.[30]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2025년 실적과 2026년 잠정치를 반영하여 단기 조정하였으며, 조정분은 2034년까지 선형으로 축소되어 중장기적으로는 「NABO 인구전망(2025)」과 같은 경로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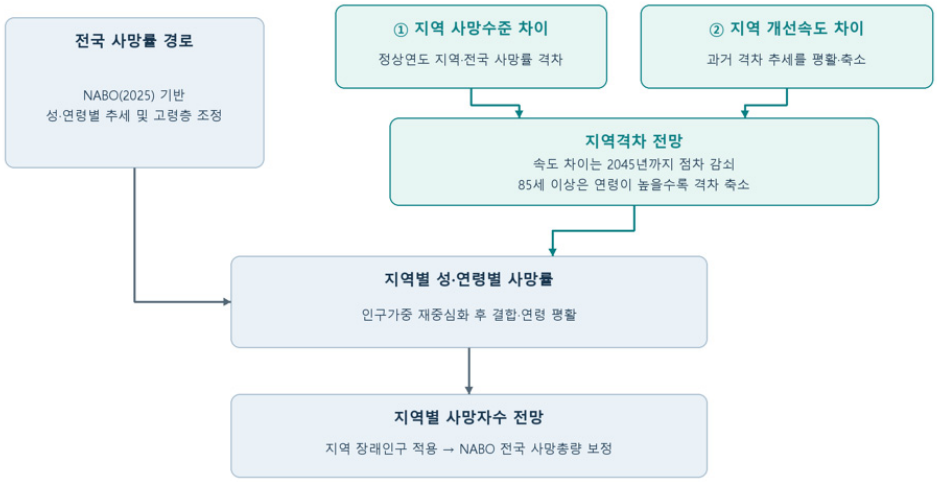
지역별 사망률은 전국 사망률에 지역별 로그 사망률 격차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격차의 수준은 2015~2019년과 2023~2025년의 평균으로, 격차의 변화속도는 2010~2019년과 2023~2025년 자료에 대한 선형회귀(OLS) 기울기로 추정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2020~2022년은 제외하였다. 단일연령·소규모 지역 자료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별 국소회귀 평활(LOWESS), 관측연수에 따른 신뢰도 가중 축소(shrinkage), 연간 변화폭 상한을 적용하였고, 변화추세의 영향은 전망기간 동안 선형으로 감소하도록 하였다. 표본이 작은 85세 이상은 격차가 100세에서 0이 되도록 전국 수준으로 수렴시켰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인구가중 평균이 1이 되도록 재중심화(re-centering)하여 지역 합계가 전국 사망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최근 사망 동향은 2025년 시도별 사망자 수 실적과 2026년 연간 사망자 수 잠정 중심추정에 맞추어 반영한다. 이러한 단기 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35년부터 10세 이상 전국 집계 사망률이 기준 경로에 접합되도록 한다. 다만 사망자 수가 적은 10세 미만은 2023~2025년의 사망자 수와 인구를 합산하여 단년 변동을 완화하였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30) 사망모형은 홍기석, 「지역 인구전망 모형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6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부록 그림-1] 사망 전망 모형 구조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별 사망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전국 사망률과 지역 사망률 간의 로그격차(log mortality gap)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지역 r, 성별 s, 연령 x, 연도 t의 로그격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_{r,s,x,t} = \ln m_{r,s,x,t} - \ln m_{N,s,x,t}$$

여기서 $m_{r,s,x,t}$는 지역별 사망률, $m_{N,s,x,t}$는 전국 사망률을 의미한다. 로그격차가 양(+)이면 해당 지역의 사망률이 전국보다 높고, 음(−)이면 낮음을 의미한다[31]. 지역별 기준 로그격차($\bar{g}_{r,s,a}$)는 관측 로그격차를 기준기간(2015~2019, 2023~2025)에 걸쳐 평균한 값이다. 격차의 변화속도는 2010~2019년과 2023~2025년 자료의 선형추세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코로나19의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20~2022년은 제외한다. 또한 지역별·연령별 사망률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평활화와 축소(shrinkage) 절차를 적용하고, 격차의 변화추세가 장기로 갈수록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31) 예를들어 $g = 0.1$ 이면 지역사망률이 전국의 약 1.105배($e^{0.1}$)이다.

$$\hat{g}_{r,s,x,t} = \bar{g}_{r,s,x} + \hat{\beta}_{r,s,x} \sum_{r=2025}^{t} w_{\tau}$$

여기서 $\bar{g}_{r,s,x}$는 지역별 기준 로그격차, $\hat{\beta}_{r,s,x}$는 로그격차의 연간 변화계수, 가중치 w_{τ}는 τ년 한 해의 변화분 $\hat{\beta} w_{\tau}$에 붙으며 2025년 1에서 매년 0.05씩 줄어 2045년에 0이 되므로 연간 변화분은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지고, 누적 변화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다가 2045년 이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한 로그격차를 전국 사망률에 적용하여 지역별 사망률을 산출한다.

$$\hat{m}_{r,s,x,t} = \hat{m}_{N,s,x,t} \times \exp(\hat{g}_{r,s,x,t})$$

즉, 지역별 사망률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망률 하락경로를 따르면서 지역 고유의 사망수준과 격차 변화가 반영되도록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성·연령별 사망률에 해당 인구를 곱하여 사망자 수를 산출한다.

$$\hat{D}_{r,s,x,t} = \hat{P}_{r,s,x,t} \times \hat{m}_{r,s,x,t}$$

기준연도의 지역 간 사망률 격차는 전망기간 중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나 확대되지도 않으며, 상대적으로 사망률 수준이 높았던 지역의 하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난다. 세종과 같이 인구 규모가 작고 연령구조가 전국평균과 차이나는 지역은 기준연도 연령별 사망률의 변동성이 커 전망 초기의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 대비 기대수명 편차 추이를 보면 서울의 우위는 전망기간 중 남성 1.5세에서 1.0세로, 여성 1.4세에서 0.8세로 축소되고, 경북·경남 등 하위 지역의 열위도 완만하게 줄어든다.

반면 연령대별 사망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의료기술 발전, 생활환경 개선, 건강행태 변화 등에 힘입어 사망률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령층 사망률은 하락하지만 절대 수명의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부담이 확대되면서 변화속도는 완만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도별 사망률 전망은 전국 수준의 구조적 추세를 공유하면서 지역 간 상대적 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는 양상으로 요약된다. 2015~2025년 지역별 연령별 사망

률은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하락하였으나, 감소폭은 차이를 보였다. 70대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여 70~74세는 26.6%, 75~79세는 28.8% 하락하였다. 반면, 90세 이상의 하락률은 4.5%로 고연령층에서 사망률 하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부록 그림-2]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 증감률(2015년 대비 2025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전국	-20.2	-20.2	-17.7	-17.8	-20.8	-26.6	-28.8	-18.2	-12.4	-4.5
서울	-23.8	-19.7	-18.0	-13.3	-18.2	-28.8	-32.5	-22.0	-21.1	-12.2
부산	-21.5	-16.4	-10.1	-16.4	-16.2	-24.2	-27.7	-21.6	-15.8	-4.8
대구	-18.6	-18.5	-14.7	-19.1	-19.4	-27.5	-30.0	-24.0	-20.4	-9.0
인천	-26.0	-16.7	-17.1	-16.7	-24.6	-23.9	-26.8	-14.0	-9.8	-2.2
광주	-3.3	-13.1	-27.3	-18.3	-19.0	-33.2	-33.0	-28.0	-22.6	-11.1
대전	-10.5	-14.7	-17.7	-15.6	-23.3	-25.5	-29.6	-20.5	-7.3	-7.2
울산	-4.6	-27.3	-16.7	-23.9	-32.0	-41.4	-37.6	-16.2	-10.3	-4.8
세종	-23.2	-56.2	-43.0	-43.2	-39.2	-33.3	-34.7	-26.9	-0.1	-1.9
경기	-15.9	-23.9	-18.4	-20.4	-19.3	-28.7	-28.5	-18.7	-10.3	-1.9
강원	-26.3	-19.5	-12.3	-20.9	-16.4	-22.0	-31.4	-18.2	-5.5	-1.1
충북	-19.5	-25.0	-25.3	-11.6	-25.7	-27.4	-25.8	-10.4	-10.4	-0.7
충남	-19.2	-17.0	-14.8	-20.6	-15.7	-24.2	-26.2	-12.9	-12.2	-7.2
전북	-22.0	-17.6	-19.6	-13.8	-22.2	-19.1	-27.4	-11.6	-6.8	-3.1
전남	-28.1	-18.3	-17.8	-17.1	-28.0	-21.8	-24.0	-14.5	-7.1	-0.9
경북	-16.2	-16.2	-17.4	-16.7	-24.5	-26.3	-25.1	-10.6	-4.1	-3.2
경남	-23.7	-20.1	-19.6	-19.5	-26.5	-24.4	-26.2	-20.1	-13.1	-1.2
제주	-23.8	-3.7	-7.5	-10.3	-15.9	-22.9	-19.8	-4.0	-7.8	-0.9

주: 증감률은 해당 연령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의 2015년 대비 2025년 변화율임. 음(-)의 값은 사망률 하락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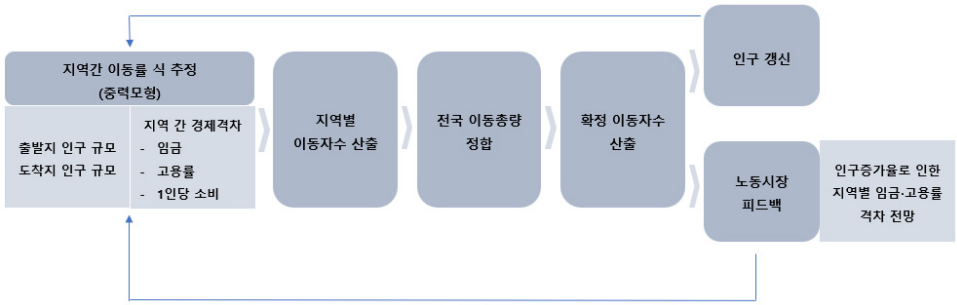
다만 본 전망은 지역 간 사망률 격차의 원인(의료 접근성, 소득·건강행태, 산업구조 등)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지 않았으므로, 격차 축소는 통계적 수렴 가정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단기조정은 2025년 실적치와 함께 2026년 1~7월 누적 사망자 수 실적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2026년 조사망률은 전년대비 0.1명 낮아진 7.0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의 단기 실적은 장기 사망률이나 기대수명을 낮추기보다 실적을 반영한 단기 조정값으로 판단하여 2045년 조사망률은 NABO(2025)와 동일하게 전망하였다.

3. 국내이동

국내이동 전망은 지역 간 이동 결정식 추정, 지역별 이동자수 산출, 전국 이동총량 정합, 인구 갱신, 노동시장 피드백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로 설계하였다.

[부록 그림-3] 국내이동 전망 모형 구조도



자료: 홍기석, 「지역 인구전망 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6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 규모, 지역 간 경제격차를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으로 지역 간 이동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계수를 이용하여 지역쌍·성·연령별 이동자수를 산출하고, 이를 전국 이동총량에 맞추어 정합하여 확정 이동자수를 도출하였다. 확정된 이동자수는 출생·사망·국제이동과 함께 지역별 인구를 갱신하는 데 사용된다.

갱신된 인구의 증가율은 노동시장 피드백을 통해 지역별 임금과 고용률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달라진 지역 간 경제격차가 다음 연도 이동 결정식에 다시 투입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인구이동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 변화가 다시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반영하였다.

지역 간 이동 결정식은 두 지역 간 이동량이 각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지역 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중력모형의 기본 구조를 따르며,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frac{\ln(m_{ij,s,g,t})}{P_{i,s,g,t-1}} = D'_{ij,g,t}\delta + \beta_g^O \ln P_{i,s,g,t-1} + \beta_g^D \ln P_{j,s,g,t-1} + \gamma_g' \overline{\Delta X_{ij,t-1}} + u_{ij,s,g,t}$$

중력모형 식은 출발지 i에서 도착지 j로 이동하는 성별 s, 연령집단 g의 연간 이동자수($m_{ij,s,g,t}$)를 출발지의 전년도 성·연령집단별 인구($P_{i,s,g,t-1}$)로 나눈 이동률을 로그로 변환한 값을 종속변수로 한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두 지역의 전년도 성·연령집단별 인구 규모($P_{i,s,g,t-1}$, $P_{j,s,g,t-1}$)를 포함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출과 유입이 많아지는 규모효과를 반영한다. 인구 규모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계수(β_g^O, β_g^D)는 연령집단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도착지와 출발지 간 임금, 고용률, 1인당 소비의 격차를 하나의 벡터로 구성하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격차의 평균($\overline{\Delta X_{ij,t-1}}$)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지역 간 경제적 유인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계수(γ_g')도 연령집단별로 추정하여,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층과 그 밖의 연령층 사이의 반응 차이를 반영하였다.

이 밖에 지역쌍 고정효과, 출발지×연령집단 및 도착지×연령집단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로 구성된 더미 벡터($D_{ij,g,t}$)를 포함하였다. 지역쌍 고정효과는 두 지역 간 거리나 생활권처럼 지역쌍마다 고유한 이동 비용을 반영한다. 지역×연령집단 고정효과는 지역별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출입 성향을 반영한다. 연도 고정효과는 전국 공통의 시기별 이동 여건을 반영한다.

추정된 이동 결정식[32]에 전년도 인구와 경제격차를 대입하여 지역쌍·성·연령별 이동률을 산출하고, 이를 출발지의 전년도 인구에 곱하여 이동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이동자수는 그 합이 성·연령별 전국 시도간 이동 총량과 일치하도록 비례조정하여 확정 이동자수를 도출한 후, 지역별 전입과 전출을 집계하여 순이동을 산출하였다.

32) 이동 결정식은 2011~2025년 지역쌍·성·연령집단별 자료(관측치 108,931개)로 추정하였으며, R^2는 0.946이다. 인구 규모 변수와 지역×연령집단 고정효과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임금·고용률·1인당 소비 격차 전체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변수별로는 고용률 격차와 임금 격차가 1% 수준에서, 1인당 소비 격차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노동시장 피드백은 인구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을 자극하여 임금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인구 증가율이 임금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w_{r,s,g,t} = \alpha^W + \nu^W_{r,s,g} + \lambda^W_t + \theta^W \Delta \ln P_{r,s,g,t} + \varepsilon^W_{r,s,g,t}$$
$$e_{r,s,g,t} = \alpha^E + \nu^E_{r,s,g} + \lambda^E_t + \theta^E \Delta \ln P_{r,s,g,t} + \varepsilon^E_{r,s,g,t}$$

여기서 w와 e는 각각 지역 r, 성별 s, 연령집단 g의 임금과 고용률이다. $\Delta \ln P_{r,s,g,t}$는 인구증가율이며, 지역·성·연령집단 고정효과($\nu^W_{r,s,g}$, $\nu^E_{r,s,g}$)와 연도 고정효과(λ^W_t, λ^E_t)를 통제하였다. 즉 θ^W와 θ^E가 곧 인구증가율이 임금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인구증가율은 임금과 고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함께 결정되므로, 위 식을 그대로 추정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의 영향을 배제한 인구증가율을 도구변수[33]로 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34]을 적용하였다. 1단계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ln P_{r,s,g,t} = \tau \Delta \ln \left(\sum_{x \in g} \frac{P^{\text{nat}}_{s,x,t}}{P^{\text{nat}}_{s,x-10,t-10}} P_{r,s,x-10,t-10} \right) + \nu^P_{r,s,g} + \lambda^P_t + \epsilon_{r,s,g,t}$$

위 식에서 괄호 안의 값은 10년 전 지역 r의 연령 $x-10$ 인구에 동일 코호트의 전국 인구 변화율($P^{nat}_{s,x,t} / P^{nat}_{s,x-10,t-10}$)을 곱하고, 이를 연령집단 g 안에서 합산한 것이다. 이는 10년 전 해당 지역의 연령구조가 전국 평균 수준의 인

33) 다만 도구변수는 해당 기간의 실제 이동을 배제한 값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10년 전 연령 구조 자체가 그 이전 이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경기·인천처럼 인구 유입이 장기간 지속된 지역에서는 내생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추정된 계수는 엄밀한 인과효과라기보다 전망에 활용하기 위한 근사적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4) Durbin-Wu-Hausman 검정 결과, 임금 식에서는 외생성 귀무가설이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2SLS는 도구변수가 타당하면 설명변수의 내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치추정량을 제공하므로, 두 식의 추정 방법을 통일하여 고용률 식에도 2SLS를 적용하였다. 고용률 식에서는 내생성 검정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며, 인구증가율의 효과도 OLS(−0.672, p=0.003)와 2SLS(−0.896, p=0.001)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추정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구 변화를 겪었을 경우 예상되는 인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별 연령구조에 따른 인구 변화는 반영하지만, 해당 지역의 현재 임금·고용 여건에 따른 이동과는 무관하므로 도구변수로서 외생성을 갖는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인구 증가율의 적합값을 이용하여 θ^W와 θ^E를 추정하였다.[35]

전망 기간에는 매년 갱신된 지역별 인구 증가율을 노동시장 피드백 식에 적용하여 지역별 임금과 고용률을 산출하였다. 1인당 소비 격차[36]는 지역 간 소득·소비 수준이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매년 2%씩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37] 이렇게 갱신한 임금·고용률·소비를 지역 간 격차로 변환하여 다음 연도 이동 결정식에 투입함으로써, 인구 변화가 경제격차를 거쳐 다시 인구이동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경제격차가 국내이동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A는 청년층 인구가 많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도시이고, 지역 B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고 하자.

본 모형에서 지역의 임금과 고용률은 연령집단별 임금과 고용률을 그 지역의 20~69세 인구 구성비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임금 수준이 변하지 않더라도 연령구조가 바뀌면 지역의 평균 임금이 달라진다. 지역 B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50~60대의 비중이 커지면 지역 B의 평균 임금은 낮아진다. 지역 A도 고령화되지만 그 속도가 더 느리므로, 두 지역 간 임금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임금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은 임금이 높은 지역 A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

반면 인구 감소는 이 격차를 일부 완화한다. 지역 B에서 인구가 빠르게 줄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남아 있는 인구의 임금과 고용률이 다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B는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38],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

35) 2SLS 추정 결과 인구증가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θ^W)는 -0.293,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θ^E)는 -0.896으로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다. 1단계 회귀에서 도구변수의 계수는 0.770으로 실제 인구증가율과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도구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 통계량은 948.6으로 도구변수 판단 기준을 크게 웃돈다.

36) 1인당 소비 격차는 지역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의 차이를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로 포함하였다. 소비 격차의 연령집단별 계수는 결합검정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하나, 그 영향은 임금·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37) 홍기석, 「지역 인구전망 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6

38)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인구총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0세 이상 고용률은 제주(58.2%), 경북(58.1%), 강원(57.2%), 전남(56.6%) 등 도 지역에서 높고, 울산(39.6%), 서울·부산(각 40.3%) 등 대도시에서 낮다.

지역 평균 고용률은 오히려 지역 A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고용률 격차에는 거의 모든 연령층이 반응하므로, 이는 지역 B에서의 유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1인당 소비 격차는 지역의 소득 수준과 생활비, 소비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며, 연령에 따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15세에서 39세의 청년층은 1인당 소비가 높은 지역, 즉 소비·문화 여건이 풍부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고령층은 1인당 소비가 낮은 지역, 즉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위 예시에서 소비 격차는 청년층을 지역 A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장년·고령층의 지역 B로의 이동을 유도한다. 본 전망에서는 지역 간 1인당 소비 격차가 매년 2%씩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차가 줄어들면 청년층의 대도시 유입 유인과 중장년·고령층의 대도시 유출 유인이 모두 약해진다.

4. 외국인

외국인 인구는 전국의 성·연령별 외국인 인구를 먼저 전망한 뒤 이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기본적으로 NABO(2025)의 전망치를 준용하되 2025~2026년 실적치 및 출산·사망률 수정 등을 반영한 미세조정을 가하였다.

지역별 외국인 인구는 30세를 전후한 연령대별로 전망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는 매년 순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주축이 30세 이하 청년층임을 고려해서다. 30세 이하의 경우, 2023~2025년 기간 중 전국의 30세 이하 외국인 순증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39]을 2026년 이후 전국의 30세 이하 외국인 순증에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이는 매년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의 국내 17개 지역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이들에 대한 각 지역의 상대적 수용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40]

31세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동일 지역 동일 코호트의 전년도 인구가 일정 비율로 잔류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하였다. 이 때 코호트별·연도별 잔류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의 전지역 합이 전국 전망값과 같아지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외국인 전망식은 다음과 같다.

$$F_{r,s,a,t} = \begin{cases} F_{r,s,a,t-1} + \dfrac{\Delta F_{r,s,a \le 30}}{\Delta F_{s,a \le 30}} \cdot \Delta F_{s,a,t} & (a \le 30) \\ F_{r,s,a-1,t-1} \cdot \dfrac{F_{s,a,t}}{\sum_{r} F_{r,s,a-1,t-1}} & (a > 30) \end{cases}$$

위 식에서 $F_{r,s,a,t}$는 지역 r, 성별 s, 연령 a, 연도 t의 외국인 인구를, $F_{r,s,a,t-1}$는 동일 지역 동일 성·연령 집단의 전년도 인구를, $F_{r,s,a-1,t-1}$는 동일 지역 동일 코호트의 전년도 인구를 의미한다. $\frac{\Delta F_{r,s,a \le 30}}{\Delta F_{s,a \le 30}}$는 2023~2025년 중 전국의 성별 청년 외국인 인구 순증에서 지역 r이 차지한 비중을 나타내며,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39) 동 비중은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3~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40) 다만 이러한 배분구조는 지역별 산업 및 고용여건, 외국인 유입정책, 정주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 외국인 인구전망은 해당 가정에 따른 기준경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Delta F_{s,a,t}$은 전국 성·연령별 외국인 인구의 연간 증감폭을 의미한다.

$\frac{F_{s,a,t}}{\sum_{r} F_{r,s,a-1,t-1}}$은 31세 이상 외국인 인구의 전 지역 합을 전국 전망값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성별·코호트별·연도별 잔류 비율이며, 사망 또는 출국으로 기존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를 반영한다.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부 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지역인구전망 통계표 (2026~2045)

[부록 표-1]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총인구(연말)	5,180	5,183	5,184	5,184	5,180	5,174	5,166	5,155	5,142	5,127	5,110	5,091	5,070	5,048	5,025	5,000	4,974	4,946	4,916	4,884
인구변동(연말)	3.4	3.4	1.4	-0.8	-3.5	-6.2	-8.4	-10.5	-13.0	-15.2	-17.1	-19.0	-20.5	-22.0	-23.6	-24.7	-26.1	-28.0	-29.9	-32.0
인구증가율(연말)	0.07	0.07	0.03	-0.01	-0.07	-0.12	-0.16	-0.20	-0.25	-0.30	-0.33	-0.37	-0.40	-0.43	-0.47	-0.49	-0.52	-0.56	-0.61	-0.65
출생	28.6	29.6	29.4	29.1	28.4	27.6	26.7	25.6	24.6	23.6	22.8	22.3	21.9	21.6	21.4	21.3	21.3	21.1	20.9	20.6
합계출산율(명)	0.90	0.94	0.94	0.94	0.93	0.92	0.91	0.90	0.89	0.89	0.89	0.89	0.89	0.90	0.90	0.91	0.92	0.92	0.92	0.92
사망	36.5	37.1	38.3	39.4	40.5	41.6	42.7	43.8	44.9	46.0	47.1	48.1	49.3	50.5	51.8	53.0	54.4	55.8	57.2	58.8
시도간 이동자수	209.8	206.3	202.9	199.4	196.2	193.0	189.9	186.8	183.4	179.9	176.2	172.1	167.7	163.1	158.3	153.4	148.7	144.2	140.1	136.4
유소년인구 비중	9.8	9.5	9.2	8.9	8.6	8.3	8.1	7.9	7.8	7.7	7.7	7.6	7.6	7.6	7.5	7.4	7.3	7.2	7.1	7.0
생산연령인구 비중	68.7	68.0	67.4	66.8	66.2	65.6	64.9	64.1	63.2	62.3	61.4	60.5	59.6	58.7	58.0	57.4	56.9	56.4	55.9	55.3
고령인구 비중	21.5	22.5	23.4	24.3	25.2	26.1	27.0	27.9	28.9	29.9	31.0	31.9	32.8	33.7	34.5	35.1	35.8	36.4	37.0	3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2]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서울특별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927	925	923	921	918	915	912	908	905	901	896	892	887	881	876	870	864	858	851	845
출생	5.4	5.8	5.7	5.7	5.6	5.5	5.3	5.1	4.9	4.7	4.5	4.4	4.3	4.2	4.2	4.2	4.2	4.2	4.2	4.2
사망	5.4	5.5	5.7	5.9	6.1	6.3	6.5	6.7	6.9	7.1	7.2	7.4	7.6	7.8	7.9	8.1	8.3	8.5	8.7	9.0
유소년인구 비중	8.2	8.0	7.8	7.7	7.5	7.4	7.3	7.2	7.2	7.1	7.1	7.1	7.2	7.2	7.2	7.2	7.1	7.0	7.0	6.9
생산연령인구 비중	70.9	70.3	69.7	69.1	68.6	68.0	67.5	66.8	66.1	65.3	64.5	63.8	63.1	62.4	61.8	61.3	60.9	60.6	60.1	59.6
고령인구 비중	20.8	21.7	22.5	23.2	23.9	24.6	25.2	26.0	26.7	27.5	28.3	29.1	29.8	30.4	31.0	31.5	32.0	32.4	32.9	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3]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부산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321	320	318	316	314	312	309	307	305	302	299	296	293	290	287	284	281	277	274	270
출생	1.6	1.6	1.6	1.5	1.5	1.4	1.4	1.3	1.2	1.2	1.1	1.1	1.0	1.0	1.0	1.0	1.0	1.0	1.0	1.0
사망	2.7	2.8	2.8	2.9	3.0	3.1	3.1	3.2	3.3	3.4	3.4	3.5	3.6	3.7	3.8	3.8	3.9	4.0	4.1	4.2
유소년인구 비중	9.0	8.7	8.5	8.2	7.9	7.6	7.4	7.2	7.0	6.9	6.9	6.8	6.8	6.7	6.7	6.6	6.5	6.4	6.3	6.1
생산연령인구 비중	65.2	64.3	63.5	62.9	62.3	61.7	61.1	60.3	59.5	58.6	57.7	56.9	56.1	55.3	54.6	54.1	53.6	53.2	52.6	52.0
고령인구 비중	25.8	27.0	28.0	28.9	29.8	30.7	31.5	32.5	33.5	34.5	35.4	36.3	37.2	38.0	38.7	39.3	39.9	40.5	41.1	4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4]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대구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235	235	234	233	232	231	230	228	227	225	224	222	220	218	216	215	213	211	208	206
출생	1.2	1.2	1.2	1.2	1.2	1.1	1.1	1.0	1.0	0.9	0.9	0.9	0.8	0.8	0.8	0.8	0.8	0.8	0.8	0.7
사망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4	2.4	2.5	2.5	2.6	2.7	2.7	2.8
유소년인구 비중	9.9	9.6	9.3	9.0	8.8	8.5	8.3	8.1	7.9	7.8	7.7	7.7	7.6	7.6	7.5	7.4	7.3	7.1	6.9	6.8
생산연령인구 비중	67.4	66.6	65.8	65.1	64.3	63.6	62.8	61.9	60.8	59.8	58.7	57.7	56.7	55.8	55.0	54.3	53.8	53.2	52.7	52.0
고령인구 비중	22.7	23.8	24.9	25.9	26.9	27.9	28.9	30.1	31.3	32.4	33.5	34.6	35.6	36.6	37.5	38.2	39.0	39.7	40.4	4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5]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인천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312	314	316	318	320	322	323	325	326	327	327	328	328	329	329	329	328	328	327	327
출생	1.9	1.9	1.9	1.9	1.9	1.8	1.8	1.7	1.6	1.6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사망	2.0	2.0	2.1	2.2	2.2	2.3	2.4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6
유소년인구 비중	10.5	10.2	10.0	9.8	9.6	9.3	9.2	9.1	9.0	8.9	8.8	8.8	8.7	8.7	8.6	8.5	8.4	8.2	8.0	7.9
생산연령인구 비중	70.1	69.3	68.5	67.8	67.1	66.4	65.7	64.8	64.0	63.1	62.2	61.3	60.5	59.7	59.1	58.6	58.1	57.7	57.2	56.7
고령인구 비중	19.4	20.5	21.5	22.4	23.4	24.3	25.2	26.1	27.1	28.0	29.0	29.9	30.7	31.6	32.3	32.9	33.5	34.1	34.7	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6]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광주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42	141	140	139	138	137	135	134	133	132	130	129	128	126	125	123	122	121	119	118
출생	0.7	0.7	0.7	0.7	0.7	0.7	0.6	0.6	0.6	0.5	0.5	0.5	0.5	0.5	0.4	0.4	0.4	0.4	0.4	0.4
사망	0.9	0.9	0.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유소년인구 비중	10.7	10.3	9.9	9.5	9.1	8.8	8.5	8.3	8.1	8.0	7.8	7.7	7.7	7.6	7.5	7.4	7.3	7.1	6.9	6.7
생산연령인구 비중	70.0	69.3	68.7	68.1	67.5	66.8	66.0	65.0	63.9	62.9	61.7	60.6	59.4	58.3	57.2	56.4	55.6	54.8	54.0	53.1
고령인구 비중	19.3	20.4	21.4	22.4	23.4	24.4	25.5	26.7	28.0	29.2	30.5	31.7	32.9	34.1	35.2	36.2	37.1	38.1	39.1	4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7]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대전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6	146	146	145	144	144	143	143	142	141	140
출생	0.9	0.9	0.9	0.9	0.9	0.9	0.9	0.8	0.8	0.8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사망	0.9	0.9	0.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유소년인구 비중	10.1	9.7	9.5	9.2	9.0	8.7	8.5	8.4	8.3	8.3	8.3	8.2	8.2	8.2	8.2	8.2	8.1	8.0	7.9	7.8
생산연령인구 비중	70.5	69.8	69.2	68.6	68.1	67.5	66.8	66.0	65.1	64.1	63.2	62.3	61.4	60.5	59.8	59.2	58.6	58.1	57.6	57.0
고령인구 비중	19.5	20.5	21.4	22.2	23.0	23.8	24.6	25.6	26.6	27.6	28.6	29.5	30.4	31.3	32.0	32.7	33.3	33.9	34.5	3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8]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울산광역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10	110	109	109	108	108	107	106	106	105	104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출생	0.6	0.6	0.6	0.6	0.6	0.5	0.5	0.5	0.5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3
사망	0.6	0.7	0.7	0.7	0.7	0.8	0.8	0.8	0.9	0.9	0.9	0.9	1.0	1.0	1.1	1.1	1.1	1.2	1.2	1.3
유소년인구 비중	10.8	10.3	9.9	9.5	9.1	8.6	8.3	8.0	7.8	7.6	7.5	7.4	7.3	7.2	7.1	7.0	6.9	6.7	6.5	6.4
생산연령인구 비중	70.1	69.2	68.4	67.6	66.8	66.0	65.0	63.9	62.8	61.6	60.5	59.4	58.3	57.3	56.4	55.7	55.1	54.4	53.7	52.9
고령인구 비중	19.1	20.5	21.7	22.9	24.1	25.4	26.7	28.1	29.5	30.8	32.1	33.3	34.4	35.5	36.4	37.3	38.0	38.9	39.8	4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9]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세종특별자치시)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40	40	41	41	41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출생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사망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0.3
유소년인구 비중	16.5	15.7	15.1	14.5	13.8	13.2	12.7	12.2	11.9	11.6	11.4	11.3	11.2	11.1	11.1	11.0	10.9	10.8	10.6	10.6
생산연령인구 비중	71.3	71.4	71.6	71.7	71.9	71.9	71.9	71.7	71.3	70.8	70.2	69.5	68.7	67.9	67.1	66.4	65.7	65.0	64.2	63.3
고령인구 비중	12.3	12.9	13.3	13.8	14.3	14.8	15.4	16.0	16.8	17.6	18.4	19.2	20.1	21.0	21.9	22.6	23.5	24.3	25.2	2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0]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기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406	1,415	1,423	1,431	1,437	1,443	1,448	1,452	1,455	1,458	1,459	1,461	1,461	1,461	1,461	1,460	1,458	1,456	1,453	1,450
출생	8.6	9.0	8.9	8.9	8.7	8.5	8.3	8.0	7.7	7.4	7.2	7.1	7.0	6.9	6.9	6.9	6.9	6.9	6.9	6.8
사망	7.9	8.1	8.5	8.8	9.1	9.5	9.8	10.2	10.5	10.9	11.2	11.5	11.9	12.2	12.6	13.0	13.4	13.9	14.4	14.9
유소년인구 비중	10.8	10.4	10.1	9.8	9.5	9.2	9.0	8.8	8.7	8.6	8.5	8.5	8.4	8.4	8.3	8.2	8.1	8.0	7.8	7.7
생산연령인구 비중	70.9	70.3	69.7	69.0	68.4	67.8	67.1	66.3	65.3	64.4	63.4	62.5	61.5	60.6	59.9	59.3	58.7	58.2	57.6	56.9
고령인구 비중	18.2	19.3	20.2	21.2	22.1	23.0	23.9	24.9	26.0	27.0	28.1	29.1	30.0	31.0	31.8	32.5	33.2	33.9	34.6	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1]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51	151	150	150	149	148	147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7	136	135	134
출생	0.7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0.5	0.4
사망	1.4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1.9	2.0	2.0	2.1
유소년인구 비중	8.9	8.6	8.3	8.0	7.7	7.5	7.3	7.2	7.0	6.9	6.9	6.8	6.7	6.7	6.6	6.5	6.4	6.3	6.2	6.1
생산연령인구 비중	64.1	63.2	62.3	61.5	60.8	60.1	59.3	58.3	57.3	56.3	55.3	54.3	53.4	52.5	51.7	51.1	50.6	50.1	49.6	49.1
고령인구 비중	26.9	28.3	29.4	30.5	31.5	32.4	33.4	34.5	35.7	36.8	37.9	38.9	39.9	40.8	41.6	42.3	43.0	43.6	44.2	4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2]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충청북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67	167	168	168	169	169	169	169	169	169	169	169	169	169	168	168	167	167	166	166
출생	0.9	0.9	0.9	0.9	0.9	0.9	0.9	0.8	0.8	0.8	0.8	0.7	0.7	0.7	0.7	0.7	0.7	0.7	0.7	0.7
사망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9	1.9	2.0	2.0	2.1
유소년인구 비중	9.7	9.3	9.0	8.8	8.5	8.3	8.1	7.9	7.8	7.7	7.6	7.6	7.6	7.6	7.5	7.5	7.4	7.2	7.1	7.0
생산연령인구 비중	67.7	67.0	66.4	65.9	65.4	64.8	64.1	63.3	62.5	61.6	60.7	59.9	59.1	58.3	57.7	57.2	56.7	56.3	55.9	55.4
고령인구 비중	22.6	23.6	24.6	25.3	26.1	27.0	27.8	28.8	29.8	30.7	31.7	32.5	33.3	34.1	34.8	35.4	35.9	36.4	37.0	3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3]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충청남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226	227	228	229	230	231	231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1	231	231	230	229
출생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1.0	0.9	0.9	0.9	0.9	0.9	0.9	0.9	0.9
사망	1.9	1.9	2.0	2.0	2.1	2.1	2.1	2.2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8
유소년인구 비중	10.0	9.5	9.1	8.7	8.4	8.1	7.8	7.6	7.4	7.3	7.2	7.1	7.1	7.1	7.0	7.0	6.9	6.8	6.7	6.6
생산연령인구 비중	67.4	67.0	66.6	66.3	65.9	65.4	65.0	64.3	63.6	62.8	62.0	61.2	60.4	59.6	58.9	58.4	57.9	57.4	56.9	56.3
고령인구 비중	22.6	23.5	24.3	25.0	25.7	26.5	27.2	28.1	29.0	29.9	30.8	31.7	32.5	33.3	34.0	34.6	35.2	35.8	36.4	3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4]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74	173	172	171	170	169	167	166	165	163	162	160	159	157	156	154	153	151	150	148
출생	0.8	0.8	0.8	0.8	0.8	0.7	0.7	0.7	0.6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사망	1.7	1.7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2	2.2	2.2	2.3
유소년인구 비중	9.1	8.7	8.3	7.9	7.6	7.3	7.1	6.9	6.8	6.7	6.6	6.5	6.5	6.5	6.5	6.4	6.3	6.1	6.0	5.9
생산연령인구 비중	64.5	63.8	63.2	62.7	62.1	61.4	60.7	59.8	58.8	57.7	56.7	55.6	54.6	53.6	52.7	52.0	51.4	50.8	50.2	49.6
고령인구 비중	26.4	27.6	28.5	29.4	30.3	31.3	32.3	33.3	34.5	35.6	36.7	37.8	38.9	39.9	40.9	41.6	42.4	43.1	43.8	4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5]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전라남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177	177	176	175	174	174	173	172	171	170	169	167	166	165	164	163	161	160	159	157
출생	1.0	1.0	1.0	1.0	0.9	0.9	0.9	0.8	0.8	0.8	0.7	0.7	0.7	0.7	0.7	0.6	0.6	0.6	0.6	0.6
사망	2.0	2.0	2.1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3	2.3	2.3	2.4	2.4	2.4
유소년인구 비중	9.4	9.0	8.7	8.4	8.2	7.9	7.7	7.6	7.5	7.4	7.3	7.3	7.3	7.2	7.2	7.1	6.9	6.8	6.6	6.5
생산연령인구 비중	62.6	62.0	61.4	60.9	60.3	59.7	59.0	58.1	57.2	56.3	55.4	54.5	53.7	52.9	52.2	51.7	51.3	50.9	50.4	49.9
고령인구 비중	28.1	29.0	29.9	30.7	31.5	32.4	33.3	34.3	35.3	36.3	37.3	38.2	39.1	39.9	40.6	41.2	41.8	42.3	42.9	4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6]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상북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255	254	252	251	250	248	246	245	243	241	239	237	234	232	230	228	226	223	221	219
출생	1.1	1.1	1.1	1.1	1.0	1.0	1.0	0.9	0.9	0.8	0.8	0.8	0.8	0.7	0.7	0.7	0.7	0.7	0.7	0.6
사망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3	3.3	3.4	3.4	3.5
유소년인구 비중	8.9	8.5	8.1	7.7	7.3	7.0	6.7	6.5	6.3	6.2	6.0	6.0	5.9	5.9	5.8	5.7	5.6	5.5	5.4	5.3
생산연령인구 비중	64.0	63.2	62.5	61.9	61.2	60.5	59.7	58.8	57.8	56.8	55.8	54.8	53.8	52.9	52.2	51.5	51.0	50.4	49.9	49.2
고령인구 비중	27.1	28.3	29.4	30.4	31.5	32.5	33.6	34.7	35.9	37.0	38.2	39.2	40.2	41.2	42.0	42.7	43.4	44.0	44.7	4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7]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경상남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323	322	321	319	317	315	313	311	309	306	304	301	299	296	293	291	288	285	282	279
출생	1.5	1.4	1.4	1.4	1.3	1.3	1.2	1.2	1.1	1.1	1.0	1.0	1.0	0.9	0.9	0.9	0.9	0.9	0.8	0.8
사망	2.7	2.8	2.8	2.9	2.9	3.0	3.1	3.1	3.2	3.3	3.3	3.4	3.5	3.6	3.6	3.7	3.8	3.9	4.0	4.1
유소년인구 비중	10.0	9.5	9.0	8.5	8.1	7.6	7.3	7.0	6.8	6.6	6.5	6.4	6.3	6.2	6.1	6.0	5.9	5.8	5.6	5.5
생산연령인구 비중	66.7	65.9	65.3	64.7	64.1	63.4	62.6	61.6	60.6	59.4	58.3	57.1	56.1	55.0	54.1	53.3	52.6	51.9	51.1	50.3
고령인구 비중	23.3	24.6	25.8	26.8	27.8	28.9	30.1	31.3	32.7	34.0	35.3	36.5	37.7	38.8	39.8	40.7	41.5	42.3	43.2	4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표-18]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연말)	67	66	66	66	65	65	64	64	64	63	63	62	62	61	61	61	60	60	59	59
출생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사망	0.5	0.5	0.5	0.5	0.5	0.5	0.5	0.5	0.6	0.6	0.6	0.6	0.6	0.6	0.6	0.6	0.6	0.7	0.7	0.7
유소년인구 비중	11.6	11.0	10.5	10.0	9.5	9.1	8.7	8.4	8.1	7.9	7.7	7.6	7.5	7.4	7.3	7.2	7.0	6.9	6.7	6.5
생산연령인구 비중	68.2	67.8	67.3	66.8	66.2	65.7	65.0	64.1	63.2	62.2	61.1	59.9	58.8	57.7	56.8	56.0	55.3	54.6	53.8	52.9
고령인구 비중	20.2	21.2	22.2	23.3	24.3	25.3	26.3	27.5	28.7	29.9	31.2	32.5	33.7	34.8	35.9	36.8	37.7	38.6	39.5	4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지역인구전망: 2026~2045

(NABO Regional Demographic Outlook: 2026~2045)

발간일	2026년 11월 18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더서울미디어(주) (tel 02·2274·3588)

ISSN 3140-7447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338-01
ISSN	3140-744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